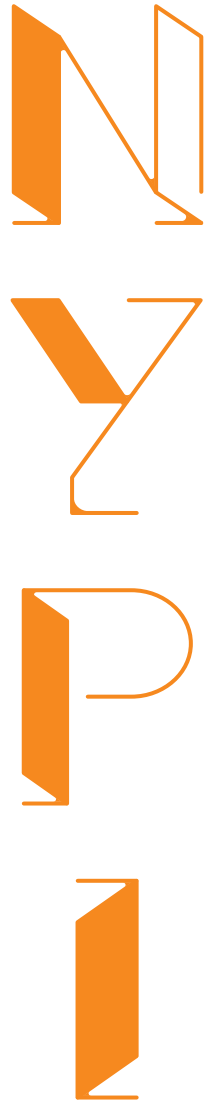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최용환

공동연구원 성윤숙 박상현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책임연구원_ 최용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박상현(서울교육정책연구소·선임연구원)

연구보조원_ 이유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국문초록

기존의 청소년통계 관리연구는 정책수립 혹은 사회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생산된 '통계목록의 취합과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물론 이들 연구는 절대적으로 승인통계가 부족한 청소년통계의 외연확장에는 크게 공헌하였지만, 증거에 기반한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관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통계 관리에 있어서 단순한 통계목록 취합이 아닌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과학화를 통해 담당 정책결정자가 증거기반의 정책수립,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통계관리체계를 도출하였다. 'Youth'로 통용되는 아동·청소년·청년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실천적인 제언도출이 어려운 만큼, 연구범위는 여성가족부와 청소년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통계 구축의 영향요인은 ① 과학적 연구증거, ② 정책담당자의 전문성, ③ 정책대상자의 특성, ④정책담당자가 소속된 조직의 의사결정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담당자, 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 청소년정책 담당자, 청소년정책 관련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가, 일선 청소년시설 담당자 등 총 6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층적 분석(AHP)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관리에 청소년통계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자료의 활용성' 증대가 가장 시급한 과제였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정책을 기획하는 '여성가족부'와 일선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청소년시설'은 '상향식 의사결정의 문화 결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통계의 낮은 적시성, 전문통계활용조직 지원의 부재 등도 주요한 문제였다.

이에 본 연구는 ① 청소년정책 담당자의 통계자료 활용능력 제고, ② 증거기반정책 강화를 위한 상향식 의사결정 토대 강화, ③ 현안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통계의 적시성 확보, ④ 행정구역 중심의 통계자료 구축 활성화, ⑤ 전문적 통계활용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 내 전담조직 신설, ⑥ 학교 밖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통계 개발 등에 대한 세부정책을 제언하였다.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지금까지 이루어진 청소년통계 관리방안 연구 또는 이와 관련된 유사연구들(김기현·김창환, 2011; 김이배, 2015; 김현철 외, 2013; 김형주 외, 2008; 박성호 외, 2016; 유진은, 2015)은 증거기반에 기초한 정책수립,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생애주기적 정책개발의 근거마련보다는 기존의 생산된 ‘통계목록의 취합’, ‘웹서비스와 같은 통계이용에 대한 물리적 관리’, ‘청소년연령에 한정된 통계 콘텐츠’, ‘개인과 학술자 중심의 통계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 물론 이와 같은 접근은 청소년통계를 외적으로 체계화하고 외연확장에는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으나 증거에 기반한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관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통계 관리에 있어서 단순한 통계목록 취합이 아닌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과학화를 통해 담당 정책결정자가 증거기반의 정책수립,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관리체계의 도출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범위

-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의 연구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대안 제시가 쉽지 않음.
- 본 연구는 연구수행기관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인 만큼 연구범위를 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청소년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최근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아동과 청년으로 정책제언을 확장함.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과 관련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문헌연구를 통해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과학적 통계근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론적으로 분석함. 그리고 이를 통해서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도 도출함.
- 설문조사 및 계층적 분석(AHP):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영향요인 및 통계 인식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함. 그리고 통계 관리에 대한 항목별 중요도를 질문하고 분석함. 구체적으로 설문조사 대상은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담당자, 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 청소년정책 담당자, 청소년정책 관련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가, 일선 청소년시설 담당자로 총 694명임.
- 심층면접조사: 아동·청소년·청년 승인통계, 행정자료, 공공조사자료, 민간조사자료의 활용 현황을 중심으로 9월 12일부터 10월 5일까지 학계 전문가 6인, 행정계 공무원 10인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실시함.

4. 주요결과

1) 선행연구 분석

-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였고 이

를 종합하면 크게 4가지 정도의 영향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통계 구축의 영향요인은 ① 과학적 연구증거, ② 정책담당자 전문성, ③ 정책대상자의 특성, ④ 정책담당자의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이며 이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1-1. 주요연구들이 제시하는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영향요인

영역	영향요인			
	과학적 연구증거	정책담당자의 전문성	정책대상자의 특성	정책담당자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
공계순·서인해(2006)	○	○		
김병배(2017)		○		
김영미·박미진(2007)	○	○		○
노법래(2015)	○		○	
박상곤(2016)	○			
박철현(2014)	○	○	○	○
신선아·조성식(2016)	○	○	○	
오철호(2015)	○	○	○	
오철호(2017)	○	○	○	
윤영근(2012)		○	○	
윤주철(2012)	○	○		
이건(2012)			○	
이윤빈 외(2015)	○		○	
정규진 외(2012)	○		○	
조정환(2013)		○	○	

2)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관련 통계관리 설문

- 조사 기간은 총 2018년 8월 6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며, 총 응답자 수는 694명이었음.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 공무원 33명, 광역시 공무원 33명,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201명, 청소년활동진흥원 50명,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53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1명, 일선 전국 청소년시설종사자 273명이 응답함. 이에 대한 기초통계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이 가장 낮은 정책추진체계는 여성가족부와 일선 청소년시설이었으며, 정책단계별로 볼 때는 정책의 기획과 집행 단계보다는 평가단계가 청소년통계와 데이터의 활용수준이 높음.
- 둘째, 현재 구축된 청소년통계자료는 상대적으로 학술적 적합성이 높음. 따라서 청소년정책 수립에서 공무원이나 일선 담당자들이 정책의 기초자료로 인식하기에는 다소 한계점이 있음. 구체적으로 청소년통계의 과학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데이터아카이브' 홈페이지는 아동·청소년패널자료, 다문화청소년패널자료와 같이 학술적 분석이 필요한 자료들을 주로 제공하고 있음.
- 셋째,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시·도 공무원과 산하기관 및 국책기관, 일선 청소년지도사들의 인식 정도를 분석해보면, 청소년통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통계의 부재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낮은 적시성임. 또한 청소년통계의 과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전문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통계관리와 활용을 위한 통계 컨트롤타워의 조직'이 시급함.
- 넷째, 최근 주목받는 인터넷과 SNS와 같은 비정형 통계의 활용성은 낮은 상태임. 그리고 현재 구축된 청소년통계 중 대상자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는 '학교 밖 청소년 중의 비위기 청소년'과 최근 주목받는 '19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후기청소년의 청년층'임.

3) 계층적 분석(AHP) 분석

- 계층적 분석(AHP) 결과는 다음과 같음.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 ‘자료의 활용성’,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 ‘정책추진체계의 조직문화’의 상대적 중요도를 보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볼 때 ‘자료의 활용성’이 0.340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정책추진체계의 조직문화’(0.315),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0.238) 그리고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0.106)임.
- 즉 청소년정책의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있어 청소년통계의 ‘자료의 활용성’ 요인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함. 또한 계층적 분석(AHP)에 따르면 일선 청소년시설이 증거기반정책의 수립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

4)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 회귀분석 결과, 청소년분야의 통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객관성 높은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 자체가 아주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 청소년 통계를 활용한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고 소수의 자료라도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여성가족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국책연구원’, ‘일선 청소년시설’ 등 정책추진체계별로 모형을 달리하여 회귀분석을 하면, 각 정책 추진체계별로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이 서로 차별적으로 나타남.
- 특히 정책추진체계별 특징을 보면 국가적 청소년정책을 기획하는 ‘여성가족

부'와 일선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청소년시설'은 상향식 의사결정의 문화
결여가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통
제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자료의 활용성' 증대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
었고, 이는 앞선 계층적 분석(AHP)의 결과와도 일치함.

5) 정책제언

-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단순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의 목록관리를 넘어 과학적이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청소년정책을 위해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관리방안을 다음의 6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제안하고자 함.

표 1-2. 본 연구의 정책제언에 대한 요약

정책방향	분석결과	세부 정책대안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 앙	광 역	기 초	국 책	산 하	시 설
1. 청소년 정책 담당자의 통계자료 활용력 제고	- 청소년통계가 정책수립보다 학술연구에 보다 적합 - 소속기관의 통계전문 인력확보가 요구됨 - 청소년 국책기관과 협력 강화 필요 - 통계활용도 측면에서 정책수립보다 행정처리 및 국회의원 요구자료로 빈번히 사용됨	1-1. 청소년정책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고유과제 성과 발표회(개방형) 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정책담당자 대상 정기통계교육	○	○	○	○	○	○
2. 증거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상향식 의사결정 토대 강화	- 여성가족부와 청소년 시설은 현재 정치적 의사결정과 전문가 자문에 의존하는 등 의견기반 정책수립 빈도가 매우 높	2-1. 정책학습동아리 구성 2-2. 여성가족부내의 정책품질관리체계	○					○

정책방향	분석결과	세부 정책대안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 앙	광 역	기 초	국 책	산 하	시 설
	음. 게다가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과 다소 거리가 멀어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토대와 문화가 부족	운영						
3. 현안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통계의 적시성 확보	- 청소년정책의 현안에 대한 정책수립을 할 수 있는 자료의 적시성이 매우 부족	3-1. (가칭) 청소년정책 전문패널				○	○	○
4. 행정구역 중심의 통계 자료 구축 활성화	- 청소년정책의 신규개발과 개선 모두에서 행정통계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파악 - 청소년관련 행정통계를 단기간에 확대하기는 어려우나 점진적 확대가 필요	4-1. 행정구역 중심으로 청소년정책평가자료 구축 및 공표 4-2. 청소년정책 성과 관리 제도화	○	○	○	○		○
5. 전문적 통계 활용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 내 전담조직 신설	- 현재 청소년정책 담당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스스로 통계를 찾고 활용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통계분석활용의 지원이 요구 - 특히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AHP)하므로 여성가족부 내부에 전문통계 활용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	5-1. (1안) 여성가족부 내의 '(가칭)전문 통계활용지원계' 설치 5-2. (2안) 여성가족부 내의 '(가칭)전문 통계활용지원 담당관' 설치	○			○		
6. 학교 밖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 청소년통계에서 조사 대상의 특성을 제일 반영하지 못한 집단이 '학교	6-1. 광역시 단위(수도권)에서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자료 구축		○		○		○

정책방향	분석결과	세부 정책대안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 앙	광 역	기 초	국 책	산 하	시 설
통계 개발	밖 비위키 청소년과 청년'인 것으로 파악	6-2.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추가사업 신설						

* 주) 중앙: 중앙부처(여성가족부), 광역: 광역자치단체, 기초: 기초자치단체, 국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산하: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산하기관, 시설: 일선 청소년시설

● 정책제언1. 청소년정책 담당자의 통계자료 활용력 증대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들이 통계자료를 활용한 청소년정책 분석결과와 객관적으로 도출된 청소년정책을 많이 접하는 것이 중요함. 그리고 실제로 통계 활용이 필요한 담당자에게는 전문연구기관이 정기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함.
- 1-1. 청소년정책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고유과제 성과 발표회(개방형)'를 제안, 그리고 여성가족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산하기관 그리고 일선 청소년지도사 등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연간 약 2회 통계교육을 하는 '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정책담당자 대상 정기통계교육'도 제언함.

● 정책제언2.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상향식 의사결정 토대강화

- 하향식 의사결정구조가 강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가 상향식 의사결정의 특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이 각각 기초자료분석을 통한 정책 근거와 정책기획안을 상호교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내부 조직운영이 적합한 대안임. 학습할 수 있는 내부 분위기를 형성하는 등 조직운영방식의 변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그림 1-1. 여성가족부 내의 정책품질관리체계 운영방안

- 이에 ‘2-1. 정책학습동아리 구성’과 ‘2-2. 여성가족부내의 정책품질관리체계 운영’을 제안함.
- 정책제언3. 현안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통계의 적시성 확보
 - 청소년통계의 낮은 적시성을 보완하는 방법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내의 ‘(가칭)청소년정책 자문패널’ 운영.

- 앞으로 청소년시설평가, 청소년관련 재정, 인력, 청소년정책인프라 등 평가 자료 및 각종 정책지표를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축하여 웹상으로 공표하고 정책개발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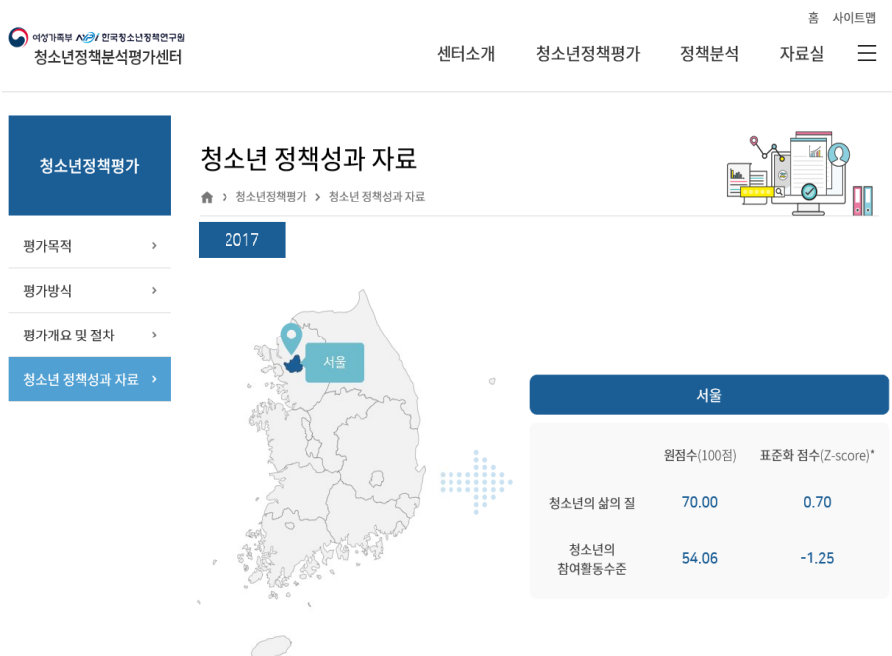


그림 1-3. 지자체 단위로 평가자료를 구축한 행정구역 통계의 사례

- 정책제언5. 전문적 통계활용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 내 전담조직 신설
 - 계층적 분석기법(AHP)결과,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정책추진체계는 여성가족부 임이 확인됨. 이에 여성가족부 조직 내부에 전문적 통계활용지원을 위한 전문조직을 신설한다면 청소년정책에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수준이 보다 향상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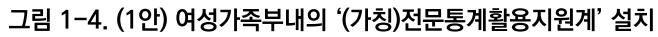


그림 1-4. (1안) 여성가족부내의 ‘(가칭)전문통계활용지원계’ 설치



그림 1-5. (2안) 여성가족부내의 ‘(가칭)전문통계활용지원담당관’ 설치

- 1안의 경우 정책과의 하위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가칭)전문통계활용지원계’ 신설을 제안하고 있지만, 그 위상을 보다 격상시킨 2안도 가능. 즉 2안은 정책관 이상의 조직에서 전문통계활용지원을 컨트롤하는 전담조직으로 차관의 스태프조직으로 두는 것임.

● 정책제언6. ‘학교 밖 비위키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통계 개발

- 학교 밖 비위키 청소년의 자료가 취약한 만큼 이들 대상으로 현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적가능한 정책대안도 제안할 수 있음(6-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추가사업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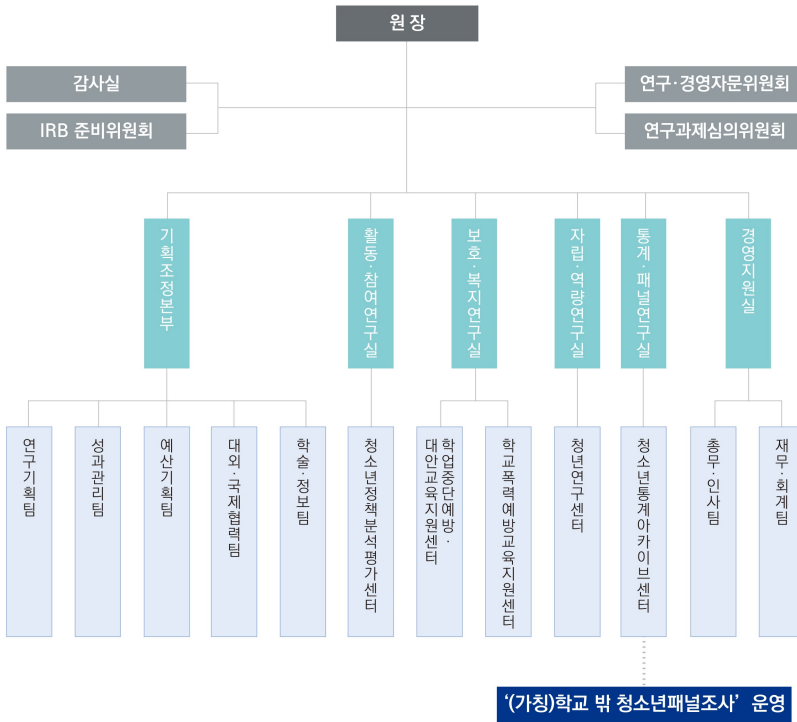


그림 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아카이브센터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

- 특히 본 사업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통계·패널연구실 통계아카이브센터에 새로운 사업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함. 현재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청소년 1인당 조사비가 10만 원임.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통계·패널연구실 통계아카이브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패널조사’라는 부가사업을 신설하여 약 1,000명 규모의 조사패널을 유지한다면 사업비는 연간 약 2억 원 정도로 예상됨.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5
- 3. 연구방법 7

제2장 아동·청소년·청년관련 통계자료의 현황과 사례

- 1. 아동·청소년·청년자료 구축에 대한 해외 현황 11
- 2. 아동·청소년·청년자료 구축에 대한 국내 현황 22
-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45

제3장 아동·청소년·청년관련 통계체계화 관련 선행연구와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필요성

- 1. 청소년관련 통계 체계화의 선행연구 50
- 2. 관련 선행연구의 한계와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중요성 54

제4장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관련

통계구축의 분석틀

1. 통계자료의 활용과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대한
선행연구 62
2.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영향요인들 67
3. 본 연구의 분석틀 70

제5장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관련

통계의 설문기초통계분석

1. 설문조사의 개요 77
2. 설문조사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78
3. 설문조사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의 소결론 99

제6장 설문자료에 대한 계층적 분석(AHP) 및 회귀분석 결과

1. 설문조사에 대한 계층적 분석(AHP)결과 104
2. 정책추진체계별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과
영향요인 간 분석 107
3. 정책추진체계별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과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113

제7장 심층면접 분석 및 결과

1. 심층면접 개요 125
2. 심층면접에 대한 분석 135

제8장 정책제언

1. 청소년정책 담당자의 통계자료 활용능력 제고 164
2.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상향식 의사결정
토대강화 167

3. 현안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통계의 적시성 확보	170
4. 행정구역 중심의 통계자료 구축 활성화	173
5. 전문적 통계활용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 내 전담조직 신설	177
6. '학교 밖 비위기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통계 개발	180
참고문헌	185

부 록

1.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 관리 체계화 방안 설문조사 설문지	195
2.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 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심층면접조사 설문지	204

표 목차

표 II-1.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청년 승인통계 현황 ..	29
표 II-2.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청년 승인통계 현황 ..	30
표 II-3. 교육부가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청년 승인통계 현황	32
표 II-4. 통계청이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청년 승인통계 현황	33
표 II-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청년 승인통계 현황	35
표 II-6. 한국교육개발원이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청년 승인통계 현황	37
표 II-7.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관련 통계 현황	39
표 II-8. 각 통계분류별 승인통계의 기술통계	40
표 II-9. 국가승인통계 중에서 청소년관련(아동·청소년·청년) 통계의 기술통계	41
표 II-10. 청소년이 포함된 승인통계의 내용적 분류	41
표 II-11. 법적근거에 따른 청소년통계(아동·청소년·청년)의 기술통계	42
표 II-12. 조사방식에 따른 청소년통계(아동·청소년·청년)의 기술통계	43
표 II-13. 작성주기에 따른 청소년통계(아동·청소년·청년)의 기술통계	43
표 II-14. 조사지역에 따른 청소년통계(아동·청소년·청년)의 기술통계	44
표 III-1. 청소년 통계관리 연구 및 유사연구에 대한 주요내용	52
표 IV-1. 주요연구들이 제시하는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영향요인	70
표 IV-2.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관련 통계구축의 분석틀	72
표 V-1.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실행 수준	78
표 V-2. 소속기관별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실행 수준	79

표 V-3. 통계 및 데이터 활용 효과에 대한 인식	80
표 V-4. 통계 및 데이터 활용의 주요 설득 대상	80
표 V-5. 자료의 인지도, 신뢰성, 시의성, 학술적합성, 정책적합성 행정자료와의 연계성	81
표 V-6. 통계생산 기관별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	82
표 V-7. 통계자료 유형별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	83
표 V-8. 과학적 객관성 제고 방안	83
표 V-9. 청소년 정책 영역별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	84
표 V-10. 응답자 개인 및 소속기관의 청소년 통계 자료의 활용도	85
표 V-11. 응답자 개인 및 소속기관의 통계 자료의 활용 빈도	85
표 V-12. 응답자 개인의 세부 자료 활용 수준	86
표 V-13. 소속기관별 자료 활용도	87
표 V-14.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자료 항목의 중요성	88
표 V-15. 목적별 청소년 통계자료의 활용도	88
표 V-16. 청소년 통계생산 기관별 자료의 활용도	89
표 V-17. 통계 활용의 방법	90
표 V-18. 정책 과정에서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인식	90
표 V-19. 소속기관별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	91
표 V-20. 자료 활용도 제고 방안	92
표 V-21. 청소년 정책영역별 자료 활용도	92
표 V-22. 청소년 환경 및 활동 등의 반영 수준	93
표 V-23. 분야별 정책대상자 특성의 반영 수준	94
표 V-24. 유관기관 간 데이터 융합 필요성	95
표 V-25. 신규 정책개발 시 데이터 결합의 필요성	96
표 V-26. 기존 정책 개선 시 데이터 결합의 필요성	96
표 V-27. 정책기획 단계에서의 자료 유형별 중요도	97
표 V-28. 정책집행 단계에서의 자료 유형별 중요도	98
표 V-29. 정책평가 단계에서의 자료 유형별 중요도	98
표 VI-1.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통계 구축의 하위요인별 계층적 분석(AHP)결과	104
표 VI-2.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정책추진체계별 계층적 분석(AHP)결과	106
표 VI-3.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도	108

표 VI-4. 정책추진체계별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영향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109
표 VI-5. 정책추진체계별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과 영향요인 간 상관관계	111
표 VI-6. 정책추진체계별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과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의 기술통계	116
표 VI-7. 정책추진체계별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과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118
표 VII-1. 심층면접 참여자 인적 특성	126
표 VII-2. 심층면접 질문지 내용	127
표 VII-3. 아동·청소년 승인통계	130
표 VII-4. 전문가집단 아동·청소년 승인통계 활용자료	131
표 VII-5. 공무원집단 아동·청소년 승인통계 활용자료	133
표 VII-6. 공무원집단 행정자료, 공공조사자료, 민간조사자료 활용현황	134
표 VIII-1. 본 연구의 정책제언에 대한 요약	162
표 VIII-2. 청소년정책 담당자의 통계자료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164
표 VIII-3.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상향식 의사결정 토대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167
표 VIII-4. 현안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통계의 적시성 확보 정책대안	170
표 VIII-5. 행정구역 중심의 통계자료 구축 활성화 정책대안	173
표 VIII-6. 전문적 통계활용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 내 전담조직 설치	177
표 VIII-7. ‘학교 밖 비위기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통계 개발	180

그림 목차

그림 II-1. OECD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복지를 위한 증거기반정책 사례	12
그림 II-2. EU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복지를 위한 증거기반정책 사례	15
그림 II-3. 영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복지를 위한 증거기반정책 사례	17
그림 II-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청년 통계 화면	23
그림 II-5. e-나라지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지표 화면 ...	25
그림 II-6.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통계 화면	27
그림 II-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 화면	35
그림 II-8.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구센터 홈페이지 화면	36
그림 II-9. 한국고용정보원의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홈페이지 화면	38
그림 III-1. Rubin(2013)의 증거기반정책의 모형	57
그림 VII-1.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저해하는 문제점에 따른 대응방안	158
그림 VIII-1 여성가족부 내의 정책품질관리체계 운영방안	169
그림 VIII-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의 ‘(가칭)청소년정책 자문패널’ 운영	172
그림 VIII-3. 지자체 단위로 평가자료를 구축한 행정구역 통계의 사례	175
그림 VIII-4. (1안) 여성가족부내의 ‘(가칭)전문통계활용지원계’ 설치	178

그림 Ⅷ-5. (2안) 여성가족부내의 ‘(가칭)전문통계활용지원담당관’ 설치	179
그림 Ⅷ-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아카이브센터 ‘학교 밖 청소년패널조사’	183

수식 목차

수식 VI-1.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과 영향요인 대한 회귀모형	115
---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 3. 연구방법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패널자료 조사가 2주기를 종료하였다. 최근 청소년통계의 트렌드를 보면, 청소년들의 개별 실태와 욕구자료보다 청소년들의 역량과 사회자본 자료가 보다 주목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서 청년으로 건강한 성장과 이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청소년정책을 평가하여 지역별 청소년정책의 책무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국정과제의 최우선으로 강조하였다(연합뉴스 2018.01.10.). 이는 청소년 역시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다면적 통계와 더불어 청소년 대상의 정책성과에 대한 통계분석이 요구된다. 이같이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수요와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Youth)과 관련된 과학적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책개발에 근간이 되는 자료의 형태와 자료의 구축도 뒤따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맞물린 저출산, 저성장 속에 주목받는 산업구조의 변화 등은 최근 급변하는 청소년정책의 환경을 대변한다. 구체적으로 출산과 양육, 직업변화, 기술혁신, 교육, 청년실업, 고령화 사회 등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며, 개발도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복합적 사회현상이다. 이는 그만큼 청소년정책도 복합적인 사회현상과 맞물려 있음을 의미한다. 무

엇보다 이 같은 사회정책환경의 변화는 처방적 정책개발, 체계적 통계자료 관리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청소년통계 관리방안 연구 또는 이와 관련된 유사연구들(김기현·김창환, 2011; 김이배, 2015; 김현철 외, 2013; 김형주 외, 2008; 박성호 외, 2016; 유진은, 2015)은 증거기반에 기초한 정책수립,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생애주기적 정책개발의 근거마련보다는 기존의 생산된 ‘통계목록의 취합’, ‘웹서비스와 같은 통계이용에 대한 물리적 관리’, ‘청소년연령에 한정된 통계 콘텐츠’, ‘개인과 학술자 중심의 통계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물론 이와 같은 접근은 청소년통계를 외적으로 체계화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크게 공헌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증거에 기반한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관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통계 관리에 있어서 단순한 통계목록 취합이 아닌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과학화를 통해 담당 정책결정자가 증거기반의 정책수립,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관리체계의 도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사회정책환경이 복합적으로 변모한 만큼 청소년통계관리의 영역을 청소년에서 아동 및 청년통계로 보다 넓은 생애주기적 정책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 관리 체계화 방안을 분석한다. 이에 본 연구의 범위와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범위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라고 하면 그 대상과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연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경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대안 제시가 쉽지 않다. 또한 세계적으로 청소년은 영문표기 'Youth'로 통용되어 아동·청소년·청년을 대부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청소년·청년 개념이 세분화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모호하다. 따라서 개념규정의 모호성을 전제하여 통계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일관된 정책제언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연구수행기관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인 만큼 연구범위는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청소년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최근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아동과 청년으로 정책제언을 확장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를 위한 현황분석,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관리 관련 이론탐색을 통한 분석틀 도출, 분석틀을 검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 그리고 정책제언이다.

첫째, 아동·청소년·청년 통계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살펴본다. 특히 국외의

경우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의 현황은 아동·청소년·청년 통계의 주요 이슈와 추세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둘째,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를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 통계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틀을 도출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통계가 국가승인통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작기 때문에 현재까지 청소년기의 통계관리 연구는 통계목록 구축의 강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통계를 활용한 정책수립 방안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사분야의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통계를 활용하여 청소년 분야의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달성하기 위한 이론적 프레임을 구축한다.

셋째,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의 이론적 틀을 이용하여 현재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활용되는 통계활용을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양적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되며, 통계를 관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여성가족부 관료, 통계를 관리하거나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유관기관 담당자 그리고 기타 활용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넷째,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통계를 비롯하여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의 관련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과학적 통계근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도 도출한다.

2) 국내·외 청소년통계 관련 현황분석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를 분석하기에 앞서 국내·외의 청소년통계 구축사례를 통해 청소년통계의 특징 및 추세 그리고 최근의 주요 이슈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EU 그리고 통계구축이 선진화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청소년통계구축의 국외 현황을 살펴본다. 국내 현황으로는 국가수준의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및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유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과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청소년통계구축 실태를 검토하고자 한다.

3) 설문조사

설문조사의 문항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개발된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의 각 영향요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행위자가 정책결정자인 관료와 자료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정책공헌자로 구별이 된다면 이들에 대하여 차별적인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 대상은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담당자, 일정 부분의 정책기획 기능을 가진 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 청소년정책 담당자 및 청소년정책 관련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가, 일선 청소년시설 종사자이다.

4) 질적 연구

본 연구의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의 과학화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개발 및 통계 활용에 개선점과 발전 방향의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양적연구로 밝히는 시사점 외에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보완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 제2장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통계자료의 현황과 사례

- 1. 아동·청소년·청년자료 구축에
대한 해외 현황
- 2. 아동·청소년·청년자료 구축에
대한 국내 현황
-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1. 아동·청소년·청년자료 구축에 대한 해외 현황

1) OECD의 청소년관련 통계자료

(1) OECD의 통계자료의 개괄

최근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는 젊은 계층의 요구와 열망을 반영한 종합적인 정책 분석틀을 개발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 실제 오늘날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들이 결국 거의 전 세계적으로 2/3 이상의 국가에서 청소년 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OECD와 EU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청소년 정책 및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참여국에 대해 보편적인 분석틀로서 OECD 복지 분석틀(Well-being framework)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여기서 청소년의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5가지 주요 복지 차원으로는 교육, 기술 및 고용, 건강, 시민 참여, 주관적 복지 수준 등이 있다.



그림 II-1. OECD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복지를 위한 증거기반정책 사례

(2) OECD 아동·청소년·청년관련 통계구축¹⁾

이러한 OECD 정책 분석틀은 크게 2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생애주기적 접근에 따라 청소년들의 욕구 수준과 현실 상황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두 번째 파트는 현장 전문가 및 정책 분석가를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경험적 증거(empirical evidence)를 사용하여 청소년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취약 청소년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위해 방법론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6가지의 모듈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모듈에서는 청소년의 다차원적 박탈(youth multi-dimensional deprivation: Y-MDI)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 모듈에서는 빈곤에 의한 불우한 청소년 프로파일을 어떻게 축적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모듈에서는 정책과 제도, 사회적 규범, 청소년 복지

1) <http://www.oecd.org/publications/evidence-based-policy-making-for-youth-well-being-9789264283923-en.htm>

사이의 상호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들을 제시하고 있다. 네 번째 모듈에서는 청소년정책 또는 사업을 통한 개입의 영향력과 비용 대비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제시하고 있다. 다섯 번째 모듈에서는 청소년 배제 및 나태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 모듈에서는 국가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소년 및 청년 등의 젊은 계층의 의견이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접근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3) OECD 통계자료의 특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관련 통계자료는 현재 각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이 실제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증거기반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통계자료로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OECD 통계자료의 경우 단순히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제시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2) EU에서 구축하고 있는 YOUTH 관련 통계²⁾

(1) EU의 통계자료의 개괄

청소년 통계는 EU의 ‘청소년 정책(EU Youth Strategy (2010-2018))’, 즉 청소년들의 활동적인 시민의식 촉진, 사회적 통합, 연대감, 교육 및 직업 기회의 보장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정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통계에는 인구학적, 맥락적 정보 이외에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인구학적 특성, 교육 훈련, 고용 및 기업가정신, 건강 및 복지, 사회적 통합, 문화와 창의성, (사회) 참여, 봉사활동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2) EU의 아동, 청소년, 청년관련 통계구축

인구학적 특성을 제외한 항목의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 훈련’에는 다양한 통계들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적 성취 수준, 성별, 연령(15세-29세) 등에 따른 비율, 교육 훈련 조기 이탈자 비율, 제2차 또는 제3차 교육수준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 최소 2개 이상의 외국어 능력을 보유한 청소년 및 청년 비율 등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 및 기업가정신’에는 주로 고용 및 실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교육수준, 성별, 연령, 출생 국가 등에 따라 고용 상태(고용, 임시직, 실업, 장기 실업 등)별 청소년 및 청년 비율이 조사되어 있다. ‘건강 및 복지’에는 조기 흡연자, BMI(Body Mass Index)지수, 자살률, 부상자 비율, (자기기입 형태의) 주관적 건강인식, 일상적 활동의 장기적 제한 등에 대해 성별, 연령, 교육수준,

2) <http://ec.europa.eu/eurostat/web/youth/data/database>

소득분위 등에 따른 비율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통합’에서는 빈곤 위험 또는 사회적 배제, 심각한 물질적 빈곤율, 근로 능력이 매우 적은 가구주, 심각한 주거 빈곤율, 과도한 주거 부담률 등을 조사하였다. ‘문화와 창의성’에는 영화, 연극, 문화 공간, 스포츠 활동 등에 대한 참여 빈도를 조사하였으며, ‘참여’에서는 친척 또는 친구 등과의 교류, 교회 등의 기타 종교 조직 활동 참여 등을 고려하였다. ‘봉사활동’에는 비공식적인 자발적 활동 참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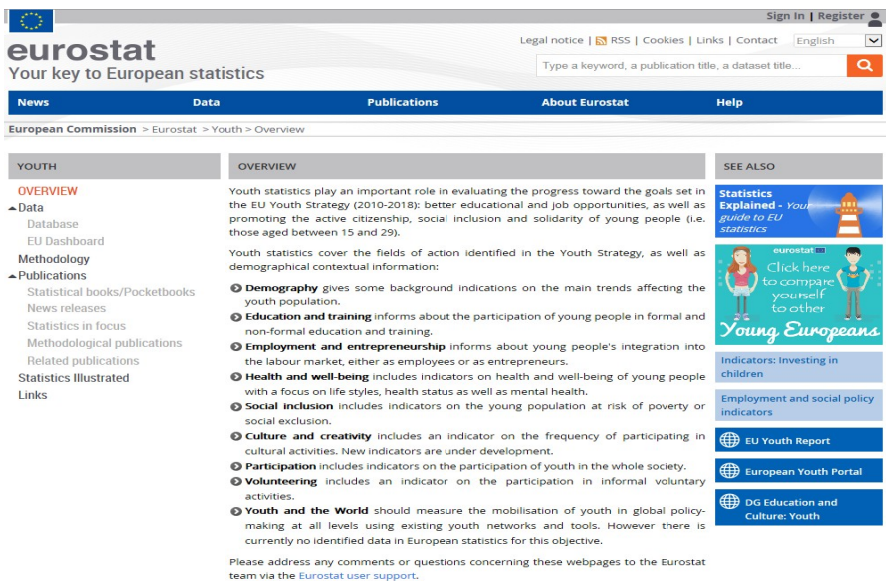


그림 II-2. EU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복지를 위한 증거기반정책 사례

(3) EU 통계자료의 특징

EU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는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EU의 ‘청소년 정책(EU Youth Strategy (2010-2018))’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EU 통계자료는 청소년들의

건강, 복지, 문화 등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관계적 측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와 '봉사활동'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참여'와 '봉사활동'은 최근 우리 교육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인성, 사회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3) 영국에서 구축하고 있는 YOUTH 관련 통계³⁾

(1) 영국의 통계자료의 개괄

영국의 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통계 자료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아동의 건강, 관계, 지역사회 및 학교 등을 포함한 복지 지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는 아래와 같다.⁴⁾ 여기에는 크게 7개의 영역에 31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7개의 영역은 개인적 복지, 관계, 건강, 복지를 위한 노력(활동 및 시간), 환경적 측면, 개인적 재정 상태, 교육 및 기술 등이다.

3)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childrens-well-being-2018>

4)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wellbeing/datasets/childrenswellbeingmeasures>

Children's Well-being: 2018

Progress against the set of well-being indicators for children in the UK including health, relationships, local area and school.

Published 26 March 2018
From: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그림 II-3. 영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복지를 위한 증거기반정책 사례

(2) 영국의 아동, 청소년, 청년관련 통계구축

위에서 언급한 7개의 영역에 31개의 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적 복지’는 전반적 만족도, 행복감,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수준, 외모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한다. ‘관계’는 부모와의 다툼 및 대화 정도, 가족 및 친구들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한다. ‘건강’은 저체중 출산 여부, 비만 포함 과체중, 건강 만족도, 장애 또는 장기 질병 여부, 정신 질환 등을 포함한다. ‘복지를 위한 노력(활동 및 시간)’은 스포츠 활동 참여, 문화예술 활동 참여, 정규수업 때의 사회적 네트워킹 웹 방문 시간, 시간 활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 등을 포함한다. ‘환경적 측면’은 범죄 피해자 정도, 야간 인근 지역 단독 보행에 대한 안정성, 지역 선호도, 주거시설 만족도, 주당 자연환경 방문 횟수 등을 포함한다. ‘개인적 재정 상태’는 가계 소득 수준, 비경제활동 가구주 비율, 재산에 대한 평가, 물질적

빈곤 가구주의 아동 비율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기술’은 의무교육 비율, 학교 만족도, (폴타임)대학생을 희망하는 비율 등을 포함한다.

(3) 영국 통계자료의 특징

영국 통계자료는 앞서 EU와 마찬가지로 ‘관계’, ‘건강’, ‘교육’ 그리고 문화 활동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개인적 복지’와 ‘개인적 재정 상태’, ‘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영국 통계자료의 경우 환경적 측면으로서 지역의 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아동·청소년, 청년의 경우 가정 요인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지역의 환경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운동 및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괄목할 만하며, 지역 환경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정책 개선을 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미국에서 구축하고 있는 YOUTH 관련 통계⁵⁾

(1) 미국의 통계자료의 개괄

미국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통계자료가 연방정부 수준과 주정부 수준으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먼저 연방정부 수준에서의 아동·청소년 통계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⁶⁾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지수 (The Child and

5) Goerge et al.(1994)를 주로 요약하고, 그 특징을 정리한 것임.

6) <http://www.soc.duke.edu/~cwi/> (2018.6.14.)검색하여 정리한 것임.

Youth Well-Being Index; CWI)’는 미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또는 복지에 대한 시간 경과에 따른 추세를 증거에 기반하여 측정한 통계자료이다. 이것은 미국 아동·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수많은 사회적 지표들이 매년 시계열적으로 조사된 정보들을 상호관련성을 고려한 몇 가지의 종합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수는 1975년과 1985년 지표의 2개의 기준년도를 비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복지의 전반적인 변화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주정부 수준의 경우 일리노이주의 통합 데이터베이스(DB)가 대표적 사례이다. 일리노이주의 아동 및 가족 서비스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는 아동 및 가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의해 수집된 행정 자료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주정부’ 수준의 종단적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 1980년대 중반 이래로 시카고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의 목적은 일리노이주의 아동서비스 시스템의 운영, 인구학적 특징들, 서비스 수혜자, 고객 집단의 요구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하고 다목적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자료는 입양자 양육, 아동 학대, 특수 교육, 정신건강, 청소년 교정,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Medicaid), 식품구매권(Food Stamps), 저소득층 소득지원 제도(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 등의 아동 및 가족에 관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2) 미국의 아동, 청소년, 청년관련 통계구축

먼저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지수(CWI)’에는 7개 영역에 2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7개의 영역에는 ‘물질적 복지’, ‘건강’, ‘안전 및 행태’, ‘생산적 활동’, ‘공동체 참여’, ‘사회적 관계’, ‘정서적 복지’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종합 지수는 이 7개 영역에 동일하게 가중치를 두고 평균한 값이다. 이러한 지수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대상 집단의 인적특성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에 포함된 지표를 설명하면, 먼저 ‘가정의 경제적 복지’에는 빈곤율, (부모의) 안정적 일자리 취업률, 연간 중위 소득, 건강보험에 가입된 아동 비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안전/위험 행동’에는 10대 출산율, (12-19세) 폭력 범죄 피해율, (12-17세) 폭력 범죄 가해자율, 흡연율, 폭음율, 불법 약물 사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관계’에는 한부모 가정 비율, 작년 한 해 이주 아동 비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서적 복지’에는 (10-19세) 자살률, 주당 종교 참여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동체 참여’에는 (18-24세) 대학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비율, (16-19세) 제도적으로 단절된 청소년 비율, (3-4세)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 어린이의 등록 비율, (25-29세) 학사 학위 소지자 비율, (18-24세) 대통령 선거 참여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적 성취’에는 독해 시험 점수, 수학 시험 점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에는 유아 사망률, 저체중 출산율, 자살률, 매우 건강한 아동 비율, 건강 문제로 활동 제약이 있는 아동 비율, 비만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일리노이주의 통합 데이터베이스(DB)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문항들이 조사되어 있다. ‘입양자 양육’에는 출생일, 성별, 인종, 국가, 법적 지위, 가족 구성, AFDC 지위, 입양 알선(이유, 유형, 탈출 이유, 시작 및 종료 시점 등), 서비스 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 학대’에는 보고일, 수사 지위, 육체적·성적 학대, 용의자, 경비원 역할, 학대 정도, 서비스 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수교육’에는 장애 수준(1차, 2차, 3차), 학교 (소속) 지구, 특수교육 수혜 서비스 내용, 학교 유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신건강 및 발달 장애’에는 관련 부서의 승인일, 주요 진단, 사전 승인, 초기 입원시설, 다른 시설로 이동한 시기의 나이, 이동일, 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 교정’에는 승인일, 승인 지역과 유형, 가해자, 가해 학급, 보호 관리 상태, 최초 체포 나이, 체포 및 유죄 선고 횟수, 교우 관계, 가족 관계, 아동 학대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및 현물을 보조하는 공적부조 프로그램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AFCD)’와 ‘식품구매권(Food Stamps)’에는 도시명, 가구 규모와 유형, 욕구 수준, 프로그램 수혜의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AFCD)’에는 신청자의 혼인관계, 교육 수준, 직업훈련 참여, 근무 경험, 최초 신청 당시의 주요 사유, 공제 및 보조 규모 등이 추가적으로 조사되어 있다.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Medicaid)’에는 진단 내용, 서비스 범주, 서비스 공급자의 유형, 완결된 절차, 서비스 일자, 청구 일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미국 통계자료의 특징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와 주정부 통계자료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중앙정부 수준의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지수(CWI)’는 여러 가지 영역을 종합한 지수로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생산적 활동으로서 ‘교육적 성취’를 중요한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학교 폭력’을 아동·청소년의 ‘안전/위험 행동’으로서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의 통계자료와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일리노이주의 통계자료는 앞서 살펴본 통계자료들과 달리 특정 지역인 일리노이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즉 조사의 지리적·공간적 범위는 다소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계자료의 내용을 보면 이전 자료들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 및 가족에 관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2. 아동·청소년·청년자료 구축에 대한 국내 현황

1) 국가 통계 포털

(1)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은 국내·국제·북한의 주요 통계를 한 곳에 모아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통계청이 제공하는 원스탑(One-Stop) 통계 서비스이다. 현재 300여 개 기관이 작성하는 경제·사회·환경에 관한 1,000여 종의 국가승인통계를 수록하고 있으며, 국제금융·경제에 관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최신 통계도 제공하고 있다(<http://kosis.kr/serviceInfo/kosisIntroduce.do>). ‘쉽게 보는 통계’의 ‘대상별 접근’에서는 ‘이슈별 접근’, ‘통계 시각화 콘텐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별 접근’에서 ‘아동·청소년 통계 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상을 ‘영유아’, ‘아동’, ‘학생’으로 구분한다. ‘영유아’ 통계는 영유아 인구현황, 영유아 보육, 영유아 사망률, 영유아 건강 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아동’ 통계는 아동복지 및 보호, 아동임양, 아동학대, 아동·청소년 인권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통계는 13세 이상 재학생의 학교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우관계, 학교시설 및 설비, 학교 주변 환경, 소질과 적성개발, 전공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와 더불어 기대하는 교육수준 및 목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생’ 통계에서는 부모의 자녀 기대 교육수준 및 목적, 자녀유학에 대한 견해 및 이유, 학교급 및 특성별 학생 1인당 사교육 참여시간 및 학교급 및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학교급에 따른 사교육비 총액,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통계자료를 포함한다. 특히 ‘중·고등학생’은 청소년

년에 대한 자료를 가장 많이 구축하고 있으며, 청소년 고민, 가출청소년, 청소년과 성, 청소년과 학교폭력, 신체활동의 통계를 제공한다.

청년에 해당하는 ‘대학생’ 항목은 대학교 재학생 수, 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통계를 제공한다. ‘이슈별 접근’에서 13세 이상 가족관계 만족도, 13세 이상 건강관리, 미성년 범죄자 및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사교육비, 아동·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청소년과 종교, 청년실업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간행물’ 메뉴의 ‘주제별’, ‘명칭별’ 통계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통계는 무엇인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청소년통계,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를 제공한다.



그림 II-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청년 통계 화면

(2) e-나라지표

‘e-나라지표’의 통계체계는 정부기관에서 엄선한 740개 지표에 대해 국가 공식 승인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현황이나 각종 행정자료들을 가공한 통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표 분류체계에 따라 대통령·국무총리 직속기관, 부, 청 등 소관 부처별 접근이 가능한 ‘부처별’ 지표와, 경제, 사회, 환경 영역별로 나눈 ‘영역별’ 지표로 구분된다.

‘부처별 통계’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통계청, 고용노동부 등에서 아동·청소년·청년관련 통계자료가 제공된다. ‘영역별 통계’는 경제, 사회, 환경으로 3개의 대분류 체계를 이루며, 중분류는 다시 성장과 안정, 문화와 여가, 범죄와 치안, 사회통합, 생태환경, 자연자원, 고용과 노동, 소득과 소비, 교육, 생활환경과 오염, 기후변화와 에너지, 인구, 가족, 건강, 주거와 교통 등 14개 영역으로 세분화된다. 이중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 지표를 살펴보면, ‘인구’영역에서 아동인구 현황,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를 제공하고 ‘가족’영역에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유형현황, 청소년상담사/지도사 현황,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현황을 제공한다. 또한 ‘건강’영역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학생 체격/체력 검사현황, 청소년 현재 흡연율, 청소년 현재 음주율을 제공한다. ‘문화와 여가’영역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이, ‘범죄와 치안’영역에서는 아동안전사고 현황, 소년사범 형사사건 처리현황을 제공한다. ‘소득과 소비’ 영역에서 학령아동 변동 추계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며, ‘교육’영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현황, 취학률 및 진학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등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과 관련한 통계는 ‘고용과 노동’영역에서 청년고용동향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한다.

국가주요지표
e-나라지표
녹색성장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e-나라지표
통합검색
청소년
검색
상세검색
로그인

연관검색어
1 비행청소년
2 청년
3 동성
4 선생님
5 여가

통합검색
지표
통계표
KOSIS통계표
보도자료
용어명
녹색성장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청소년"에 대한 검색결과 : 5,854 건
정렬방법 :
정확도
날짜순
가나다순
내용보기 :
Y
N

지표 검색 결과 (14 건)

▶ 청소년 가출실태
e-나라

* 기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o 통계생산기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o 통계자료출처 :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o 통계작성방법 : 청소년보호법 제33조 제4항에 의해 실시되는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2016년 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임 o 통계주기 : 매3년 (1999~2005), 매년(2006년부터), 격년(2012년부터)
* 출처 :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구분 : 여성가족부

▶ 1388 청소년 전화 접수현황
e-나라

* 기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o 통계생산기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o 통계자료출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통계 o 통계작성방법 : 청소년전화 1388 접수현황 집계 o 통계주기 : 매월
*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통계
* 구분 : 여성가족부

▶ 전국 청소년 상담 내용 및 대상현황
e-나라

* 기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o 통계생산기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o 통계자료출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통계 o 통계작성방법 : 연도별 전국 청소년 상담내용별 및 대상별 현황 집계 o 통계주기 : 매년 3월 ~ 4월
*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통계
* 구분 : 여성가족부

그림 II-5. e-나라지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지표 화면

(3) 공공데이터 포털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공공데이터포털의 운영)에 따라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이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과 민간의 이용 활성화를 전담 지원하는 실무 조직이며, 센터는 공공데이터 생성, 개방, 활용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공공과 민간의 접촉

점에서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의 창의적 활용을 종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https://www.data.go.kr/guide/guide/supportIntroduce.do>).

포털에서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일데이터, 오픈API, 시각화 등의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검색할 수 있다. 주요서비스는 ‘데이터셋’을 통해 파일데이터, 오픈API, 데이터시각화 검색 및 활용을 신청할 수 있다. ‘활용사례’는 국내·외 활용사례 및 관련 가공된 데이터를 공유하며, 여기에는 국내 및 국외의 교육, 공공행정, 산업고용, 사회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례와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영역에서 봉사활동정보, 어린이집 정보공개 등의 모바일앱 정보가 제공된다. ‘기업탐방 인터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인터뷰 기사를 제공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은 제공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는 접수창구를 제공한다. ‘기업지원 정책정보’는 각종 기업지원 정보 제공을 하며, ‘개발자 네트워크’는 공공데이터 관련하여 개발자간의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색서비스 창에 청소년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전체 154개의 정보가 검색되는데 이중 파일데이터 136개, 오픈API는 18개, 표준데이터는 0개로 나타났다. 파일데이터와 오픈API는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및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정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활동 및 복지시설 현황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다.

DATA

공공데이터포털

GO . KR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데이터셋

제공신청

활용사례

정보공유

청소년

연관 검색어

전화번호 | 연락처 | 시설 현황 | 단체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154)

파일데이터(136)

오픈API(18)

표준데이터(0)

전체 154건을 찾았습니다.

파일데이터 [136건]

정확도

날 짜

제 목

조회수

다운로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DB

조회수 : 2,644

다운로드수 : 9,501

수정일 : 2017.05.17

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서비스유형 : 다운로드 배송 및 기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개제지, 저자명, 발행일자, 권호정보, 페이지, 언어, 원문, 요약, 목차)

HWP

관하기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조회수 : 2,070

다운로드수 : 1,394

수정일 : 2017.10.13

기관 : 여성가족부

서비스유형 : 다운로드

청소년의 건강, 참여, 사회문화, 가정생활, 방과후 생활, 진로 및 아르바이트 등 종합적인 실태에 대한 결과표

CSV HWP

시도하기

서울특별시 관서별 청소년 범죄 현황

조회수 : 1,612

다운로드수 : 636

수정일 : 2017.04.25

기관 :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비스유형 : 다운로드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관서별 청소년 5대범죄 현황

CSV

게시판

그림 II-6.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통계 화면

2) 정부부처

(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통계전담부서인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정보화 계획을 수립 및 평가하며, 부처 내 정보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그에 따른 예산 또한 조정한다. 정보화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통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부처 내 정보자원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정보기술아키텍처와 업무포털 및 행정정보시스템,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직원 정보화 능력의 향상을 위한 업무도 수행한다. 그 밖에도 전산자원 및 정보통신망 관리·운영, 여성가족부 대표 홈페이지 기획·운영도 담당한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통계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며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http://www.mogef.go.kr/mi/osg/mi_osg_s003.do?classId).

KOSIS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통계는 1388 청소년 전화 접수현황, 전국 청소년 상담 내용 및 대상현황, 청소년 가출실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 청소년 상담사/지도사 현황,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현황, 청소년 유해매체 및 약물경험 실태,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이중에서 전국 청소년 상담 내용 및 대상현황, 1388 청소년 전화 접수현황,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청소년유해약물사용경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전국가정폭력실태 조사가 승인통계이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통계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및 신고 프로그램, 청소년 자원봉사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정보, 청소년 활동 정보서비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통계는 제공방법에 따라 보고통계와 조사통계로 나뉜다. 보고통계는 수기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시설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 분야는 보고통계가 대부분이며 승인통계가 없어 청소년 활동분야에 대한 증거기반정책이 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보고통계를 e-나라 지표나 공공데이터포털, KOSIS에 단순 제공할 뿐 보호, 복지, 활동이 통합된 증거기반에 의한 청소년정책을 시행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표 II-1.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청년 승인통계 현황

연번	통계명	작성 형태	통계 주기	작성목적
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조사 통계	3년	청소년의 현황과 상태를 실증적·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중장기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표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2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조사 통계	2년	청소년의 매체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 주변의 유해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3	청소년상담지원현황	보고 통계	1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하여 청소년 상담 및 지원경향을 파악하고 청소년정책 방향의 참고자료로 활용
4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조사 통계	3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국적 규모의 기초자료 작성 및 정책지원개선방안 마련(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
9	가정폭력실태조사	조사 통계	3년	가정폭력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가정폭력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가정폭력 방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협의통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출처: 통계청, 국내 승인통계 설명자료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통계전담부서인 정책통계담당관실을 설치하고 있다. 정책통계담당관실의 주요 업무는 ‘보건복지 부문의 통계 개발·개선 및 통계발전계획의 수립’을 중심으로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다. 또한 통계품질진단과 통계기반정책관리에 관한 사항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 관련 예산을 사전검토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며 뿐만 아니라 보건계정 및 복지 관련 사회계정 통계에 관한 사항과 국제기구에 대한 통계협력

및 요구통계의 제공 및 관리를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백서 및 통계연보의 발간과 기타 보건복지 관련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http://www.mohw.go.kr/react/sg/ssg0201ls.jsp?>).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청소년관련 통계는 1년 주기로 작성되고 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 및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의 수당 등 주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리고 청소년 흡연율, 음주율과 같이 청소년분야는 건강과 보건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현재 흡연율, 청소년 현재 음주율을 비롯한 국내 입양아 수 및 입양 비율, 아동 안전사고 현황, 아동 인구 현황, 아동급식지원 현황,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아동수 현황, 요보호아동현황 등의 통계를 제공한다.

표 II-2.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청년 승인통계 현황

연번	통계명	작성 형태	작성 주기	작성목적
1	전국예방접종률 현황	보고 통계	1년	어린이 예방접종 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 예방접종률을 분석하여,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등 국가 예방접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조사 통계	1년	우리나라 청소년(중·고등학생)의 건강행태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국제비교를 위한 청소년 보건지표 제공 및 관련분야의 기초 연구자료 제공
3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	보고 통계	1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한 학대아동보호현황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4	요보호아동현황 보고	보고 통계	1년	요보호아동 현황을 파악하여 예산 및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5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보고 통계	1년	어린이집 현황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6	가정위탁 국내입양소년 소녀가정 현황	보고 통계	1년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 현황, 입양현황, 소년소녀가정현황을 파악하여 예산 및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연번	통계명	작성 형태	작성 주기	작성목적
7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종사자현황보고	보고 통계	1년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8	보육실태조사	조사 통계	3년	영유아 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실태, 이용에 따 른 만족도, 요구도 파악 및 보육시설 운영의 전반적 현황 파악을 통한 보육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수요자 와 공급자의 보육실태 기초자료 생산
9	아동종합실태 조사	조사 통계	5년	아동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한 아동정책 개발에 활용, 실증적 자료에 입각한 중장기 아동정책의 비전과 목표 개발 및 수요자 중심의 사업 수립 도모

*출처: 통계청, 국내 승인통계 설명자료

(3) 교육부

교육부도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와 마찬가지로 통계관련 부서로 교육통계과를 설치하고 운영 중이다. 교육부의 교육통계과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그리고 평생교육분야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유초중등정보공시, EDS, 고등교육통계, 대학정보공시, 고등교육통계조사 등을 통하여 교육통계 관련 법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OECD 교육지표와 같이 국제기준에 맞는 교육통계를 구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http://www.moe.go.kr/user/detail.do?deptCD=1342211&m=0604>). 구체적으로 진로교육현황조사, 초·중·고사교육비조사, 특수교육실태조사, 학생건강검사통계보고에 대한 승인통계를 구축하고 있다.

표 II-3. 교육부가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청년 승인통계 현황

연번	통계명	작성 형태	작성 주기	작성목적
1	진로교육현황조사	조사 통계	1년	학교 진로교육 운영 관련 현황과 성취 수준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진로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근거법률]진로교육법제6조(2015.5.29.국회 본회의통과, 이후구체적인시행령및시행규칙마련중임)
2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조사 통계	1년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사교육비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공신력 있는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 제공 사교육실태, 원인, 사교육비경감대책의효과를병행하여분석
3	특수교육실태조사	조사 통계	3년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특수교육교원의 수급 계획 등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4	학생건강검사통계 보고	보고 통계	1년	학생들의 건강검사를 실시, 분석하여 학생건강 지표 생성 및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출처: 통계청, 국내 승인통계 설명자료

(4) 통계청

우리나라의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으로 2018년 1월 현재 본청(1관·5국·1정책관, 4담당관·34과·1팀·1단)과, 소속기관(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지방통계청, 사무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통계는 통계법의 대상이 되는 통계로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이며,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에 국가통계작성기관 및 그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통계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통계의 신뢰성 및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국가통계개발 발전에 기여한다(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o/4/1/index.static).

통계청이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청년통계는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학생과 관련된 학교생활 만족도, 청소년 가치관, 대학생 등록금 마련방법 등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한다.

표 II-4. 통계청이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청년 승인통계 현황

연번	통계명	작성 형태	작성 주기	작성목적
1	지역별고용조사	조사 통계	6개월	지역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생산제공
2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 통계	매월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3	일자리행정통계	가공 통계	1년	(일자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성·연령별, 근속기간별, 기업체규모별, 산업분류별로 일자리통계를 제공하기 위함 (일자리)이를 통해 일자리 정책수립 및 취업준비자의 일자리 선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공공부문)각국간 공공지출 규모비교, 공공부문 일자리추세분석이 가능하고, 공공부문 개혁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4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조사 통계	1년	-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부족한 노동력의 국외유입으로 이들의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현황 파악 - 체류외국인 및 귀화자실태파악을 통해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구축

연번	통계명	작성 형태	작성 주기	작성목적
5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조사 통계	1년	•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사교육비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공신력 있는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 제공 • 사교육실태, 원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효과를 병행하여 분석
6	신혼부부통계	가공 통계	1년	• 저출산 및 고령화 등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혼부부에 대한 결혼, 출산·보육, 경제활동 및 주거실태 등을 파악하여 정책맞춤형 통계정보 제공

*출처: 통계청, 국내 승인통계 설명자료

3) 국책연구기관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관련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생산한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대내·외 활용도 제고를 위해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NYPI Youth and Children Data Archive)’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패널조사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예비조사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청소년통계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2018년 기존의 통계기초연구실을 통계·패널연구실로 개편하고 부설기구로서 청소년통계아카이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II-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 화면

표 II-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청년 승인통계 현황

연번	작성기관	통계명	통계 종류	작성 형태	작성 주기	통계 분야	승인일자
1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일반 통계	조사	1년	사회	2017-07-25
2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일반 통계	조사	1년	사회	2013-04-18
3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일반 통계	조사	1년	사회	2009-06-24
4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일반 통계	조사	1년	사회	2010-09-30

*출처: 통계청, 국내 승인통계 설명자료

(2)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유치등통계, 대학통계, 취업통계, 평생통계, 국제통계, 시계열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각 통계는 학교급별, 주제별, 시도별로 통계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교육통계연구센터는 교육통계연보, OECD 교육지표, 건강보험 및 국제DB연계 취업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그림 II-8.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구센터 홈페이지 화면

표 II-6. 한국교육개발원이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청년 승인통계 현황

연번	통계명	작성 형태	작성 주기	작성목적
1	교육기본통계	보고 통계	6개월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시행·평가·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2	국가영재교육 통계	조사 통계	1년	- 영재교육 관련 교육정책 및 기초연구의 자료 제공 - 영재교육 현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공식통계 제공 - 대국민정보제공을 통한 다양한 정보수요 충족
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취업 통계조사	가공 통계	1년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진학 등 진로현황 분석을 통해 대학 재학, 졸업생의 진로지도 및 - 청년층 취업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조사 및 DB구축, 자료집발간 등을 통하여 교육정책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제공
4	한국교육종단 조사(패널)	조사 통계	2년	- 학교 교육에 관한 종단적 교육 자료를 수집하여 교육정책 효과의 실증적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 종단적 학교교육 자료의 보급을 통한 관련연구 지원하고 교육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출처: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홈페이지(<http://KOSIS.kr/metadata/>)

(3) 한국고용정보원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정보 분석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동정책연구 및 단기실태조사, 청년패널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등의 통계업무를 진행해오고 있다.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에서는 고용률, 실업률, 취업지수, 적용사업장, 피보험자수, 신규구직건수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9. 한국고용정보원의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홈페이지 화면

표 II-7.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관련 통계 현황

연번	통계명	작성 형태	작성 주기	작성목적
1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보고 통계	매월	공공고용안정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구인 및 구직현황과 취업실적을 산출하여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현황과 노동시장분석을 위한 기초통계 인프라를 축적·제공
2	청년패널조사	조사 통계	1년	청년층의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과정 및 노동시장 진입 후 이동경로 단계별 정보제공, 장기 추적조사를 통한 청년층 노동력 수급 불균형과 고실업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통계 구축 및 청년고용촉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3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	조사 통계	1년	대학졸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업이동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교육-노동시장간 신뢰성 있는 인력수급정보 제공 및 인력수급불일치 완화 도모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4	고용보험통계	보고 통계	매월	고용보험사업 시행에 의해 축적된 행정DB를 이용하여 고용보험사업의 사업성과 모니터링과 노동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출처: 통계청, 국내 승인통계 설명자료

4) 승인통계로 살펴본 청소년 통계

지금까지 통계청을 중심으로 국가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와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 및 유관부처 그리고 청소년 관련 기타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청소년통계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통계자료 현황 파악에 있어 통계의 작성기관도 중요하지만 통계관리의 체계상 승인통계의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다음에서는 승인통계의 분류에 따라 청소년통계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각 통계분류별 승인통계의 기술통계

표 II-8. 각 통계분류별 승인통계의 기술통계

	빈도(건)	비율(%)
교육 분야	16	1.48
보건 분야	47	4.33
복지 분야	48	4.42
사회 분야	175	16.13
고용 분야	43	3.96
기타 분야	756	69.68
합계	1085	100.00

*출처: 통계청, 국내 승인통계 설명자료

먼저 <표 II-8>를 보면 통계청에서 분류하는 국내승인통계는 약 1,085건이다. 이러한 승인통계 중에서도 청소년 통계와 관련된 분야는 교육분야, 보건분야, 복지분야, 사회분야, 고용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가계소비(소득)·건설·경기·과학·광공업·교통·국민계정·국제수지·외환·금융·기업경영·농림·도소매·무역·문화·물가·보건·서비스·수산·시도기본통계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 국내승인통계 1,085건 중에서 기타분야를 제외하고 사회분야가 175건(전체 16.13%)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복지분야 48건(전체 4.42%), 보건분야는 47건(전체 4.3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분야는 16건(전체 1.48%)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최근 화두인 고용분야 통계는 43건(전체 3.96%)으로 나타났다.

(2) 국가승인통계 중에서 청소년관련(아동·청소년·청년) 통계의 기술통계

표 II-9. 국가승인통계 중에서 청소년관련(아동·청소년·청년) 통계의 기술통계

	빈도(건)	비율(%)
청소년이 포함된 통계(교육, 고용 포함)	314	28.94
청소년이 비포함된 통계	771	71.06
합계	1085	100.00

*출처: 통계청, 국내 승인통계 설명자료

〈표 II-9〉는 국가승인통계 중에서 청소년의 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전체 국가승인통계 1,085건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은 통계가 771건으로 전체의 71.06%를 차지하였으며, 청소년이 포함된 통계는 314건으로 전체의 28.94%였다. 그러나 청소년이 포함된 국가승인통계는 교육과 고용분야에서 청소년기의 인구를 조사한 것이어서 청소년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국가승인통계는 더욱 적다.

(3) 청소년이 포함된 승인통계의 내용적 분류

표 II-10. 청소년이 포함된 승인통계의 내용적 분류

	빈도(건)	비율(%)
기본통계 중에서 포함된 청소년 통계 (아동·청소년·청년)	297	94.59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한 통계(아동·청소년)	17	5.41
합계	314	100.00

*출처: 통계청, 국내 승인통계 설명자료

실제로 <표 II-10>은 청소년이 조사대상으로 포함된 통계 중에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한 통계와 그렇지 않은 통계의 비율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을 주요대상으로 조사한 국가승인통계는 17건으로 청소년을 조사대상에 포함한 통계 314건 중에서 5.41%에 불과하다.

(4) 법적근거에 따른 청소년통계(아동·청소년·청년)의 기술통계

표 II-11. 법적근거에 따른 청소년통계(아동·청소년·청년)의 기술통계

	빈도(건)	비율(%)
법적 근거 청소년 승인통계	54	17.20
비 법적 근거 청소년 승인통계	260	82.80
합계	314	100.00

*출처: 통계청, 국내 승인통계 설명자료

다음의 <표 II-11>은 청소년 관련 통계의 법적 근거 여부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관련 통계 314건 중에서 법적근거 통계는 54건(전체 17.29%)이며 비 법적근거 통계는 260건(전체 82.20%)이다. 이를 보면 청소년 관련 국가승인통계의 대부분은 법적근거 통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5) 조사방식에 따른 청소년통계(아동·청소년·청년)의 기술통계

표 II-12. 조사방식에 따른 청소년통계(아동·청소년·청년)의 기술통계

	빈도(건)	비율(%)
직접조사 방식의 청소년통계	270	85.99
위탁(용역포함)방식의 청소년통계	44	14.01
합계	314	100.00

*출처: 통계청, 국내 승인통계 설명자료

한편 청소년이 조사대상으로 포함된 국가승인통계의 조사방식 현황은 <표 II-12>와 같다. 이를 보면 정부기관이 공문을 통하여 직접조사하는 방식의 직접조사가 270건으로 전체 대비 85.99%이며, 위탁이나 용역을 통한 조사방식이 44건으로 전체 대비 14.01%이다. 즉 청소년이 조사대상인 국가승인통계의 대부분은 정부기관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6) 작성주기에 따른 청소년통계(아동·청소년·청년)의 기술통계

표 II-13. 작성주기에 따른 청소년통계(아동·청소년·청년)의 기술통계

	빈도(건)	비율(%)
1년	283	90.13
2년	10	3.18
3년	12	3.82
5년	1	0.32
반기(6개월)	3	0.96
월	5	1.59
합계	314	100.00

*출처: 통계청, 국내 승인통계 설명자료

〈표 II-13〉는 조사 작성주기에 따른 청소년 관련 승인통계에 대한 기술통계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년 단위 조사가 전체 90.1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조사지역에 따른 청소년통계(아동·청소년·청년)의 기술통계

표 II-14. 조사지역에 따른 청소년통계(아동·청소년·청년)의 기술통계

	빈도(건)	비율(%)
전국	56	17.83
시도	23	7.33
동읍면	4	1.27
시군구	231	73.57
합계	314	100.00

*출처: 통계청, 국내 승인통계 설명자료

마지막으로 〈표 II-14〉는 청소년이 조사대상인 국가승인통계의 조사지역별 분류를 나타낸다. 전체 314건의 청소년 조사대상 국가 승인통계 중에서 시군구 통계가 231건으로 전체 73.58%를 차지하며, 전국 통계는 56건으로 전체의 17.83%이다.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지금까지 논의한 국내 현황을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 해외 기관들은 국내 기관들에 비해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핵심적인 목적이 ‘정책’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을 분석 및 평가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 거의 대부분 조사대상자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만 집중하거나, 혹은 미시적인 수준에서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패널자료의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조사 항목에 있어서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제도적·정책적 요인, 결과 요인 등)들이 누락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정책 평가 및 기획을 위한 증거자료로서 활용되기 어렵다. 이에 반해 OECD와 EU, 미국(특히, 일리노이주) 등의 통계자료는 ‘청소년 정책’ 또는 ‘저소득층 관련 복지정책’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변수들을 조사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예컨대, 미국 일리노이주의 통합데이터베이스에는 ‘청소년교정’,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AFDC)’, ‘식품구매권(Food Medicaid)’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과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정책이외에 환경적인 측면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청소년은 그들이 속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환경적 조건에 의해 생활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정책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을 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환경적 측면의 변수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에는 중앙 수준에서의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이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아동·청소년

의 교육 및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환경과 공동체 참여 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는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교육자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적 차이에 따른 아동·청소년 복지 수준에 있어서 격차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향후 지역 환경 및 공동체 참여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의 개선에 중요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이처럼 수집된 통계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료를 실제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 관련 부서 담당자, 정책분석가 등이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구축 기관이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자료 공급자는 수요자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단순히 데이터 자체에 대한 소개와 자료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OECD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료 이용자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실질적·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주체인 담당 기관 및 담당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통계자료 구축에 소용된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 — 제3장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통계체계화 관련 선행연구와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필요성

- 1. 청소년관련 통계 체계화의
선행연구
- 2. 관련 선행연구의 한계와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중요성

아동·청소년·청년관련 통계체계화 관련 선행연구와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필요성

지금까지 아동·청소년·청년관련 통계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아동·청소년·청년관련 통계 체계화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를 알아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의 경우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이 영문표기 'Youth'로 통칭이 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연령이 아동 및 청년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연령에 대한 개념규정 자체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김기현·김창환(2011)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소년 관련 통계가 국가승인통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아 선행연구는 아동·청소년·청년관련 통계체계화보다 청소년 대상의 통계를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수행기관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인 만큼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청소년통계를 중심으로 관리대상을 분석하되 연구시사점을 아동과 청년으로 확장하여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후술할 아동·청소년·청년관련 통계체계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기존에 이루어진 청소년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어서 아동·청소년·청년관련 통계체계화에 대한 선행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도출하고 보다 체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한다.

1. 청소년관련 통계 체계화의 선행연구

먼저 청소년통계구축과 체계화를 제안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형주 외(2008)은 실증적 자료에 기초한 청소년정책의 질적 제고를 위해 기존의 청소년 통계조사들과 신규통계 수요분석을 기초로 체계적인 청소년 통계 체제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청소년종합통계 시스템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프라(Infrastructure)구축, 그리고 이를 담당할 조직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청소년통계 포털서비스(Portal Service)구축을 위한 설계방향과 모델도 정립하였다. 더불어 통계시스템은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영역을 기초로 하여 10개 대영역과 18개 중영역으로 구분하고 그 형태는 IT 기반으로 체계화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둘째, 김기현·김창환(2011)은 전체 국가승인통계 중에서 청소년관련 통계는 0.3%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통계관리시스템에 따른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자료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들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통계를 생산·관리하고 국가기초통계를 위탁 관리하는 ‘한국아동청소년데이터아카이브’도 제안하였다.

셋째, 김현철 외(2013)은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제고’를 제안하였으며 청소년정책의 과학적 수립과 추진의 선결조건으로 청소년통계조사의 종합적 수집과 행정통계의 수집을 제안하였다. 특히 교육청이나 교육 분야의 경우 행정통계와 통계체계는 중앙 및 지방에서도 체계적으로 구축이 된 반면 청소년정책 관련 통계는 그렇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청소년통계 체계화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한편 청소년통계 체계화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연구도 있다. 그것은 교육통계 혹은 사회보장통계의 체계화를 위해 수행한 연구들이다.

대표적으로 유진은(2015)는 우리나라의 교육통계를 기본통계, 초중등과 고등교육 그리고 사교육 및 평생교육 등으로 5대 영역으로 범주화하고 유네스코의

UIS 교육통계와 범주화, 분류체계 그리고 방법론적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교육승인통계의 발전과제를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교육통계는 UIS 교육통계의 분류체계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국제통계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발전해왔다고 평가하였으며, 사교육과 평생교육 통계는 우리나라만이 고유하게 발굴한 콘텐츠라고 하였다. 그리고 유진은(2015)는 앞으로 교육통계의 발전방향이 산출방법, 추정치 수정, 결측처리 등 통계적 방법론의 문서화와 이용자의 접근성과 같이 학술적 활용의 개선에 보다 중점적 제언을 하였다.

다음으로 박성호 외(2016)은 고등평생교육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고 고등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 기관의 통계 개선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델파이 조사 그리고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박성호 외(2016)은 고등교육평생지표를 제언하고 이를 조사할 수 있는 통계체계 제언과 대학 개별DB와 연계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이배(2015)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부터 일반성인과 노인을 포함한 사회보장통계 구축 관련 재정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통계구축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이배(2015)는 사회보장통계와 사회복지통계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통계와 지역사회지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지역사회보장통계와 관련한 계획수립, 사회보장통계위원회 활성화, 개방적 자료공유, 소집단 및 소지역의 통계관리 등을 제언하였다. 더 나아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의 영역변화와 지역의 차별적 통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도 지적하였다.

표 Ⅲ-1. 청소년 통계관리 연구 및 유사연구에 대한 주요내용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김형주 외 (2008)	청소년발달지표를 기초로 기존의 청소년 통계에 대한 체계화 방안과 새로운 통계수요 분석	청소년통계항목분석 사례분석 인터뷰 분석	· 청소년 통계현황 및 개선방안 도출 · 청소년 통계구축을 위한 체계화 모델 설계 · 향후 추진과제의 우선순위 및 소요예산에 대한 추정 · 청소년 통계체계의 효과적 운동을 위한 정책제언
김기현· 김창환 (2011)	각 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자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래의 아동·청소년 분야의 종합통계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 국가승인통계를 중심으로 작성기관, 조사주기, 조사유형, 조사방법 등의 문헌분석 · ‘보고통계와 조사통계’ 그리고 ‘횡단조사와 종단조사’로 구분하여 문헌분석 · 아동청소년 통계자료(아동·청소년중 합실태조사, 청소년가치관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를 대상으로 가중치, 정확성, 신뢰성, 측정오차 등을 분석 전문가 자문,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청소년통계의 영역체계 대하여 ① 인구 및 가족, ② 교육 및 역량, ③ 건강 및 심리, ④ 보호 및 안전, ⑤ 활동 및 문화, ⑥ 복지 및 권리, ⑦ 비행 및 범죄, ⑧ 진로 및 직업, ⑨ 정책 및 인프라 등으로 할 것을 제안 · 청소년 통계시스템 구축방안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OLAP) 시스템에 기반한 데이터 구성과 이용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정보가공서비스를 제안
김현철 외 (2013)	청소년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의 재정립과 청소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 특히 이 과정에서 청소년통계조사의	· 문헌조사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및 요구조사, 학부모 심층면접 · 전문가 의견조사 · 사례조사	· 청소년정책의 체계적 정립을 위하여 통계자료 구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 제고를 제안 ·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청소년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통계자료 수집과 반복적인 종합자료구축을 제안.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종합적 수집과 행정통계의 수집을 제안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행정통계 구축 필요성도 제시
유진은 (2015)	유네스코의 UIS 교육통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교육승인통계의 발전과제를 모색	문헌조사	우리나라의 교육통계를 기본통계, 초·중등과 고등교육 그리고 사교육 및 평생교육 등 5대 영역으로 범주화하고 유네스코의 UIS 교육통계와 범주화, 분류체계 그리고 방법론적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교육승인통계의 발전과제를 모색
박성호 외 (2016)	고등평생교육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고 고등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 기관의 통계 개선을 연구	문헌연구 델파이 조사 타당성 분석	고등교육 평생지표를 제언하고 이를 조사할 수 있는 통계체계 제언과 대학 개별DB와 연계를 강조
김이배 (2015)	영유아, 아동, 청소년부터 일반성인과 노인을 포함한 사회보장통계 구축의 재정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통계구축을 위한 제언	문헌연구	사회보장통계와 사회복지통계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통계와 지역사회지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지역사회보장통계와 관련한 계획수립, 사회보장통계위원회 활성화, 개방적 자료공유, 소집단 및 소지역의 통계관리 등을 제언함.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과 따른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영역변화와 지역의 차별적 통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도 지적

2. 관련 선행연구의 한계와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중요성

지금까지 청소년통계의 체계화 방안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서 통계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이들 주요 연구들이 갖는 의의와 한계점을 알아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통계의 체계화의 통계체계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체계적 통계에 근거하여 수립한 정책과 그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1) 관련 선행연구와 통계관리의 과제

전술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통계의 수집과 체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통계의 생산, 행정통계의 구축방안에 이론적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관련 선행연구들은 청소년통계 관리대상을 ‘통계 콘텐츠 목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통계를 활용한 정책개발’이라는 통계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누락되어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관련 발간된 통계의 수집과 웹을 통한 통계보급 등 통계관리의 외적 체계에 대한 제언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소년관련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과학화를 위한 통계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둘째, 청소년통계의 관리가 증거기반의 정책개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정책수요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통계의 사용자를 일반인과 학술자 중심으로 분석하여 청소년정책을 형성하는 정책결정자의 선호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통계관리의 대상을 청소년에 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급변하는 사회정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계관리대상을 아동, 청소년,

청년 그리고 성인 및 노년 인구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2) 기존연구의 한계점과 통계를 활용한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관련 승인통계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소년관련 통계 체계화 연구들은 통계목록의 취합과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이 사실이며 이들 연구들(김기현·김창환, 2011; 김현철 외, 2013; 김형주 외, 2008)은 청소년관련 통계데이터의 확충과 목록의 체계화에 큰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통계관리 체계에서는 통계목록의 정교화와 체계적 수집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통계활용의 활용성이 더욱 강조된다(Rubin, 2013; 나민주 외, 2014; 오병돈·김기현, 2013).

한편 통계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방안은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연구에서 주로 이루어진 논의이다. 증거기반정책의 추이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 정책은 의료분야의 증거기반의학(EBM: evidence-based medicine)에서 파생된 것으로 현재는 보건, 복지, 간호학, 범죄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에서 널리 주목받고 있다(김영미·박미진, 2007). 이러한 추세는 정책분야에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정책학에서 증거기반정책이 대두된 것은 정책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영국에서는 1999년에 ‘정부의 현대화(Modernizing Government: Prime Minister and the Minister for Cabinet Office)’백서를 시작으로 대학과 연구소, 감사원이 이와 같은 노력을 시도하였다(이석민, 2012). 그리고 미국의 증거기반정책은 낮은 비용으로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한 연방재정 프로그램평가로부터 비롯하였다(Frey and Widmer, 2011). 또한 최근 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정책과정에 실증적 지식과 과학적 접근은 정책기획, 집행, 성과 그리고 평가까지 그 중요성을 더해왔다(Dunn, 2015).

증거기반정책의 개념규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윤광석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정책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상의 증거’를 강조한 Davies(1999)나 충분한 정보생산 담론과 방법론에 초점을 둔 Sutcliffe and Court(2005)의 정의, 그리고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인식론적 기준의 수용’을 지적한 La Caze(2006)이나 ‘직관, 전통, 정치, 현존관행’과의 차별화를 중시하는 O'Dwyer(2004)의 정의 등 다양한 학술적 개념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종합·분석한 후, 정책의 과정적 확증성을 증시한 나름의 정의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증거기반정책이란 정책의 기반이 되는 자료 또는 데이터의 명확성이 담보되고, 방법론의 강화를 통해 제시된 증거의 확증성이 재검증될 수 있는 과학적 정책이다. 이처럼 다양한 개념적 정의가 있지만 결국 증거기반정책이란 객관적 사실성과 수용성이 담보된 증거에 기초하여 구성되고 설계된 정책으로 간략히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의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증거’에 대한 구체적 개념규정 그리고 다양한 증거의 체계적 분류 등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증거기반정책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와 과학적 접근에 따른 근거와 함께 정책담당자의 전문성과 정책대상자의 특성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Rubin(2013)에 따르면 증거기반정책은 ‘정책담당자의 전문성(Practitioner's Expertise)’, ‘과학적 연구증거(Best Research Evidence)’, ‘정책대상자의 특성(Client Attributes)’이 통합된 기반상태에서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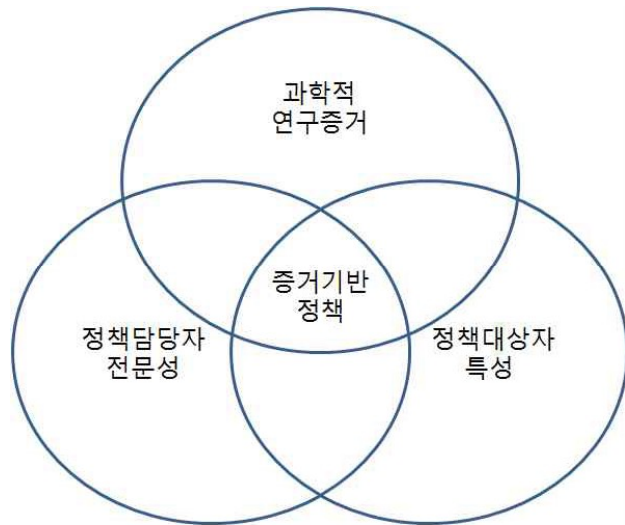


그림 III-1. Rubin(2013)의 증거기반정책의 모형

그리고 이와 같은 최근의 추세는 청소년학 분야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병돈·김기현(2013)은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한 증거기반정책의 출발로서 청소년복지정책의 대상 규모를 추정하였다. 특히 통계를 활용하여 청소년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파악, 추이 변화 그리고 관련한 정책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증거기반정책의 근간으로 보았다. 그리고 김병배(2017)은 최근 10년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법정책방향의 화두가 증거기반정책임을 지적하면서 소년사범의 재범률 감소를 위한 증거기반정책의 한국적 적용을 연구하였다. 특히 그는 미국의 범죄사법연구소가 제시한 8가지 증거기반 원칙의 국내적용 현황을 평가하고, 이를 위한 정책실무부서의 문화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나민주 외(2014)는 지방교육의 통계관리와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통계목록과 수집관리를 넘어 지방교육 담당자들의 통계 관련 인력관리, 재정운영,

정책수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통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나아가 담당자들의 통계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청소년통계가 승인통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근소하여 2000년 이후로 청소년통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통계목록 체계화와 자료구축시스템 연구에 초점을 맞춰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유사분야인 교육통계 활용연구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청소년통계 관리 연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축된 통계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자료가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와 같은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객관적 통계수립의 궁극적 목적은 정책대상자들 위한 효과성 높은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이 같은 관점은 앞으로 청소년관련 통계자료 수집 체계화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 제4장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관련 통계구축의 분석틀

- 1. 통계자료의 활용과 증거기반
정책 수립에 대한 선행연구
- 2.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영향요인들
- 3. 본 연구의 분석틀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관련 통계구축의 분석틀

지금까지 아동·청소년·청년관련 통계구축 연구와 이에 대한 유사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선행연구가 갖는 이론적 공헌과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 통계가 국가승인통계에서 아주 소수의 비중을 차지하여 청소년 통계의 목록수집과 통계수집 강화가 2000년 이후 주요 관심사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 연구가 청소년 통계의 양적 확대에 큰 공헌을 하였지만 최근 이슈가 되는 실제 증거기반정책으로의 적용에는 크게 취약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청년관련 통계체계화를 정책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통계를 통한 증거기반정책의 강화연구는 일부 소년 보호정책(김병배, 2017; 박철현, 2014)와 사회복지실천 영역(공계순·서인해, 2006; 김영미·박미진, 2007)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4장에서는 통계자료의 활용과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아동·청소년·청년관련 통계의 체계화를 위한 이론적 분석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1. 통계자료의 활용과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대한 선행연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거기반정책과 통계자료에 대한 연구는 사회과학, 복지학, 복지 및 보건, 범죄학 그리고 정책학 분야에서 널리 진행되었다. 먼저 정책학 분야의 연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오철호(2015)는 문헌연구와 기존연구를 중심으로 증거기반정책 결정의 설명모형을 탐색하였다. 특히 오철호(2015)는 증거기반정책의 영향요인을 5가지 관점으로 유형화하였는데, 확증적 진실과 객관적 기술을 지향하는 ‘합리성 관점’, 고객을 옹호하는 ‘조직의 이익관점’, 사회적 참여자 간의 구성물이라는 ‘두 문화 관점’, 활용에 대한 제도조건을 밝히는 ‘신제도로론 관점’, 활용자의 인지구조와 활동에 관련한 ‘인지심리학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오철호(2017)은 증거기반정책의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 정부의 데이터와 정책분석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에 오철호(2017)은 자료의 지나친 계량화와 엄밀성은 증거기반정책의 활용성을 저해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평가결과를 증거기반정책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데이터 기반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장치마련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윤영근(2012)는 2005년에 도입된 정책품질관리제도가 실패한 원인을 ‘정책증거의 유형’ 및 ‘제도’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영향요인을 문헌연구로 알아보았다. 특히 그는 정책품질관리제도가 실패하였음에도 공무원들의 정보관리시스템과 정책증거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추후에 증거기반정책의 공고화를 위한 연구대상은 정부업무평가와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이진(2012)는 민주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증거기반정책의 근간이 일반국민과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라고 파악하고, 서베이 조사 방법이 증거기반정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와 그 한계점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에 이진

(2012)는 정책수혜대상자의 특성이 국민들의 여론수렴과정과 의견조사과정에 충분히 드러나는 장점도 있지만, 서베이 조사를 통한 증거가 정책에 부합하는 결과를 산출하는 조사로 이용될 수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우리나라의 정책 근거로서의 정책수혜대상자 조사는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객관적 증거를 마련하기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효과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목적으로 주로 이용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증거기반정책이 바람직하게 수립되기 위해서는 정책수혜 대상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일반 국민의 주관적 선호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의 통계적 계량화가 더욱 더 중요한 정책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이진, 2012).

나아가 윤주철(2012)는 증거기반의 정책결정에서 가장 취약한 정부의 조직개편을 과학적 증거의 활용과 수집의 측면에서 조직진단 관계를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된 정부 조직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가 조직개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조직개편 대상으로는 과학적 증거가 정책결정에 미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지 못하였으나 과학적 근거를 탐색하는데 있어서 선결조건과 장애요인을 정리하였다. 특히 윤주철(2012)는 이 연구를 통하여 증거기반정책에 있어 과학적 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를 활용하는 체계임을 확인하였다.

정책학 분야를 살펴보면 통계를 통한 증거기반정책 수립연구는 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도 주요한 이슈임을 알 수 있다. 신선아·조성식(2016)은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증거기반정책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 및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관련 정책관리를 지원하는 K2Base를 설문지법과 표적집단면접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특히 이들은 증거기반정책의 평가대상으로 K2Base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였으며, 이들의 분석기준을 내용(Content), 서비스(Services), 활용성(Usability),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특색(Features), 보안성/프라이버시(Security/Privacy)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증거기반정책을 지원하기 위

한 정보시스템은 귀납적으로 배우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직관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적시에 적합한 정보 그리고 심층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지속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윤빈 외(2015)는 정부의 R&D 예산과정에 있어 증거기반자료 활용을 분석하였으며, 예산의 조정배분과정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 자료에 기반하여 얼마나 정교한 의사결정이 진행되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윤빈 외(2015)는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해 단순한 사업단위의 자료가 아닌 예측 및 기획, 평가가 진행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요구되며, 또 이와 같은 자료들은 관련 정책의 이익집단이나 정책수혜자들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선결 조건임을 밝혔다.

정책학 분야 외에 사회복지영역에서도 증거기반정책 수립과 통계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공계순·서인해(2006)은 1980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추진된 사회복지정책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증거기반정책의 실천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계순·서인해(2006)은 증거기반정책을 위하여 실무자들의 조사연구 참여 및 사회복지정책 실천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많아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사회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집행전략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가장 주요한 원동력은 실무자들의 구체적인 학습이며, 실무자들로 구성된 학습조직을 통하여 실천학습(action learning)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계순·서인해(2006)은 증거기반정책의 수립에 대한 인센티브로 증거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우선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김영미·박미진(2007)은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총 278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기술통계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김영미·박미진(2007)은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직 환경이며,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담당 사회복지사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객관적 자료의 축적을 제언하였다. 특히 이들이 증거기반정책 수립 강화의 영향요인으로 지적인 조직문화는 정책의 전문성 이외에 의사결정의 방향성도 포함한다. 실무자가 속한 조직 내의 권위주의적 문화가 강할수록 증거기반정책을 위한 객관적 자료의 축적과 활용도는 더욱 낮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형사정책분야와 청소년분야에서 증거기반정책 수립과 통계의 중요성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박철현(2014)는 형사정책 영역에서 증거기반정책의 발전과정을 문헌연구를 통해서 고찰하고, 증거기반정책의 해외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증거기반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그는 1997년 영국의 경제 위기로 인하여 효과성 있는 정책만을 지원한다는 기조아래 형사정책 영역에서 증거기반정책이 강조되어왔으며, 정책 효과성의 근거로 과학적 근거가 강조된 것이 증거기반정책의 확장 계기로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영국의 사례는 미국과 캐나다로 확산되었으며, 결국 박철현(2014)은 증거기반정책이 효율적인 정부정책을 구축하려는 움직임과 기조에 많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박철현(2014)의 연구는 증거기반정책의 의사결정 특징도 제시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의견기반정책은 고위 정책결정권자들의 의견을 기초하여 하향식으로 의사결정이라는 특징이 있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실무자의 의견과 외부의 객관적 증거가 정책에 반영되거나 환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증거기반정책은 경험적 연구결과에 의존하고 학문공동체에 의해 증거의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향식 의사결정에 적합하며 정책효과가 의심되거나 정책효과가 없는 정책은 사전에 배제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병배(2017)는 미국사례 중심의 문헌분석을 통하여 소년사법 분야에서 증거기반정책의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소년 보호관찰제도의 증거기반정책 수립과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특히 그는 소년 사법정책 분야에서

미국의 사례를 구현할 수 있는 전담지원조직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라고 하면서, 증거기반정책 수립은 정책실무부서와 과학적 자료에 대한 전문 학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책기관의 협조를 통해 견고해질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다음으로 노법래(2015)는 빅데이터(Big Data)와 지리정보시스템(GIS)이 청소년들의 자살과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수요분석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연구하였으며, 청소년의 정신건강 자료는 2013년의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를 사용하였고 청소년 자살률(14세부터 19세)은 2,050여개 시군구의 행정자료 중에서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을 자살로 정의하였다. 대규모 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의 분석결과,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개입이 필요한 고위험군이 지역적 군집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노법래(2015)는 대규모 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과 같은 과학적 자료와 분석결과가 정책결정에 효과가 근거를 제시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측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거기반정책 수립연구가 있다. 정규진 외(2012)는 시스템다이나믹스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시된 정책수요를 인구주택총조사의 연도별 마이크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값과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증거기반정책 수요모형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규진 외(2012)는 시스템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 모델이 연도별 실제 통계와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증거기반정책의 과학적 정보들이 정책의 설계와 집행 그리고 평가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상곤(2016)은 국내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증거기반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증거기반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아니면 단순한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나 ‘상징적 의미’의 정책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박상곤(2016)은 관광수요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하여 국민의 해외 관광수요와 국내 관광수요가

보완적 관계를 보이고 있어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해외 관광을 국내 관광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정환(2013)은 체육 스포츠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일반적인 사회과학의 증거기반정책 개념과 방법론을 분석하고 진실검과 준 실험에서 증거기반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계량방법론으로 Rubin의 인과모형, 경향 점수 적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그는 교육정책영역에서의 증거기반정책 활용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교육 분야의 증거기반 의사결정과정은 실천적 영역의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교육적 개입 등 활용 가능한 최상의 증거들이 보다 엄격히 적용된다고 하였다.

2.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영향요인들

지금까지 통계 활용과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그렇다면 본 2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특히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통계를 체계화하기 위한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없으므로 이들의 논의를 정리하면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통계체계화연구의 분석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오철호(2015)는 증거기반정책의 영향요인을 설명하는 5가지 유형(① 합리성 관점, ② 조직이익 관점, ③ 두 문화 관점, ④ 신제도론 관점, ⑤ 인지심리학 관점)을 제시하였는데, 실제로 ‘두 문화 관점’과 ‘신제도론적 관점’은 정책결정자와 전문가 집단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증거기반정책의 영향요인은 객관적 증거, 정책결정자의 정책 활용 그리고 조직이익 관점의 고객지향성과 관련된 정책대상자 특성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오철호(2017)은 증거기반정책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요인으로 합리적 행위자 관점의 데이터의 양과 타당

성, 자료의 활용 측면에서 정책담당자와 전문가의 의사소통, 정책수혜대상의 측면에서 증거기반자료가 관료조직의 정책적 이익에 타당한지 여부로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조정환(2013)은 증거기반정책에 필요한 것은 과학적이고 객관적 지식, 정책이해당사자와 여론 등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박철현(2014)은 증거기반정책이 소수의 의견에 기반하는 의견기반정책과 달리 상향식 의사결정의 속성이 있어, 정책대상자의 정치적 이니셔티브가 필수적이며 이와 같은 정책결정방식은 정책담당자의 저항과 전통을 무너뜨리는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신선아·조성식(2016)은 K2Base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증거기반정책을 분석하였으며, 그 세부기준으로 내용(Content), 서비스(Services), 활용성(Usability),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특색(Features), 보안성/프라이버시(Security/Privacy)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K2Base가 정보시스템임을 감안하면, 실제 증거기반정책의 구성요소는 서비스(Services), 보안성/프라이버시(Security/Privacy)를 제외한 자료의 내용, 활용성, 정책대상자인 시민참여와 특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윤주철(2012)은 증거기반정책 구현의 핵심요인은 단순한 자료와 근거가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정책담당자라고 하였다. 즉 자료를 통하여 제공되는 아이디어와 외부전문가가 자료를 활용한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로 담당 공무원이므로 이들 담당 공무원이 증거기반자료를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 조직체계가 증거기반정책 과정의 필수조건이다.

공계순·서인해(2006)는 사회복지 분야의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데이터구축, 증거기반정책 적용에 대한 실무자의 체계적인 교육 등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이윤빈 외(2015)는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필수조건은 객관적 자료와 정책수혜대상자와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예산과정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보면, 상향식 의사결정은 특정한 정보비대칭성에 따라 정책 이익집단과 편익 수혜집단이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윤빈 외(2015)는 자료의

객관화를 통한 증거기반정책의 적용이 정책의 이익을 다수의 정책수혜자인 국민에게 분산될 수 있게 하며, 의사결정 시 주요행위자의 전략을 배제한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박상곤(2016)은 관광 수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경험적 연구가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핵심임을 밝혔다.

한편 김영미·박미진(2007)은 사회복지정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주요한 영향요인은 객관적 자료의 축적과 이를 사용하는 실무담당자의 조직문화 그리고 교육과 훈련 등의 전문성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김병배(2017)는 증거기반정책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는 객관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전담 조직이 확산할 수 있는 정책연구체계와 증거기반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실무중심의 전담조직 설치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윤영근(2012)는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증거기반정책의 영향요인으로 담당 공무원의 정책학습조직과 부서 구성원의 참여 그리고 정책수혜대상자인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책만족도를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이진(2012)은 증거기반정책의 기반으로서 다른 요인보다도 정책수혜대상자인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을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노법래(2015)는 행정자료와 대규모 자료가 융합된 빅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의 정보가 청소년들의 정책수요를 제시하고, 이들의 인과관계 분석이 정책효과성을 담보하는 청소년보호정책 수립에 결정적 근거가 됨을 확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규진 외(2012)는 Rubin의 증거기반정책 모형을 활용하여 과학적 연구근거가 바로 정책 근거로 활용됨을 입증하여, 증거기반정책의 핵심은 과학적 근거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규진 외(2012)는 과학적 근거가 청소년의 교육과 노령인구의 경우 정책수요자가 삶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여 증거기반정책의 수립을 위한 두 가지 축이 과학적 근거와 정책수요자의 특성임을 확인하였다.

3. 본 연구의 분석틀

앞의 2절은 주요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크게 4가지 정도의 영향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IV-1. 주요연구들이 제시하는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영향요인

영역	영향요인			
	과학적 연구 증거	정책담당자의 전문성	정책대상자의 특성	정책담당자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
공계순·서인해(2006)	○	○		
김병배(2017)		○		
김영미·박미진(2007)	○	○		○
노법래(2015)	○		○	
박상곤(2016)	○			
박철현(2014)	○	○	○	○
신선아·조성식(2016)	○	○	○	
오철호(2015)	○	○	○	
오철호(2017)	○	○	○	
윤영근(2012)		○	○	
윤주철(2012)	○	○		
이건(2012)			○	
이윤빈 외(2015)	○		○	
정규진 외(2012)	○		○	
조정환(2013)		○	○	

첫째, 수집된 통계자료를 통한 과학적 연구증거이다. 주요 선행연구들(공계순·

서인해, 2006; 신선아·조성식, 2016; 정규진 외, 2012; 김영미·박미진, 2007; 노법래, 2015; 박상곤, 2016; 박철현, 2014; 오철호, 2015; 오철호, 2017; 윤주철, 2012; 이윤빈 외, 2015)은 공통적으로 증거기반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과학적 증거를 활용하는 정책담당자의 전문성이다. 이를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핵심이라고 언급한 연구들(공계순·서인해, 2006; 신선아·조성식, 2016; 김병배, 2017; 김영미·박미진, 2007; 박철현, 2014; 오철호, 2015; 오철호, 2017; 윤영근, 2012; 윤주철, 2012; 조정환, 2013)은 공통적으로 수집된 자료보다도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 입안에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자들이 객관적 통계자료 혹은 과학적으로 도출된 근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거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증거기반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 수혜 대상자의 특성이 반영되거나 혹은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관련 선행연구들(노법래, 2015; 박철현, 2014; 신선아·조성식, 2016; 오철호, 2015; 오철호, 2017; 윤영근, 2012; 이진, 2012; 이윤빈 외, 2015; 정규진 외, 2012; 조정환 외, 2013)이 증거기반정책 수립에서 정책대상자 특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증거기반정책의 효과성이 결국 정책수요자들의 만족과 깊은 관련을 가지며, 객관적 증거는 대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 이익보다는 정책수혜자 대다수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연구(김영미·박미진, 2007; 박철현, 2014)는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있어서 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담당하는 관료가 속한 조직의 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한다. 이들이 증거기반정책의 수립에서 조직 내 의사결정 방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의견기반정책의 경우 소수의 고위정책 결정들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기 쉬운 반면에 증거를 통한 객관적 정책수립은 기존의 조직이 갖는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에 반하는 상향식 의사결정에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다.

표 IV-2.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관련 통계구축의 분석틀

영역	관련 개념 연구
과학적 연구증거	공계순·서인해(2006) 김영미·박미진(2007) 노법래(2015) 박상곤(2016) 박철현(2014) 신선아·조성식(2016) 오철호(2015) 오철호(2017) 윤주철(2012) 이윤빈 외(2015) 정규진 외(2012)
정책담당자 전문성	공계순·서인해(2006) 김병배(2017) 김영미·박미진(2007) 박철현(2014) 신선아·조성식(2016) 오철호(2015) 오철호(2017) 윤영근(2012) 윤주철(2012) 조정환(2013)
정책대상자의 특성	노법래(2015) 박철현(2014) 신선아·조성식(2016) 오철호(2015) 오철호(2017) 윤영근(2012) 이건(2012) 이윤빈 외(2015) 정규진 외(2012) 조정환 외(2013)
정책담당자의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	김영미·박미진(2007) 박철현(2014)

결국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필수요소는 자료를 활용한 과학적 근거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담당자(관료 혹은 관련 전문가)의 전문성, 정책대상자의 특성이 중요하며 이는 기존의 증거기반정책의 이론적 모형이 제시한 Rubin(2013)의 주장과 일치하는 바이다. 그리고 최근에 증거기반정책을 위한 정부통계 구축과 활용을 연구한 오세영 외(2018)의 연구의 기본틀과 같다. 단, 본 연구의 선행연구의 정리를 볼 때, 정책담당자의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이 상향식인지 하향식인지도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표 IV-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통계구축을 ① 과학적 연구증거, ② 정책담당자 전문성, ③ 정책대상자의 특성, ④ 정책담당자의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제5장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관련 통계의 설문기초통계분석

- 1. 설문조사의 개요
- 2. 설문조사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 3. 설문조사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의 소결론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관련 통계의 설문기초통계분석

1. 설문조사의 개요

본 연구는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관련 담당자’, ‘광역시·도별 청소년정책 관련 담당자’, ‘기초자치단체별 청소년정책 관련 담당자’,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관련 산하기관 및 청소년정책관련 국책연구기관’, ‘전국 청소년시설에 재직 중인 청소년지도사’로 하였다.

표집방법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한 임의집계구 표집방식이며 온라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청소년정책의 증거기반정책 활용 수준’, ‘증거기반정책의 하위요인(자료의 과학적 객관성, 자료의 활용성,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 정책추진체계의 조직문화)별 인식수준’, ‘6차 청소년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통계자료유형 및 통계자료구축기관별 특징’과 ‘증거기반정책의 역할 그리고 중요도(AHP)’, ‘복합자료의 활용’, ‘자료의 설득대상과 체감이용 실태’, ‘통계처리를 위한 인적특성’ 등이다.

조사 기간은 총 2018년 8월 6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며, 총 응답자는 694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 공무원 33명, 광역시 공무원 33명,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201명, 청소년활동진흥원 50명,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53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1명, 일선 전국 청소년시설종사자 273명이 응답하였다.

2. 설문조사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1) 청소년 통계자료 활용의 결과

(1)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실행도

각 정책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 구축과 활용을 통해 증거기반 정책의 수립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 ‘정책평가’ 단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실행 수준

	표본	평균	표준편차
정책 기획	694	3.27	0.98
정책 집행	694	3.26	0.91
정책 평가	694	3.31	0.95
유효수(목록별)	694		

보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소속에 따라 활용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 V-2>를 보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청소년활동진흥원이 통계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일선 청소년 시설과 여성가족부는 평균이 3.00미만으로,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직까지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이러한 정책을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청소년시설에서는 통계 및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2. 소속기관별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실행 수준

소속	표본	평균	표준편차
여성가족부	33	2.82	0.83
광역자치단체	33	3.58	0.69
기초자치단체	201	3.47	0.69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50	3.68	0.77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53	3.34	0.7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1	3.95	0.65
일선 청소년시설	273	2.95	0.84

(2) 통계 및 데이터 활용의 효과

각 정책 단계에서 응답자들은 통계 및 데이터의 활용이 정책과정 중에서 정책 내용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근거기반 정책수립이 정책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정책에 대해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3.76으로 높았으며, 행정 전반의 효율성 향상은 3.64로 앞서 정책집행 측면의 활용도와 마찬가지로 효과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 통계 및 데이터 활용 효과에 대한 인식

	표본	평균	표준편차
정책(계획, 사업 및 프로그램 포함)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득	694	3.76	0.76
정책(계획, 사업 및 프로그램 포함) 내용의 타당성 강화	694	3.91	0.75
행정 전반의 효율성 향상	694	3.64	0.78
유효수(목록별)	694		

다음으로 아래 <표 V-4>의 통계 및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설득대상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무엇보다 정책 대상인 이해관계자가 40.1%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조직 내부의 결재권자가 36.3%로 정책추진에 있어서 내부 논의과정에서도 설득 및 합의 도출을 위한 근거로써 통계 및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V-4. 통계 및 데이터 활용의 주요 설득 대상

	빈도	퍼센트
정책 대상인 이해관계자	278	40.1
내부 결재권자	252	36.3
국회의원 등 입법권자	136	19.6
감사기관 및 사법부	15	2.2
기타	13	1.9
합계	694	100.0

2) 자료의 과학성

위와 같은 근거기반 정책수립에 대한 효과성은 그 통계 및 데이터의 과학성과 활용성, 정책대상자들의 특성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자료의 과학성’은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료의 인지도, 신뢰성, 시의성, 학술적합성, 정책적합성, 행정자료와의 연계성 등의 차이에 대한 인식에 따라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

분석 결과, 청소년통계 및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과 학술연구 적합성이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자료의 인지도와 행정자료와의 연계성은 3.16과 3.08로 낮았다. 이는 현재 생산된 청소년통계 및 데이터가 학술연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인식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5. 자료의 인지도, 신뢰성, 시의성, 학술적합성, 정책적합성 행정자료와의 연계성

	표본	평균	표준편차
현재 생산된 청소년 통계 및 데이터는 인지도가 매우 높다	694	3.16	0.84
현재 생산된 청소년 통계 및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다.	694	3.49	0.76
현재 생산된 청소년 통계 및 데이터는 시의 적절성이 높다.	694	3.26	0.80
현재 생산된 청소년 통계 및 데이터는 학술연구에 적합하다	694	3.41	0.76
현재 생산된 청소년 통계 및 데이터는 정책(사업 및 프로그램 포함) 추진에 적합하다	694	3.32	0.84
현재 생산된 청소년 통계 및 데이터는 행정자료와 잘 연계되어 있다.	694	3.08	0.84
유효 수(목록별)	694		

다음으로 응답자의 소속기관별로 과학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각각 3.41과 3.40으로 타 기관에 비해 청소년통계 및 데이터의 과학성에 대해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다.

표 V-6. 통계생산 기관별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

	표본	평균	표준편차
통계청(국가통계포털,e-나라지표)	694	3.60	0.75
주무부처(여성가족부)	694	2.65	0.9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94	3.65	0.7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694	3.50	0.76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94	3.37	0.79
광역시·도의 직접조사	694	3.19	0.77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직접조사	694	3.17	0.87
일선 청소년시설의 직접조사	694	3.07	0.92
유효 수(목록별)	694		

이러한 자료의 객관성은 통계 생산기관 이외에 통계자료의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아래 <표 V-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자료 유형 중에서 설문조사나 실태조사 등과 같은 ‘조사통계’유형이 3.53으로 가장 객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문가 의견’은 2.93으로 타 유형에 비해 상당히 낮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수립 시 소수의 전문가 의견에 의존하는 것은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에 대한 의심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주의해야 함을 시사한다.

표 V-7. 통계자료 유형별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

	표본	평균	표준편차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	694	3.47	0.71
조사 통계(설문조사, 실태조사 등)	694	3.53	0.67
가공 통계(기존 통계 정보를 활용)	694	3.43	0.74
논문	694	3.16	0.75
용역연구보고서	694	3.20	0.78
전문가 의견	694	2.93	0.84
인터넷, SNS 등의 비정형 데이터	694	3.15	0.88
유효 수 (목록별)	694		

그렇다면 청소년통계의 과학적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에 대해 아래의 <표 V-8>을 보면, 응답자들은 무엇보다도 ‘정책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 이외에 내부적인 방안으로서 ‘소속기관의 (통계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 과학적 객관성 제고 방안

	표본	평균	표준편차
소속 기관의 예산 확보	694	4.14	0.79
소속기관의 전문인력 확보	694	4.29	0.70
조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	694	4.17	0.69
정책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694	4.36	0.68

	표본	평균	표준편차
조사목적의 명확성	694	4.23	0.70
유효 수 (목록별)	694		

다음으로 아래 <표 V-9>의 청소년 정책영역별로 과학적 객관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면, ‘청소년 활동’이 가장 높다. 이에 반해 ‘청년(후기청소년) 관련 정책’은 3.10으로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V-9. 청소년 정책 영역별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

	표본	평균	표준편차
청소년 참여	694	3.34	0.85
청소년 권리	694	3.29	0.83
청소년 활동	694	3.45	0.86
청소년 자립	694	3.17	0.85
청소년 보호지원	694	3.37	0.85
청소년 추진체계	694	3.30	0.85
청년(후기청소년)관련 정책	694	3.10	0.93
유효 수 (목록별)	694		

3) 자료의 활용성

정책수립 시 근거에 기반하는 정도는 통계자료의 과학성에 대한 인식 이외에 해당 부서 및 담당자들의 자료 활용의 수준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

아래의 <표 V-10>를 보면, 응답자 개인 및 소속 기관의 자료 활용도는 각각 3.38과 3.41로 평균적인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실제 <표 V-11>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자료 활용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거의 50% 정도에 가깝다.

표 V-10. 응답자 개인 및 소속기관의 청소년 통계 자료의 활용도

	표본	평균	표준편차
나는 업무에 청소년 통계를 잘 활용하는 편이다	694	3.38	0.84
내가 속한 기관은 업무에 청소년 통계를 잘 활용하는 편이다	694	3.41	0.87
유효 수(목록별)	694		

표 V-11. 응답자 개인 및 소속기관의 통계 자료의 활용 빈도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 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는 업무에 청소년 통계를 잘 활용하는 편이다	8 (1.2%)	101 (14.6%)	245 (35.3%)	300 (43.2%)	40 (5.8%)	694 (100%)
내가 속한 기관은 업무에 청소년 통계를 잘 활용하는 편이다.	13 (1.9%)	86 (12.4%)	256 (36.9%)	284 (40.9%)	55 (7.9%)	694 (100%)

위에서는 자료 활용에 대한 개인 및 기관 차원의 전반적인 활용수준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들은 청소년통계 중에서 ‘조사 통계(설문조사, 실태조사 등)’을 가장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인터넷, SNS 등의 비정형데이터’의 활용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공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자료에 대한 과학성 및 신뢰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V-12. 응답자 개인의 세부 자료 활용 수준

	표본	평균	표준편차
나는 청소년 관련 통계체계와 통계에 대한 일반적 현황을 잘 아는 편이다	694	2.95	0.95
나는 청소년 관련 통계 및 데이터의 세부 내용에 대해 잘 아는 편이다	694	2.89	0.97
나는 청소년통계 중에서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 정보를 자주 사용한다	694	3.11	0.89
나는 청소년통계 중에서 조사 통계(설문조사, 실태조사 등)를 자주 사용한다	694	3.13	0.96
나는 청소년통계 중에서 가공 통계(기존 통계 정보를 활용)를 자주 사용한다	694	2.97	0.96
나는 청소년통계 중에서 논문이나 연구용역보고서를 자주 사용한다	694	2.91	0.93
나는 청소년통계 중에서 전문가 의견을 자주 사용한다	694	3.01	0.95
나는 청소년통계 중에서 인터넷, SNS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자주 사용한다	694	2.69	0.97
유효 수 (목록별)	694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소속에 따라 전반적인 통계자료 활용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 V-13>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관은 ‘보통(3점)’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시설은 2.98과 2.63으로 통계자료의 활용수준이 낮다. 근거기반 정책을 위해서는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주무부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결정 기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시설의 자료 활용수준이 낮은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표 V-13. 소속기관별 자료 활용도

소속	표본	평균	표준편차
여성가족부	33	2.98	0.62
광역시	33	3.05	0.52
기초	201	3.17	0.56
청소년활동진흥원	50	3.31	0.56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53	3.18	0.7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1	3.24	0.64
청소년시설	273	2.63	0.63

이처럼 소속기관 차원에서 자료 활용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 통계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자료의 편의성, 접근성, 충실성, 다양성, 용이성, 적시성 등 자료의 내용적 측면과 과정적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무엇보다 ‘자료 제공의 적시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자료 자체의 내용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정책과정에서 응답자들이 정책(또는 사업,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시점에 관련된 자료를 즉시 제공받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통계 및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요 기관들은 정책 관련 기관 및 담당자와의 협력을 통해 ‘자료제공의 적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V-14.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자료 항목의 중요성

	표본	평균	표준편차
자료의 편의성	694	4.08	0.67
자료의 접근성	694	4.10	0.70
자료의 충실성	694	4.12	0.73
자료 목록의 다양성	694	4.24	0.73
자료 취합과 병합의 용이성	694	4.07	0.74
자료제공의 적시성	694	4.51	0.67
유효수 (목록별)	694		

그렇다면 청소년 통계자료를 현재 어떤 목적에 따라 활용하고 있을까?

현재는 ‘내부 일반 행정처리’와 ‘국회의원의 요구자료 제출’이 3.45와 3.41로 다른 목적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는 2.9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5. 목적별 청소년 통계자료의 활용도

	표본	평균	표준편차
내부 일반 행정처리	694	3.45	0.97
정책수립의 근거자료	694	2.95	1.22
국회의원의 요구자료 제출	694	3.41	1.09
부처 간의 협업	694	3.07	0.90
언론과 이슈 대응	694	3.20	0.91
기타	694	3.06	0.85
유효 수(목록별)	694		

다음으로 ‘통계생산 기관에 따른 자료활용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 <표 V-16>과 같다. 다양한 통계생산 기관 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3.6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접 자료 수합’도 3.50으로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2.8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6. 청소년 통계생산 기관별 자료의 활용도

	표본	평균	표준편차
통계청(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694	3.26	0.83
주무부처(여성가족부)	694	2.88	1.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94	3.61	0.8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694	3.36	0.8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94	3.05	0.86
직접 자료 수합	694	3.50	0.94
기타	694	3.04	0.82
유효 수(목록별)	694		

그리고 자료의 활용도는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서나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아래 <표 V-17>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는 담당자 스스로가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매우 높으며,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은 상당히 낮다.

표 V-17. 통계 활용의 방법

	표본	평균	표준편차
우리 기관은 담당자 스스로가 청소년 통계 및 데이터를 찾아서 활용한다	694	3.63	0.77
우리기관의 통계전담 부서는 청소년 통계 및 데이터 탐색을 지원한다	694	3.07	1.04
우리기관은 청소년관련 유관기관으로부터 청소년 통계 및 데이터 분석에 관한 지원을 받는다	694	2.83	0.99
유효 수 (목록별)	694		

위와 같은 방법상의 차이 이외에 기관의 성격, 특히 조직문화에 따라 자료의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조직이 소속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객관적 근거에 의존할 경우 통계자료의 활용이 증가한다. 반대로 조직에서 의사결정이 소수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거나,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정책과정에서 활용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러나 아래의 <표 V-18>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응답자들은 정책이 전문가 자문에 의해 결정되거나 정치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는 통계를 대신한 전문가의견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청소년정책의 근거기반 정책 수립이 취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V-18. 정책 과정에서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인식

	표본	평균	표준편차
우리 기관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694	3.02	0.98
우리 기관에서 담당하는 정책은 청소년 통계 및 데이터와 같은 계량적 근거에 의하여 결정되는 비율이 높다	694	3.02	0.91
우리 기관에서 담당하는 정책 내용은 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비율이 낮다	694	2.32	0.84

	표본	평균	표준편차
우리 기관에서 담당하는 정책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비율이 낮다	694	2.39	0.95
우리 기관의 조직문화는 민주적이다	694	3.12	1.01
우리 기관의 조직 내 의사결정방식은 민주적이다	694	3.13	1.01
유효 수(목록별)	694		

다음은 응답자의 소속에 따른 조직의 의사결정방식의 전반적 수준을 살펴보았다. 아래의 <표 V-19>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기관의 평균이 높지 않다. 그 중에서도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시설은 2.53과 2.57로 매우 낮다. 앞선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하향식 조직의사결정의 성향이 강한 기관이 통계자료의 활용성이 낮아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과 기관의 통계활용도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19. 소속기관별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

소속	표본	평균	표준편차
여성가족부	33	2.53	0.65
광역시자치단체	33	3.01	0.44
기초자치단체	201	2.96	0.4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50	3.17	0.45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53	3.11	0.5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1	3.24	0.29
일선 청소년시설	273	2.57	0.49

지금까지 응답자 개인 및 소속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료의 활용도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향후 근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아래의 <표 V-20>을 보면, 응답자들은 무엇보다도 유관기관과 ‘통계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 측면의 개선 이외에 ‘유관기관과 청소년 통계데이터 생성’을 중요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0. 자료 활용도 제고 방안

	표본	평균	표준편차
유관기관과 청소년 통계데이터 생성	694	4.05	0.75
청소년 통계생산 시 준수규정	694	3.75	0.72
생산통계에 대한 관리부서 제출과 관리	694	3.68	0.78
유관기관과 ‘통계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조직	694	4.07	0.92
유효 수(목록별)	694		

다음으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영역에 따른 자료 활용도를 살펴보면 아래 <표 V-21>과 같다. ‘청소년 활동’영역이 3.73으로 가장 높고, ‘청소년 참여’영역도 3.57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청소년 자립’과 ‘청년(후기 청소년)관련 정책’ 영역은 3.26과 3.21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 청소년 정책영역별 자료 활용도

	표본	평균	표준편차
청소년 참여	694	3.57	0.89
청소년 권리	694	3.44	0.83
청소년 활동	694	3.73	0.88

	표본	평균	표준편차
청소년 자립	694	3.26	0.91
청소년 보호지원	694	3.35	0.93
청소년 추진체계	694	3.41	0.87
청년(후기청소년)관련 정책	694	3.21	0.94
유효 수 (목록별)	694		

4) 정책대상자의 특성

마지막으로 자료의 활용도는 해당 자료가 그 정책대상자들의 특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래 <표 V-22>를 보면, ‘청소년의 경제 참여활동’, ‘재학생 중 비(非)위기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 ‘학교 밖 청소년 중 비(非)위기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 ‘청년(후기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 등은 정책대상자들의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 청소년 환경 및 활동 등의 반영 수준

	표본	평균	표준편차
청소년 욕구	694	3.29	0.84
청소년이 속한 지역적 정책환경	694	3.05	0.92
청소년의 정책 참여활동	694	3.17	0.85
청소년의 경제 참여활동	694	2.91	0.86
청소년의 사회 참여활동	694	3.15	0.86
청소년의 문화 참여활동	694	3.46	0.89
청소년의 교육현장 참여활동	694	3.27	0.87

	표본	평균	표준편차
재학생 중 비(非)위기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	694	2.95	0.83
재학생 중 위기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	694	3.13	0.86
학교 밖 청소년 중 비(非)위기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	694	2.99	0.93
학교 밖 청소년 중 위기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	694	3.10	0.92
청년(후기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	694	2.86	0.91
유효 수 (목록별)	694		

다음으로 각 청소년 분야별로 정책대상자 특성의 반영 수준을 살펴보면, 앞서 전술한 것과 유사하게 ‘청년(후기청소년)관련 정책’이 2.9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3. 분야별 정책대상자 특성의 반영 수준

	표본	평균	표준편차
청소년 참여	694	3.22	0.83
청소년 권리	694	3.11	0.84
청소년 활동	694	3.38	0.85
청소년 자립	694	3.09	0.81
청소년 보호지원	694	3.24	0.81
청소년 추진체계	694	3.11	0.84
청년(후기청소년)관련 정책	694	2.91	0.87
유효 수(목록별)	694		

5) 기타 청소년 관련 통계의 인식도

지금까지 기존 통계자료가 정책대상자인 청소년의 특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청소년의 특성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융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유관기관 간 데이터 융합’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4.23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24. 유관기관 간 데이터 융합 필요성

	표본	평균	표준편차
‘유관기관 간 데이터 융합’	694	4.23	0.70
유효 수(목록별)	694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 결합의 필요성은 정책수립에 있어서 신규정책의 개발을 위한 것인지, 혹은 기존 정책의 개선을 위한 것인지 등의 그 목적에 따라 자료 결합의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다.

먼저 신규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행정자료와 행정자료 간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하드데이터를 구축해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25. 신규 정책개발 시 데이터 결합의 필요성

	표본	평균	표준편차
행정자료 + 행정자료 결합	694	4.12	0.79
행정자료 + 공공 조사 자료 결합	694	4.05	0.69
행정자료 + 민간 조사 자료 결합	694	3.80	0.80
공공 조사 자료 + 공공 조사 자료 결합	694	3.94	0.74
공공 조사 자료 + 민간 조사 자료 결합	694	3.84	0.76
민간 조사 자료 + 민간 조사 자료 결합	694	3.59	0.85
유효 수(목록별)	694		

다음으로 신규 정책의 개발이 아닌, 기존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자료와 공공조사 자료 간의 결합’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 정책과 달리 기존 정책은 공무원 내부의 행정자료뿐만 아니라 정책집행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결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표 V-26. 기존 정책 개선 시 데이터 결합의 필요성

	표본	평균	표준편차
행정자료 + 행정자료 결합	694	4.00	0.72
행정자료 + 공공 조사 자료 결합	694	4.17	0.69
행정자료 + 민간 조사 자료 결합	694	3.86	0.77
공공 조사 자료 + 공공 조사 자료 결합	694	3.93	0.72
공공 조사 자료 + 민간 조사 자료 결합	694	3.84	0.77
민간 조사 자료 + 민간 조사 자료 결합	694	3.61	0.84
유효 수 (목록별)	694		

(1) 정책 기획

근거기반 정책은 각 정책과정의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자료의 성격도 각 단계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아래의 <표 V-27>을 보면, 정책 기획 단계에서는 ‘조사 통계(설문조사, 실태조사 등)’과 ‘가공 통계(기존 통계 정보를 활용)’ 등이 4.12와 4.0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문가 의견’은 2.99로 가장 낮았다.

표 V-27. 정책기획 단계에서의 자료 유형별 중요도

	표본	평균	표준편차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	694	3.88	0.67
조사 통계(설문조사, 실태조사 등)	694	4.12	0.71
가공 통계(기존 통계 정보를 활용)	694	4.00	0.84
논문, 용역보고서	694	3.60	0.79
전문가 의견	694	2.99	1.13
인터넷, SNS 등의 비정형 데이터	694	3.29	0.83
유효 수(목록별)	694		

(2) 정책집행

위에서 살펴본 정책 기획 단계와 달리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전문가 의견’이 3.83으로 매우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조사 통계(설문조사, 실태조사 등)’은 정책 기획 단계와 동일하게 정책집행 단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28. 정책집행 단계에서의 자료 유형별 중요도

	표본	평균	표준편차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	694	3.86	0.71
조사 통계(설문조사, 실태조사 등)	694	3.97	0.70
가공 통계(기존 통계 정보를 활용)	694	3.72	0.72
논문, 용역보고서	694	3.58	0.81
전문가 의견	694	3.83	0.73
인터넷, SNS 등의 비정형 데이터	694	3.31	0.85
유효 수(목록별)	694		

(3) 정책평가

정책평가의 단계에서도 다른 정책과정과 마찬가지로 ‘조사통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전문가 의견’은 정책집행 단계와 달리 2.9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괄목할 부분은 ‘논문, 용역보고서’가 2.96으로 중요성이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표 V-29. 정책평가 단계에서의 자료 유형별 중요도

	표본	평균	표준편차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	694	3.87	0.75
조사 통계(설문조사, 실태조사 등)	694	3.99	0.72
가공 통계(기존 통계 정보를 활용)	694	3.70	0.77
논문, 용역보고서	694	2.96	1.17
전문가 의견	694	2.92	1.18

	표본	평균	표준편차
인터넷, SNS 등의 비정형 데이터	694	3.34	0.86
유효 수(목록별)	694		

3. 설문조사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의 소결론

지금까지 청소년통계를 바탕으로 한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기술통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정책에 있어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이 가장 낮은 정책추진체계는 여성가족부와 일선 청소년시설이었으며, 정책단계별로 볼 때는 정책의 기획과 집행보다는 평가단계에서 청소년통계와 데이터의 활용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전반적으로 현재 구축된 청소년통계자료는 상대적으로 학술적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정책 수립에서 공무원이나 일선 담당자들이 정책의 기초자료로 인식하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청소년통계의 과학성이 높다고 인식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데이터아카이브’ 홈페이지는 아동·청소년패널자료, 다문화청소년패널자료와 같이 학술적 분석이 필요한 자료들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셋째, 여성가족부를 포함, 시·도 공무원과 산하기관 및 국책기관이 그리고 일선 청소년지도사들이 인식하는 바에 따르면, 청소년통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통계의 부재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는 적시성이었다. 또한 청소년통계의 과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전문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통계관리와 활용을 위한 통계 컨트롤타워조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통계의 세부 활용 측면을 보면, 조사통계나 기존 통계의 가공통계의 활용도는 높지만 최근 주목받는 인터넷과 SNS와 같은 비정형 통계의 활용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구축된 청소년통계가 대상자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는 ‘재학생 중 비(非)위기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 ‘학교 밖 청소년 중 비(非)위기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이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은 정책의 사각지대임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 중 비(非)위기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과 최근 주목받는 ‘19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후기청소년의 청년층’의 통계 보강이 시급하다.

다섯째, 하향식 조직의사결정의 성향이 강한 정책추진체계 일수록 청소년관련 통계자료의 활용도가 낮았다. 이는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과 통계활용도 간의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앞선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같다. 특히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시설의 경우 이와 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 — 제6장 설문자료에 대한 계층적 분석(AHP) 및 회귀분석 결과

- 1. 설문조사에 대한 계층적
분석(AHP)결과
- 2. 정책추진체계별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과 영향요인 간 분석
- 3. 정책추진체계별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과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설문자료에 대한 계층적 분석(AHP) 및 회귀분석 결과

지금까지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청소년통계 활용에 대한 여성가족부 및 공무원, 산하기관 및 국책기관, 그리고 일선 청소년지도사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본 장에서는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주요한 이론적 하위요인인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 ‘자료의 활용성’,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 ‘정책추진체계의 조직문화’가 정책추진체계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계층적 분석기법(AHP)을 이용하여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주요한 이론적 하위요인인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 ‘자료의 활용성’,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 ‘정책추진체계의 조직문화’가 정책추진체계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마찬가지로 계층적 분석기법(AHP)을 이용하여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하여 일선 청소년 시설을 제외한 ‘여성가족부’, ‘광역자치단체 청소년담당부서’, ‘기초자치단체 청소년담당부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정책추진체계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주요한 이론적 하위요인인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 ‘자료의 활용성’,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 ‘정책추진체계의 조직문화’가 전반적인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1. 설문조사에 대한 계층적 분석(AHP)결과

일반적으로 계층적 분석기법(AHP)은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가 0에 가까울수록 적절하다. 특히 일관성 지수가 0.1(10%) 이하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 (Saaty, 2008)하는데,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4가지 주요 하위요인에 대한 전체 일관성 지수는 0.031, 각 정책 추진체계별 중요도의 일관성 지수는 0.037으로 일관성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1.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통계 구축의 하위요인별 계층적 분석(AHP)결과

		사례 수	자료의 과학성	자료의 활용성	정책 대상자의 특성	조직문화	일관성 지수
전체		694	0.106	0.340	0.238	0.315	0.031
소속	여성가족부	33	0.082	0.299	0.265	0.355	0.022
	광역시 청소년 담당부서	33	0.123	0.330	0.216	0.331	0.033
	기초자치단체 청소년담당부서	201	0.095	0.347	0.244	0.314	0.029
	청소년활동진흥원	50	0.089	0.325	0.268	0.318	0.027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53	0.095	0.327	0.244	0.334	0.03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1	0.128	0.343	0.242	0.288	0.026
	청소년시설	273	0.117	0.347	0.227	0.309	0.035
성별	남자	273	0.111	0.351	0.236	0.303	0.034
	여자	421	0.104	0.334	0.240	0.323	0.030
연령	20대	104	0.087	0.347	0.255	0.311	0.029

		사례 수	자료의 과학성	자료의 활용성	정책 대상자의 특성	조직문화	일관성 지수
	30대	241	0.116	0.320	0.244	0.321	0.030
	40대	225	0.108	0.366	0.230	0.296	0.031
	50대 이상	124	0.103	0.329	0.228	0.340	0.038
학력	고등/대학 졸업	434	0.106	0.337	0.236	0.321	0.032
	석사 수료 및 졸업	196	0.109	0.349	0.239	0.302	0.032
	박사 수료 및 졸업	64	0.100	0.334	0.252	0.314	0.028
경력	1년 미만	127	0.104	0.373	0.244	0.279	0.026
	1~3년 미만	170	0.101	0.330	0.248	0.320	0.030
	3년 이상	397	0.110	0.334	0.232	0.324	0.034

먼저 표 VI-1을 보면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향상을 위한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 ‘자료의 활용성’,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 ‘정책추진체계의 조직문화’의 상대적 중요도를 보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볼 때 ‘자료의 활용성’이 0.340으로 가장 중요하였으며, 다음으로 ‘정책추진체계의 조직문화’(0.315),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0.238)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의 중요성이 0.106으로 다른 요인에 비하여 그 상대적 중요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 정책의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있어 공무원과 시설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전문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요인은 바로 ‘자료의 활용성’임을 알 수 있다.

표 VI-2.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정책추진체계별
계층적 분석(AHP)결과

		사례 수	중앙 부처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한국 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광역자치 단체	기초자치 단체	일관성 지수
	전체	694	0.280	0.244	0.163	0.155	0.158	0.037
소속	여성가족부	33	0.265	0.234	0.171	0.166	0.164	0.035
	광역자치단체 청소년담당부서	33	0.309	0.260	0.146	0.153	0.132	0.038
	기초자치단체 청소년담당부서	201	0.273	0.254	0.159	0.149	0.165	0.038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50	0.296	0.266	0.178	0.142	0.118	0.035
	한국청소년상담 복지센터	53	0.261	0.220	0.177	0.185	0.157	0.038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51	0.305	0.266	0.142	0.148	0.138	0.036
	일선 청소년시설	273	0.278	0.234	0.165	0.157	0.166	0.036
성별	남자	273	0.277	0.253	0.159	0.154	0.156	0.037
	여자	421	0.281	0.239	0.165	0.156	0.159	0.036
연령	20대	104	0.260	0.242	0.194	0.148	0.157	0.033
	30대	241	0.282	0.256	0.154	0.155	0.153	0.037
	40대	225	0.291	0.235	0.156	0.161	0.157	0.034
	50대 이상	124	0.271	0.241	0.167	0.150	0.171	0.043
학력	고등/대학 졸업	434	0.284	0.248	0.164	0.148	0.156	0.038
	석사 수료 및 졸업	196	0.264	0.230	0.163	0.177	0.167	0.036
	박사 수료 및 졸업	64	0.299	0.262	0.156	0.138	0.145	0.032
경력	1년 미만	127	0.258	0.220	0.173	0.168	0.182	0.041

		사례 수	중앙 부처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한국 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광역자치 단체	기초자치 단체	일관성 지수
	1~3년 미만	170	0.273	0.256	0.155	0.152	0.164	0.035
	3년 이상	397	0.289	0.247	0.163	0.152	0.148	0.036

또한 표 VI-2에서는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상대적 중요도는 0.280으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244)이었다. 이어서 여성가족부 산하기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0.163, 기초자치단체 0.158, 광역시도가 0.155이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일선 청소년시설이 증거기반정책의 수립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정책추진체계별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과 영향요인 간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를 포함 시·도 공무원과 산하기관 및 국책기관이 그리고 일선 청소년지도사들이 느끼는 계층적 분석기법(AHP)의 결과는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주요한 이론적 하위요인인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 ‘자료의 활용성’,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 ‘정책추진체계의 조직문화’의 세부 문항에 대한 평균비교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은 ‘현재 생산된 청소년 통계 및 데이터는 인지도, 신뢰, 시의 적절성, 학술연구적합성, 정책추진의 적합성, 행정자료와의 연계성’을 묻는 6가지 문항의 평균으로 측정하였다(첨부설문지의 I. 문1. 1~6) . 그리고 ‘자료의 활용성’은 청소년 관련 통계체계의 일반적 현황과 세부내용의 인식도와 행정정보, 조사통계, 가공통계,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전문

가의견 및 비정형데이터(인터넷, SNS)의 활용도를 묻는 총 8가지 문항으로 평균으로 측정하였다(첨부설문지의 II. 문2. 1~8). 또한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은 ‘청소년 참여’, ‘청소년 권리’, ‘청소년 활동’, ‘청소년 자립’, ‘청소년 보호지원’, ‘청소년 추진체계’, ‘청년(후기청소년)관련 정책’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의 7가지 문항의 평균으로 측정하였다(첨부설문지의 III. 문2. 1~7). 마지막으로 ‘정책추진 체계의 조직문화’는 조직의 의사결정의 계량적 근거 활용, 전문가 의견의 반영 정도, 정치적 의사결정의 빈도, 조직 내 문화와 의사결정의 민주성 등의 5가지 문항의 평균을 의미한다(첨부설문지의 III. 문7. 2~6). 특히 이 중에서 ‘3) 우리 기관에서 담당하는 정책 내용은 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비율이 높다’와 ‘4) 우리 기관에서 담당하는 정책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비율이 높다’는 분석의 논리상 역(逆)코딩을 하였다.

표 VI-3.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도

하위요인	표본	평균	표준편차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	694	3.29	0.66
자료의 활용성	694	3.81	0.80
정책추진체계의 조직문화	694	2.80	0.53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	694	3.15	0.69
유효 수(목록별)	694		

표 VI-3을 보면 전체 응답자 694명의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하위요인별 인식도 평균을 보면, ‘자료의 활용성’의 긍정적 인식수준이 3.81로 가장 높았으며,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3.29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의 긍정적 인식이 3.15였으며, ‘정책추진체계의 조직문화’의 긍정적 인식은 2.80으로 가장 낮았다.

표 VI-4. 정책추진체계별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영향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독립변수 구분	여성가족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일선 청소년시설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	3.23	0.67	3.23	0.69	3.41	0.65	3.13	0.56	3.23	0.65	3.4	0.71	3.22	0.66
자료의 활용성	3.82	0.77	3.88	0.62	4.01	0.7	4.23	0.67	4	0.88	4.23	0.78	3.45	0.78
정책추진체계 의 조직문화	2.48	0.62	2.99	0.43	2.96	0.43	3.06	0.44	3.11	0.52	3.12	0.29	2.52	0.5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	3.17	0.56	3.19	0.6	3.24	0.73	3.02	0.64	3.13	0.62	3.13	0.58	3.11	0.73
유효 수 (목록별)	33		33		201		50		53		51		273	

표 VI-4에 나타난 각 요인들의 평균을 비교하여 보면, ‘여성가족부’, ‘광역자치단체 청소년담당부서’, ‘기초자치단체 청소년담당부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그리고 ‘일선 청소년시설’ 모두에서 ‘자료의 활용성’의 긍정적 인식도의 평균이 각각 3.82, 3.88, 4.23, 4.00, 4.23, 3.45로 하위요인 중에서 가장 높고 ‘정책추진체계의 조직문화’의 긍정적 인식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보면 현재 청소년정책의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자료의 활용성’과 ‘정책추진체계의 조직문화’요인이 매우 중요한 특징임을 알 수 있다.

표 VI-5. 정책추진체계별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과 영향요인 간 상관관계

구분	여성가족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청소년활동진흥원				
	정책수립수준	과학적 객관성	자료의 활용성	조직 문화	대상자 특성	정책수립수준	과학적 객관성	자료의 활용성	조직 문화	대상자 특성	정책수립수준	과학적 객관성	자료의 활용성	조직 문화	대상자 특성	정책수립수준	과학적 객관성	자료의 활용성	조직 문화	대상자 특성
정책수립수준	1	0.083	0.395**	0.759***	0.361**	1	0.474***	0.395**	0.179	0.223	1	0.394***	0.549***	0.037	0.448**	1	0.111	0.581***	0.133	0.360**
과학적 객관성		1	0.336	-0.050	0.161		1	0.744***	0.412**	0.641***		1	0.558***	0.181**	0.556***		1	0.245	0.312**	0.338**
자료의 활용성			1	0.224	0.504***			1	0.356**	0.593***			1	0.125	0.578***			1	0.478***	0.464***
조직문화				1	0.181				1	0.495***				1	0.145**				1	-0.083
대상자특성					1					1					1					1

구분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일선 청소년시설				
	정책수립수준	과학적 객관성	자료의 활용성	조직 문화	대상자 특성	정책수립수준	과학적 객관성	자료의 활용성	조직문화	대상자 특성	정책수립수준	과학적 객관성	자료의 활용성	조직 문화	대상자 특성
정책수립수준	1	0.420***	0.582***	-0.213	0.396***	1	0.341**	0.138	0.033	0.171	1	0.281***	0.252***	0.142**	0.439***
과학적 객관성		1	0.743***	0.145	0.621***		1	0.202	0.290**	0.475***		1	0.388***	0.139**	0.482***
자료의 활용성			1	-0.041	0.701***			1	0.059	0.370***			1	0.318***	0.451***
조직문화				1	0.142				1	0.214				1	0.141**
대상자특성					1					1					1

*주: *** p<0.01, ** p<0.05,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표 VI-5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과 영향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정책추진체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가족부의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조직문화’로 0.756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료의 활용성’으로 0.395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증거기반정책 수립은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과 ‘자료의 활용성’이 가장 큰 관련성이 있었으며 이들의 상관관계 계수는 각각 0.474, 0.395이었다.

기초자치단체도 ‘자료의 활용성’이 앞선 여성가족부와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가장 높은 0.594이었다. 한편 기초광역시는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이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과의 상관관계가 0.448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증거기반정책 수준과 ‘자료의 활용성’ 간의 상관관계가 0.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이 그 다음으로 관계가 높은 0.420이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에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만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일선 청소년시설은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에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이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계수 값은 0.439이다.

종합적으로 정책추진체계별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과 영향요인 간 상관관계를 보면 대체로 모든 정책추진체계에서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의 활용성’이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다른 정책추진체계와 비교하여 여성가족부는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에 ‘조직문화’ 요인이 매우 관련성이 높았으며, 일선 시설은 청소년들과 직접 대면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인 만큼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이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과 큰 관련성이 있었다.

3. 정책추진체계별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과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지금까지 정책추진체계별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과 영향요인의 관계를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 ‘자료의 활용성’,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 ‘정책추진체계의 조직문화’에서 ‘자료의 활용성’의 인식도는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전반적 인식도와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책추진체계별로 보면, 여성가족부는 ‘조직문화’ 요인 그리고 일선 시설은 청소년통계가 포함하는 ‘청소년정책대상자의 특성’이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추진체계별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과 앞선 선행연구 탐색에서 도출된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 ‘자료의 활용성’,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 ‘정책추진체계의 조직문화’의 4가지 영향요인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회귀분석은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며, 인적특성과 통계의 개인적, 조직적 활용도, 청소년통계의 객관성 인식을 통제변수로 한다. 그리고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 ‘자료의 활용성’,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 ‘정책추진체계의 조직문화’를 독립변수로 하여 각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영향요인들이 청소년정책의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나아가 본 회귀분석은 정책추진체계별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과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증거기반정책 수립이 ‘여성가족부’, ‘광역자치단체 청소년담당부서’, ‘기초자치단체 청소년담당부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일선 청소년시설’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과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는 표 VI-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수준’은 본 설문의 III- 문9 - 1), 2), 3)의 평균을 활용하였으며, 증거기반정책 수립이 정책 기획, 집행, 평가단

계에서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본 연구의 인적 통제변수로는 ‘성별’, ‘경력’, ‘최종학력’이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2로 코딩하였다. 그리고 ‘경력’은 청소년 분야 관련 경력으로 6개월 단위로 3년 이상까지 경력을 7개의 척도로 구분하였다. 또한 ‘최종학력’은 응답자의 최종학력으로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석사 수료, 석사 졸업, 박사 수료, 박사 졸업으로 세분화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영향요인들의 효과를 보다 세밀히 검증하기 위하여 응답자와 응답자가 속한 조직의 통계활용도와 현재 구축 중인 통계의 객관성에 대한 인식도를 통제하였다. ‘응답자 개인의 통계활용도’는 II - 문1 - 1)을 활용하여 응답자의 업무에 청소년 통계를 활용하는 정도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응답자가 근무하는 조직의 통계활용도’는 II - 문1 - 2)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응답자가 근무하는 기관 업무에 청소년 통계를 활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응답자가 인식하는 청소년 통계의 객관성’은 통계청(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광역시도의 직접조사,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직접조사, 일선 청소년시설의 직접조사의 통계자료에 대한 각각의 객관적 인식을 총 평균값으로 활용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영향요인들이다. 먼저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은 청소년통계의 과학적 객관성(인지도, 신뢰도, 적절성, 적합성, 연계성 등)을 측정한 개념이며 I - 문1 - 1) ~ 6)의 평균이 그것이다. ‘자료의 활용성’은 청소년통계의 현재 활용실태이며 II - 문2 - 1) ~ 8)의 평균값이다. 또한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은 청소년통계가 청소년의 특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묻는 개념이며 II - 문9 - 1) ~ 7)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추진체계의 조직문화’는 해당 기관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조직문화를 측정하며 II - 문7 - 2) ~ 6)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단, II - 문7 - 3)과 4)는 질문지의 의미상 원 자료를 역코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한 회귀모형은 아래의 수식

VI-1과 같으며 그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VI-6이다.

수식 VI-1.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과 영향요인 대한 회귀모형

$$\begin{aligned} Y(\text{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수준}) &= \beta_0 + \beta_1 \times (\text{성별}) + \beta_2 \times (\text{경력}) + \beta_3 \times (\text{최종 학력}) \\ &+ \beta_4 \times (\text{응답자 개인의 통계활용도}) + \beta_5 \times (\text{응답자가 근무하는 조직의 통계활용도}) \\ &+ \beta_6 \times (\text{응답자가 인식하는 청소년통계의 객관성}) + \beta_7 \times (\text{자료의 과학적 객관성}) \\ &+ \beta_8 \times (\text{자료의 활용성}) + \beta_9 \times (\text{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 \\ &+ \beta_{10} \times (\text{정책추진체계의 조직문화}) + \epsilon(\text{오차항}) \end{aligned}$$

표 VI-6. 정책추진체계별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과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구분	변수내용	변수설명	측정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증속 변수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수준	증거기반정책 수립이 정책 기획, 집행, 평가단계에서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1=매우 낮음, 5=매우 높음)	III - 문9 - 1), 2), 3)의 평균	694	3.28	0.83
독립 변수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	청소년통계의 과학적 객관성(인지도, 신뢰도, 적절성, 적합성, 연계성 등) 평가 문항의 평균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I - 문1 - 1) ~ 6)의 평균	694	3.29	0.66
	자료의 활용성	청소년통계의 현재 활용실태평가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II - 문2 - 1) ~ 8)의 평균	694	3.81	0.80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	청소년통계가 청소년의 특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 (1=매우 낮음, 5=매우 높음)	II - 문9 - 1) ~ 7)의 평균	694	2.80	0.53
	정책추진체계의 조직문화	해당 기관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조직문화 평가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II - 문7 - 2) ~ 6)의 평균 *3), 4): 원자료 역코딩	694	3.15	0.69

변수 구분	변수내용	변수설명	측정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통제 변수	성별	응답자의 성별 (1=남자, 2=여자)	V - 문2	694	1.61	0.49
	경력	응답자의 업무 관련 경력 (1=6개월 이내, 2=6개월 이상~1년 미만, 3=1년 이상~1년 6개월 미만, 4=1년 6개월 이상~2년 미만, 5=2년 이상~2년 6개월 미만, 6=2년 6개월 이상~3년 미만, 7=3년 이상)	V - 문5	694	5.29	2.23
	최종 학력	응답자의 최종학력 (1=고등학교 졸업, 2=대학교 졸업, 3=석사 수료 4=석사 졸업, 5=박사 수료, 6=박사 졸업)	V - 문3	694	2.81	1.22
	응답자 개인의 통계활용도	응답자의 업무에 청소년 통계를 활용하는 정도 평가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II - 문1 - 1)	694	3.38	0.84
	응답자가 근무하는 조직의 통계활용도	응답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업무에 청소년 통계를 활용하는 정도 평가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II - 문1 - 2)	694	3.41	0.87
	응답자가 인식하는 청소년 통계의 객관성	각 통계 유형별 과학적 객관성 평가 평균 (1=매우 낮음, 5=매우 높음)	I - 문2 - 1) ~ 8)의 평균	694	3.27	0.49

표 VI-7. 정책추진체계별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과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구분	전체		여성가족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일선 청소년시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국책연구원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통 제 변 수	성별	-0.026	-0.015	-0.258	-0.155	0.703**	0.476**	-0.236***	-0.165***	-0.207*	-0.132*	0.133	0.079
	경력	-0.035***	-0.095***	-0.036	-0.101	-0.051	-0.104	0.009	0.029	-0.118***	-0.281***	-0.002	-0.004
	최종학력	0.038*	0.057*	0.038	0.042	-0.498**	-0.501**	0.007	0.009	-0.029	-0.056	-0.033	-0.039
	응답자가인의 통계활용도	0.014	0.015	0.085	0.078	0.529	0.481	-0.189	-0.203	0.274***	0.351***	0.055	0.058
통 제 변 수	응답자근무 조직의 통계활용도	0.071	0.075	0	0	-0.17	-0.161	0.345***	0.407***	-0.046	-0.054	-0.052	-0.056
	응답자가 인식하는 청소년통계의 객관성	0.130*	0.076*	0.102	0.057	0.057	0.04	0.231*	0.118*	-0.07	-0.041	0.186*	0.128*

구분	전체			여성가족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국책연구원		일선 청소년시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0.034	0.027	-0.049	-0.04	0.014	0.015	0.014	0.171*	0.148*	0.031	0.025	0.002	0.002	0.002	0.002	0.002
독립변수	0.228***	0.221***	0.144	0.134	-0.165	-0.149	0.290**	0.297**	0.213*	0.223*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0.191***	0.123***	0.917***	0.690***	0.121	0.076	-0.051	-0.032	-0.14	-0.081	0.096*	0.096*	0.096*	0.096*	0.096*	0.096*
	0.192***	0.161***	0.104	0.071	-0.316	-0.277	0.067	0.071	0.093	0.076	0.404***	0.352***	0.404***	0.352***	0.404***	0.352***
	0.564**		-0.277		1.752		1.219**		2.956***		0.464		0.464		0.464	
표본	694		33		33		201		154		273		273		273	
R^2	0.28		0.68		0.5		0.434		0.35		0.223		0.223		0.223	
R^2 수정된	0.269		0.535		0.272		0.404		0.304		0.193		0.193		0.193	

*주: *** p<0.01, ** p<0.05, * p<0.12

다음 정책추진체계별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과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는 표 VI-7와 같다. 먼저 ‘여성가족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국책연구원’, ‘일선 청소년시설’을 포함한 ‘전체’ 모형을 보면 수정된 R^2 는
0.269로 본 모형은 응답자의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대한 인식을 약 26.9% 정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통제변수인 성별은 증거기반정책 수준에 미치는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지만, 경력은 부정적 효과가 있었으며 학력은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이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대한 인식은 다소 높아졌고 경력이 낮을
수록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인식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보다 연령
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인식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응답의 통제변수의 의미가 크므로 해석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체’ 모형을 보면 역시 통제변수로 사용된 개인의 통계활용도가 높을수록 증거
기반정책 수립의 인식은 더 높아짐을 유의수준 10%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본 회귀모형의 독립변수인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 ‘자료의 활용성’,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 ‘정책추진체계의 조직문화’가 증거기반정책의 수립
인식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본다.

‘전체’ 모형을 보면 유의수준 10%를 기준으로 ‘자료의 활용성’,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 ‘정책추진체계의 조직문화’가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미치는 효과
는 유의미하였으나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은 유의미하지 못했다. 이는 실제로
청소년분야의 통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객관성 높은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 자체가 아주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의 활용성’,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 ‘정책추진체계의 조직문화’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
교하면, 청소년통계의 ‘자료의 활용성’이 0.221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정

책 대상자의 특성'이 0.161로 그 다음으로 영향력이 컸다. 이를 보면, 청소년 통계를 활용한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고 소수의 자료라도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료의 활용성'이 중요하게 평가된 결과는 앞선 계층적 분석기법(AHP)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여성가족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국책연구원', '일선 청소년시설'의 정책추진체계별로 모형을 달리하여 회귀분석을 하면 각 정책추진체계별로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이 서로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가족부'는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 '자료의 활용성',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 '정책추진체계의 조직문화' 중에서 '정책추진체계의 조직문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그 표준화 회귀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다소 정치적이며 자료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직관에 의하여 주로 정책이 추진되는 여성가족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는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이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임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분야는 행정통계가 절대 부족하지만 앞선 인식조사 결과를 볼 때 신규정책의 수립과 기존정책의 개선에 필수적인 자료는 행정통계이다. 실제 통계청의 행정자료는 시군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광역자치단체 수준에는 행정통계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있는 편이다. 또한 시군구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은 어느 정도 독자적인 기본계획에 의하여 청소년 정책환경에 맞는 특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력과 행정력이 있으므로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유의수준 10% 안에서 '자료의 활용성'만이 증거기반

정책 수립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증거기반정책 수립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청소년정책 담당자의 청소년통계의 낮은 활용성이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및 국책연구원’은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자료의 활용성’과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만이 유의수준 10% 안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자료의 활용성’이었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일선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일선 정책추진을 관리하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그리고 국가 청소년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원의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축된 청소년통계의 ‘활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관건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대면하여 청소년정책을 집행하는 ‘일선 청소년시설’의 분석결과를 보면 청소년 통계자료가 청소년의 특징을 잘 반영하였는지 여부와 조직의 문화가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선 청소년시설’이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보다 상향식 의사결정 문화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정책추진체계별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과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여성가족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국책연구원’, ‘일선 청소년시설’ 모두를 볼 때 증거기반정책 수립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통계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자료의 활용성’ 제고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책추진체계별 특징을 보면 국가청소년정책을 기획하는 ‘여성가족부’와 일선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청소년시설’은 상향식 의사결정의 문화 결여가 가장 큰 문제점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광역시의 청소년정책의 경우는 다른 추진체계와 달리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이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 — 제7장 심층면접 분석 및 결과

- 1. 심층면접 개요
- 2. 심층면접에 대한 분석

1. 심층면접 개요

1) 조사 목적

본 연구는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에 대한 양적연구를 바탕으로 면접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학계 전문가와 행정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승인통계, 행정자료, 공공조사자료, 민간조사자료도 조사하였다. 본 심층면접은 통계자료 입수 방법, 통계 데이터 사용 이유, 통계 자료를 활용하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증거기반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에 대하여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을 가진 청소년정책 및 현장 관련 학계 전문가 6인, 행정계 전문가 10인 총 16인의 전문가이다. 학계 전문가는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국책연구원 박사급 연구원 2인, 청소년학 전공 교수 2인,

경제학 및 통계학 전공 교수 2인 총 6인으로 구성하였다. 학력은 박사 6인, 성별은 남성 6인이며, 연령대는 30대가 1인, 40대가 3인, 50대가 1인, 60대가 1인이다.

다음으로 행정계 전문가는 여성가족부 공무원 6인, 교육부 공무원 2인, 통계청 공무원 1인, 광역시청에 근무하는 청소년정책 담당 공무원 1인이다. 그들의 주 업무 분야는 청소년보호 및 복지, 청소년활동 등이다. 직위는 과장 4인, 서기관 2인, 사무관 2인, 연구관 1인, 주무관 1인 등이며 성별은 여성 1인, 남성 9인이며, 학력은 박사 3인, 석사 4인, 학사 1인, 고졸 1인이며, 연령대는 40대가 2인, 50대가 8인이다. 연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정리하면 <표 VII-1>과 같다.

표 VII-1. 심층면접 참여자 인적 특성

참여자		직책	연령	성별	학력	전문분야	경력
학계	1	연구위원	30대	남	박사	노동·교육·인적자원정책	3년이상
	2	팀장	40대	남	박사	언론학 및 조사통계	3년이상
	3	교수	30대	남	박사	경제학	3년이상
	4	교수	50대	남	박사	청소년학	3년이상
	5	교수	40대	남	박사	청소년학	3년이상
	6	교수	60대	남	박사	빅데이터	3년이상
행정계	1	공무원	40대	여	고졸	청소년정책	3년이상
	2	서기관	50대	남	석사	가족	3년이상
	3	사무관	50대	남	학사	학교 밖 청소년	3년이상
	4	과장	40대	남	박사	학교생활문화	3년이상
	5	연구관	50대	남	석사	학교생활문화	3년이상
	6	과장	50대	남	박사	권익보호	3년이상
	7	과장	50대	남	석사	혁신행정	3년이상
	8	과장	50대	남	박사	청소년보호환경	3년이상
	9	사무관	50대	남	석사	청소년보호	3년이상
	10	서기관	50대	남	박사	통계	3년이상

3) 조사도구

심층면접 질문지를 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 분석과 관련 학계 전문가 1인을 대상으로 사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문가 3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그리고 면접조사지는 본 연구의 양적 설문조사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질문 내용의 구성은 ① 청소년 승인 통계 목록에 따른 정책단계별 통계활용 경험 ② 아동·청소년 통계 수집 방법 및 이유 ③ 청소년 통계 중 주로 사용하는 자료 유형 ④ 청소년 통계가 정책단계별 근거로 활용 되지 않는 이유 및 활용방안 ⑤ 청소년 통계 및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전문기관 간의 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⑥ 증거기반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대안으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 ⑦ 여성가족부 및 청소년시설의 증거기반정책 수립 방안 ⑧ 청소년 증거기반정책 활용의 국내외 우수사례 및 실패 사례 ⑨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한계점 ⑩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발전방향 ⑪ 일반적 특성 등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VII-2>와 같다.

표 VII-2. 심층면접 질문지 내용

번호	조사영역	세부항목
1	최근 1년 이내 아동·청소년 승인 통계 목록에 따른 정책단계별 통계활용 경험	• 활용 자료
		• 활용 이유
		• 자료수집 방법
		• 활용 효과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활용한 자료가 없다면 그 이유
2	아동·청소년 통계 수집 방법 및 이유	• 업무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통계를 수집하는 방법 및 이유

번호	조사영역	세부항목
3	청소년 통계 중 주로 사용하는 자료 유형	• 업무 추진 시 청소년 통계 중 주로 사용하는 자료 유형(행정자료, 공공 조사 자료, 민간 조사 자료 각 3개)
4	청소년 통계가 정책단계별 근거로 활용 되지 않는 이유 및 활용방안	• 청소년 통계가 정책기획,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5	청소년 통계 및 데이터의 활용성	• 청소년 통계 및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전문기관 간의 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6	청소년 통계 및 데이터의 활용성	• 증거기반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대안으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 •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 • 어떤 기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 정부부처의 역할 • 정책연구원의 역할 •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
7	여성가족부 및 청소년시설의 증거기반정책 수립 방안	• 여성가족부 및 청소년시설의 의견기반정책수립 빈도가 높은 이유 및 해결방안
8	청소년 증거기반정책 활용의 국내외 우수사례 및 실패 사례	• 청소년 증거기반정책 활용의 국내외 우수사례 및 실패 사례, 현황 제시
9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한계점	• 한국 상황에서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한계점
10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발전방향	• 청소년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발전방향
11	일반적 특성	• 성별, 최종학력, 소속, 청소년 관련 업무 경력

4) 연구절차

샘플집단의 표집은 증거기반 아동·청소년·청년 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추천 및 소개를 받아 선정하는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2018년 9월 12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면접지는 반구조화된 형태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연구진은 면접대상자가 질문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메일로 배포하였다.

심층 면접 장소는 해당 공무원 정부부처 회의실, 연구실에서 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요청에 의해 2명은 카페에서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개인에 따라 1~2회에 걸쳐 진행하였고, 면접 시간은 1시간 ~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또한 연구진은 심층면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 개인 정보와 관련된 비밀 보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층면접 내용에 대해 녹취하는 것을 승낙 받아 자료 기록 및 녹음을 하였다.

5) 인터뷰 참여자의 청소년관련 통계 활용현황

(1) 정책단계별 아동·청소년 승인통계 통계자료 활용

① 아동·청소년 승인통계 활용자료

최근 1년 이내에 정책기획⁷⁾, 정책집행⁸⁾, 정책평가⁹⁾와 관련해서 정책단계별로 통계활용 경험에 대해 <표 VII-3>와 같이 아동·청소년 승인통계목록을 제시하여 조사하였다. 학계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아동·청소년 승인통계는 <표 VII-4>와 같고, 행정계 공무원들이 활용한 아동·청소년 승인통계는 <표 VII-5>와 같다. 전반적으로 학계 전문가들과 행정계 공무원들의 공통점은 청소년 승인통계 중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점은 학계 전문가들은 아동승인통계(2건)를 청소년승인통계(20건)에 비해 활용도가 현저히 낮았으나 행정계 공무원들은 아동승인통계(15건), 청소년승인통계(18건)으로 비슷하게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7) 정책기획: 사회문제지지, 정책목표 설정, 대안탐색 및 비교평가

8) 정책집행: 집행지침 작성(집행정도 및 집행방법 비교), 자원화보와 배분(논리근거 확보), 집행 점검과 평가

9) 정책평가: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내용, 평가방식

표 VII-3. 아동·청소년 승인통계

아동승인통계		청소년승인통계
요보호아동 현황보고	평생교육통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 통계조사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특수교육현황조사	청소년상담지원현황
아동종합실태조사	국가영재교육통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보고	교육기본통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진로교육현황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청년패널조사
한국교육종단조사(패널)	특수교육실태조사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전문가집단 아동·청소년 승인통계 활용자료

〈표 VII-3〉는 아동·청소년 승인통계 목록현황이다. 학계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아동승인통계를 2건, 청소년승인통계를 20건 활용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아동승인통계 중 활용한 통계는 보육실태조사와 특수교육실태조사로 주로 실태조사를 활용했다. 다음으로 청소년승인통계 중 제일 많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는 통계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4건),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4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3건),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3건)이다. 한편, 청소년승인통계 중 활용을 하지 않는 통계는 청년패널조사이다. 전문가집단 아동·청소년 승인통계 활용자료 결과는 〈표 VII-4〉와 같다.

표 Ⅶ-4. 전문가집단 아동·청소년 승인통계 활용자료

(단위: 건)

아동청소년승인통계		학계3	학계4	학계5	학계6	합계
아동 승인 통계	요보호아동 현황보고	0	0	0	0	0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	0	0	0	0	0
	보육실태조사	0	0	0	1	1
	아동종합실태조사	0	0	0	0	0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보고	0	0	0	0	0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0	0	0	0	0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0	0	0	0	0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0	0	0	0	0
	한국교육종단조사(패널)	0	0	0	0	0
	평생교육통계	0	0	0	0	0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조사	0	0	0	0	0
	특수교육현황조사	0	0	0	0	0
	국가영재교육통계	0	0	0	0	0
	교육기본통계	0	0	0	0	0
	초·중·고사교육비조사	0	0	0	0	0
	진로교육현황조사	0	0	0	0	0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0	0	0	0	0
	특수교육실태조사	0	0	0	1	1
	아동승인통계 합계					2
청소년 승인 통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	1	1	1	4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1	1	1	1	4
	청소년상담지원현황	0	0	0	1	1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0	0	1	0	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1	1	1	0	3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	0	1	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1	1	1	0	3
	청년패널조사	0	0	0	0	0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1	1	0	0	2
	청소년승인통계 합계					20
합계		5	6	5	6	22

○ 공무원집단 아동·청소년 승인통계 활용자료

앞선 방법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진은 <표 VII-3>에 제시된 아동·청소년 승인통계 목록의 이용현황을 행정계 공무원 집단에게 질문하였다. 제시된 승인통계 중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인 통계는 교육기본통계(5건)이다. 그리고 아동종합실태조사(2건),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조사(2건)도 일부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적게 활용된 통계는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1건), 평생교육통계(1건), 특수교육현황조사(1건), 초·중·고사교육비조사(1건), 진로교육현황조사(1건), 특수교육 실태조사(1건)이다.

다음으로 행정계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청소년 승인통계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4건),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3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3건)이다. 학계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행정계 공무원들은 청소년 승인통계로 실태조사를 주로 활용했다.

표 Ⅶ-5. 공무원집단 아동·청소년 승인통계 활용자료

(단위: 건)

아동청소년승인통계		행정 계2	행정 계3	행정 계4	행정 계5	행정 계6	행정 계8	행정 계9	행정 계10	합계
아동 승인 통계	요보호아동 현황보고	0	0	0	0	0	0	0	0	0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	1	0	0	0	0	0	0	0	1
	보육실태조사	0	0	0	0	0	0	0	0	0
	아동종합실태조사	0	0	0	0	0	1	1	0	2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보고	0	0	0	0	0	0	0	0	0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0	0	0	0	0	0	0	0	0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0	0	0	0	0	0	0	0	0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0	0	0	0	0	0	0	0	0
	한국교육종단조사(패널)	0	0	0	0	0	0	0	0	0
	평생교육통계	0	0	1	0	0	0	0	0	1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조사	0	0	1	1	0	0	0	0	2
	특수교육현황조사	0	0	0	1	0	0	0	0	1
	국가영재교육통계	0	0	0	0	0	0	0	0	0
	교육기본통계	0	1	1	1	0	1	1	0	5
	초·중·고사교육비조사	0	0	1	0	0	0	0	0	1
	진로교육현황조사	0	0	0	1	0	0	0	0	1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0	0	0	0	0	0	0	0	0
	특수교육실태조사	0	0	0	1	0	0	0	0	1
	아동승인통계 합계									15
청소년 승인 통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0	0	1	0	0	1	1	1	4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 조사	0	0	0	0	0	1	1	1	3
	청소년상담지원현황	0	0	1	1	0	0	0	0	2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0	0	0	0	0	1	1	0	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0	0	0	0	1	0	0	1	2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0	0	0	1	1	0	0	1	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0	0	0	0	1	0	0	0	1
	청년패널조사	0	0	0	0	0	0	0	0	0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0	0	0	0	1	0	0	0	1
	청소년승인통계 합계									18
합계		1	1	6	7	4	5	5	4	33

② 행정자료, 공공조사자료, 민간조사자료

다음으로 본 연구진은 행정계 공무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행정자료, 공공조사자료와 민간조사자료가 무엇인지 질문하였고 그 결과는 <표 VII-6>와 같다. 먼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자료는 아동·청소년 인구 수이다. 다음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조사자료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이다. 주로 사용하고 있는 민간조사자료는 청소년 폭력실태조사와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연구이다.

표 VII-6. 공무원집단 행정자료, 공공조사자료, 민간조사자료 활용현황

면접자	행정자료	공공조사자료	민간조사자료
행정계2	가정 형태 별 가구 수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청소년과 관련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청소년폭력실태조사, 위기청소년실태조사, 행복지수라, 건강지수, 한국 아동 삶의 질 지수
행정계3	주민등록관련통계, 외국인통계, 청소년 사망통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학교폭력실태조사, 다문화가정실태조사	청소년 폭력실태 조사
행정계4	아동·청소년·청년 인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청소년 폭력 실태조사
행정계5	학교급별 학생 수, 특성화고 학생 수,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처분 통계, 다문화학생 수, 탈북학생 수	위기청소년실태조사	청소년폭력실태조사
행정계6	아동청소년청년 인구 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청소년 폭력 실태조사
행정계8	아동청소년 인구 수	종합실태조사,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연구

2. 심층면접에 대한 분석

1)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저해하는 문제점

(1) 청소년정책에서 통계활용의 문제점

학계 전문가들과 행정계 공무원들이 청소년 통계를 활용하면서 가졌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통계의 낮은 접근성과 활용의 방법에 대한 어려움이 다. 둘째는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만든 통계 값의 불일치이다. 그 이유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통계 조사 시 표집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셋째, 청소년 통계들이 흩어져있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계 공무원들이 청소년 통계를 활용하면서 가졌던 문제점은 수요자들에 맞게 통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점, 수요자가 활용가능 하도록 통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활용하기 쉽지 않은 점, 청소년 통계만으로는 대상자의 근본적인 욕구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였다. 마지막으로, 수시로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청소년 데이터가 부족한 것도 큰 문제로 나타났다.

○ 접근과 활용의 어려움

“이런 통계들이 있는지 모르고, 이 통계들이 담고 있는 게, 이 통계들이 뭘 위해서 하는 것이고, 몇 년 주기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통계 각각에 세부지표 어떤 것들이 숨어있는지를 몰라요” (학계 5)

“청소년 데이터 자체가 한 곳에 모이지 않고 찾아야 해요. 자료위치가 어디 있는지 파악이 중요한데 찾기 어렵게 되어있어요. 저는 청소년 매체, 유해종합실태조사는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학계 6)

○ 적시성이 부족함

“사실 정책은 늘 상황에 따라 흘러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상 하는 정책들도 있지만, 수시로 정책적 필요에 의해 대응해야 하는데, 실태조사가 주로 보면 그 성격상 주기적인, 3년 주기, 5년 주기, 1년 주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이 필요로 하는 짧은 기간의 청소년들의 의견이라든지 경향을 캐치해 내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담당자 입장에서 그러한 실태조사를 수시로 확인하고 결과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 좀 더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서 그 효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최초 계획된 만큼 정책이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행정제 6)

○ 정책개발자들의 통계를 활용할 자질 부족

“사실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활용할 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방향성 이런 것을 정책 개발자가, 입안자가 정확히 방향을 설정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자료를 통해 뭔가 발굴하는 게 있다 보니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된다는지, 개발자가 좀 더 미래지향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지 이런 게 돼야 하는데.” (행정제 7)

(2) 청소년 통계가 정책 근거 자료로 활용됨에 있어 취약점

학계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이 정책 단계별로 청소년 통계를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첫째, 정책 사안에 맞는 자료가 없다는 것을 언급했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이 각각의 정책개발 목적에 맞게 통계를 생산하다보니 아동·청소년

종합계획 수립 시 통계가 상호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 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한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과 지식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또한 행정계 공무원들이 정책단계별로 청소년 통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째, 담당공무원들의 통계에 대한 인식과 지식 부족함이다. 둘째, 다양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은 청소년 통계로 인해 활용도가 낮음을 언급했다. 셋째, 청소년정책의 다양한 이슈의 혼재와 취약한 청소년정책 평가시스템이다.

○ 청소년통계가 실태중심으로 구축되어 활용 가능한 자료가 매우 부족

“(청소년통계가 실태조사가 많아) 결국은 쓸 만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근거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활용 값어치가 없는 데이터죠.” (학계 5)

○ 청소년 정책 개발 목적에 따라 통계생산이 이루어져, 청소년의 종합 대책 수립이 어려움

“개별 공공기관별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 개별 청소년 정책 개발 목적에 따라 통계 생산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니까 합쳐야 하는데 아귀가 안 맞아요. 아동은 아동, 청소년은 청소년. 각자 설립목적에 따라 통계 생산을 하다 보니,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계 6)

○ 담당공무원들의 통계에 대한 인식과 지식 부족

“종합실태조사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를 몰라. 그리고 3번째는 설령 이게 나와 있는 그 상태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내가 성별이나 지역별로 브레이크 다운해야 된다면 못하는 거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활용이 되는 건데, 공무원분들한테 그걸 알아서 다해서 쓰라고 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학계 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그런 자료가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필요하다 그러면 많이 여기저기 찾아올 텐데, 정책연구원에 그런 자료가 모여 있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홍보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행정계 3)

“담당 공무원들의 통계에 대한 마인드가, 인식이 깊지 않아서 보편적으로 하던 대로 하는 게 있고. 또 업무를 하다보면 우리가 과정을 중시해야 되는데, 결과위주로 통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만 집중하다 보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가야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까지는 놓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증거기반으로 통계 수치를 보거나 연구하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행정계 9)

○ 현재 청소년통계는 정책지향점을 간과하여 활용도가 낮음

“청소년통계가 충분하게 다양하지 못하다. 다양성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하는데, 조금 디테일한 문제로 들어가 보면 그 디테일한 문제를 충분히 함의하고 있는 통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계 2)

“그냥 ‘행복합니까?’ 애들한테 행복지수로 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행복지수라는 부분으로 너무 추상적으로 가는데, 질문도 더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고 정책도.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구체적인 행위예요. 추상적인 행위가 아니거든. 정책과 제도는 굉장히 구체적인 건데, 질문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질의서를 구성할 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움직이는 질의와 마이크로한 내용에서의 질의가 적절히 분배되어야 합니다.” (행정계 8)

○ 하나로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는 청소년 이슈

“이슈가 집중화, 어떠한 하나로, 어떤 한 현상으로 모인다고 보다는 그 이슈가 다양하게 분산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관심도 에너지도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씩 단계별로 이슈가 만들어져서 가면 업그레이드되면서 발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이라는 시기에 다양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행정계 2)

“한마디로 여가부로 보자면, 올해 미투 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하는 이슈들이 많으면, 그런 이슈들이 많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대응자료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럼 대응자료를 만들 때, 보고서 같은 것 만들 때 당연히 그쪽 자료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청소년 부분은 그런 판단을 하면, 그만큼 정책적 요구가 덜하지 않나.” (행정계 3)

○ 취약한 청소년정책 평가 시스템

“특히 제일 어려운 부분이 평가부분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책평가 모델이

아직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처음부터 데이터들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기획이나 집행 쪽은 맞는 데이터들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도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고. 앞으로 특히 개발돼야 할 부분이 정책 평가. 사회과학 쪽, 특히 교육쪽은 정책평가를 하기 어렵잖아요.” (행정계 4)

2) 증거기반정책 수립 활성화 방안

(1) 청소년 통계의 정책 활용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전문가들은 청소년통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통계 관련 예산증액과 청소년 통계 활성화를 위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역할 강화를 제안하였다. 특히 그들은 언론에 관심이 많은 현안정책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분야의 증거기반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간의 사업 활성화도 지적하였다.

○ 청소년 통계에 부족한 예산 투자

“제일 먼저 관심이고, 돈이죠. 예산 투자인데, 예산 투자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 개발지표, 발달지표 때부터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적에 기초연구만 하고 끝내버렸잖아요.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 기본적인 건데, 어떤 것이든 데이터를 확보해내고 쓰임새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려면 예산싸움이죠. 예산은 충분하지 않고 쓸 만한 데이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학계 5)

○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원에서 데이터를 가공해주고 홍보하는 역할 필요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해주고, 어떤 자료와 데이터가 있는지 알 수 있게 홍보가 필요하다. 실제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통계자료와 어떤 형태의 통계형태를 원하는지 수요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계 3)

○ 언론 노출 사건의 전국적인 상황 파악 후 정책수립

“데이터를 그 때 그 때 발생했을 때 뽑으면 되거든요. 특히 빅데이터에도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도 중앙에서 컨트롤 해야 해요. 데이터 짝 모아놓고 필요한 걸 뽑을 수 있도록요. 청소년 무슨 자료든지 간에 전국에 있는 모든 자료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행정계 5)

○ 증거기반을 토대로 할 수 있는 사업 구성

“제가 볼 땐 어떠한 사업 하나를 잡아서, 시범적으로 증거기반을 토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통계담당자가 있어야. 그 분이 하든 통계청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외부연구기관의 도움을 받든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제가 봤을 땐 어떤 결과가 달라지기 보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업무들이 좀 있지 않을까.” (행정계 9)

(2) 정책전문기관 간의 협력 강화 방안

심층면접 응답자들은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청소년통계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책전문기관 간의 협력을 꼽았다. 구체적인 실행 대안으로는 기존의 통계관리 및 홍보, 학계와 행정계간의 연구협력과 정책협의회 상시 개최, 중앙에 통계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지방정부와 데이터 네트워크 강화, 청소년 전문가 및 통계 전문가 확보이다.

○ 기존의 통계들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통계 관리 및 홍보

“예산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해결될 것 같진 않고(중략..) 기존에 나와 있는 통계들이라도 잘 쓰일 수 있게. 그것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국가예산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통계들인데, 그것들도 쓰임새가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기존 통계들이라도 정말 공들여서 만든 통계니까 쓰임새 있게 하려면 결국 뒤에 나오는 홍보인데, 어떻게 홍보해야 될까. ‘이런 통계 있어요.’가 아니라 ‘내가 이 통계가 필요한데 이런 데이터 있나? 청소년들은 지금 뭘 고민하고 있지? 청소년들의 주요 고민을 보려면 국가 통계 중에 어느 통계를 봐야 될까?’ 하는 루트들만 좀 정리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학계 5)

○ 학계와 행정계간의 연구협력과 정책협의회 상시 개최

“사실 정책담당자가 좀 더 풍부하게 상상하고 좀 넓게 생각을 하려면 질문을 제기하려는 자가 공무원이 아니고, 연구자가 ‘내 연구결과는 이렇다, 난 이런 주제에 대해 연구를 했고 내 연구결과는 이렇다’라는 걸 30분이나 1시간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그걸 들으면서 공무원은 자기가 고민하던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학계 1)

“예를 들어 정책세미나의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연구원이 주기적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에 자료에 근거한 정책과 정책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을 제안해서 여성가족부가 선택한 정책은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연구기관에서 자료를 제시해서 여성가족부와 같은 곳에서 맞게 취사 선택을 하거나, 반대로 공무원들이 연구원에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정책세미나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학계 3)

“지금 전체적으로 학계와 공무원들 간의 연구협력이 조금 더 일상화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은 문턱이 좀 높아서 서로 대화, 상화 문화나 전문성에 대한 이해도 많이 낮은 상황이고. 그러다보니 각각의 필요에 대한 눈높이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행정 쪽에서는 당장 쓸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그런 게 나오려면 깊이 있는 연구가, 꾸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제 상충되기도 하지만 서로 보완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학계하고 공공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죠.” (행정계 4)

“좀 더 통계부분에 있어서의 통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정책전문기관 간의 협의, 회의체, 이런 것을 좀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계조사 결과를 좀 더 여성가족부 등 정부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그것을 페이퍼,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계 6)

“협의체 얘기죠.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 말씀은 기획, 평가 단계에, 아니면 정책 연구원, 여가부, 아니면 부처의 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는 방법을. 협의체를 하시든

아니면 위원님이 다른 분들한테 들었든, 다른 창구로 하시든 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행정제 7)

“결국에는 계속해서 연구진들과 정책당사자들 간에 소통을 해서 공무원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이런 활동 검증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책전문담당자들이 이런 것들을 검증해내고 활용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간다면, 그에 맞춰서 질의서 질문도 좀 구성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질문 하나 갖고는 안 되고 얼마만큼의 세트를 구성해줘서 그것이 나중에 이 정책에 뒷받침되는 자료를 만들어주는, 연구진들이 그런 전문적인 걸 좀 기여해 주셔야 되거든요. 결국엔 두 기관 간의 소통이 잘 되어야 하고, 자주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행정제 8)

○ 중앙에 통계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지방정부와 데이터 네트워크 강화

“컨트롤타워는 별도로 있고, 중앙은 따로 있고, 정부부처나 연구원은 전부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기관이 돼야하고, 동시에 데이터를 쓰는 기관이 돼야 해요. 그래서 부처와 부처의 정책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을 놓고, 중앙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거죠.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예민한 각자의 자료는 주기 싫어서 서로 데이터 공유가 안 되니까. 여기다 다 줘서 가공해서 던져주면 어디서 나온 데이터인지 모르게 되거든요. 이 중앙만 잘 되면, 예를 들어 교육부, 문체부, 외교부에서 자료를 갖고 있으면 그걸 가공해서 제공해 주는 경우에 주는 자료가 어디서 온 건지 몰라요. 그러면 부처 간에 흥 볼 것도 없고요.” (행정제 5)

“데이터 통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앞으로 정책연구원 같은 데서 데이터를 많이, 통계를 많이 구축을 해 놓으시면 사실 그걸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건데, 전산적으로 구축되어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행정계 1)

“저희 같은 경우도 기재부에서 모든 설문조사나 통계자료가 필요하다면 연구원 통계센터에서 설문조사 다 처리하고 통계분석 같은 경우는 원내 박사님들과 어레 인지를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제일 필요한 정보를 과연 누구에게 물어봐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커뮤니케이션 파트너를 마련해주는 등 (중략...) 기재부와 원내 박사님들과 커뮤니케이션 루트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하나의 루트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계 2)

○ 청소년 전문가 및 통계 전문가 확보

“결국은 청소년 관련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충분하게 확보가 될 필요가 있고, 청소년 전문가라고 하는 연구자, 정책관련자,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 목소리가 구심점이 되어서 연합할 때 청소년 관련 예산도 늘어나고 전문성도 더 확보될 수 있는, 소위 많은 사람들이 그 분야에 종사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고급인력들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더 좋은 연구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계속 피드백 되면서 더 발전된 연구가 나올 수도 있고요.” (행정계 2)

“아무래도 통계관련해서 그런 전문적 인력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행정계 3)

“협력에 앞서서 정책 전문기관의 전문성이 더 깊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KEDI나 청소년 상담, 정책 연구원같은 곳들. 분야는 되게 넓은데,

전문 분야로 들어갔을 때 그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인력의 층이 되게 얇잖아요. 선수 층이 얇다는 거 거든요. 그리고 이 분들이 깊이 있게 장기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직은 충분치 않은 것 같고. 그런 전문 인력들이 많아졌을 때 기본적인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계 4)

3) 증거기반정책 수립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정책관련 기관의 역할

(1)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청소년통계 관리에 있어 관련 주무부처의 역할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청소년통계 관리에 있어 관련 주무부처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증거기반정책이 가능한 예산 투입, 정책 결정 책임자의 통계기반 정책 수립 인식 제고, 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데이터 구축,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 기본 통계 생성 및 보고서 작성 시 관계 부처와 수시 연계가 그것이다.

○ 증거기반정책이 가능한 예산 투입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분야처럼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에 있어서도 약간 부족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행정계 2)

“우선 계획 수립하려면 단체에 돈을 빌려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부처에서 정보 담당관실에서 돈이 꼭 필요하니까 보고서에 연구를 해 달라, 복지부 요청 정책 예산으로. 기재부에 딱 던져줘야 해요.” (학계 6)

○ 정책 결정 책임자의 통계기반 정책 수립 인식 제고

“실제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나 의도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학계 4)

“전북의 지표를 우리가 한 번 경험했는데, 전부 민주적이고 정보에 민감하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며 책임자가 통계를 얼마나 언급하느냐가 첫 번째예요.” (행정계 10)

○ 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데이터 구축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여야,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성을 기반으로 해서 자료가 나가줘야 될 것 같은데. 자료 전반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행정계 1)

“정책 기획할 때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도 기본계획 처음에 작년에 설계할 때 정책과에 있어서 처음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때 당시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 거예요. 기존의 자료들이. 그러다보니 윗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 어떤 제안이 있다고 하면, 이번 에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할 때,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하려면 참여도 해야 되고, 참여, 활동, 보고, 복지 뭐 이렇게 쪽 항목이 있고, 그 항목에 대한 어떤 앞으로 21년까지 뭘 할 것인가 기존에 한 것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가려면, 이에 대한 사전 연구가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때,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행정계 3)

“의사결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걸 파악하는 거거든요. 문제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크게는 데이터가 말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면, 실업률이 높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은 데이터가 말해주는 현장의 문제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는 데이터가 말해준다고 보다는 현장의 전문가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행정계 4)

“아마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데이터 얻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면담해봐야 하는데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주변에 잘 아는 사람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 의견 들어봐야 어차피 답은 뻔하거든요. 전문가들도 어느 수준을 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데이터는 교육부에서 가져오면 돼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은 이 아이들에 대해 해마다 설문조사 같은 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인터넷 접속기록이라든가 찾아내야 해요. 경찰서 기록이라든가. 청소년증 활용 기록 같은 거요. 그래야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주민증이든 청소년증이든 혜택을 주고, 카드가 쓰인 용도를 찾아내야 해요. 피시방도 좋고. 학교밖 청소년들이 몇 시에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지금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행정계 5)

○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

“전문성이 좀 부족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부처가 청소년 업무를 갖고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국가청소년위원회 있을 때까지만 해도 좀 그런데, 복지부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 청소년 업무를 예를 들면, 주무관 때부터 했던 사람들이 지금 관리자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부에서 과장급이라고 하면

한 명도 없죠.” (행정제 2)

○ 기본 통계 생성 및 보고서 작성 시 관계 부처와 수시 연계

“앞으로의 각각 대부분 연구원들의 많은 역할 중 하나가 기본통계를 생성하고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 걸 할 때 관계부처와 자기의 정책의 주 관련부처와 관계부처들이 있는데, 이걸 얼마만큼 organizing(조직화)을 하고 그걸 갖다가 전자로 해서 의견을 받고 수렴회의를 하고, 하는 식의 그 실적을 관리해 주는 것. 그것에 따라 1차, 2차 수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반영이 됐고. 그 사람들 심지어 우리 부에서 검토의견 상 없다든지, 이런 걸 의무적으로 받아서 이런 것들이 누적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 역할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뭔가를 의무적으로 넣어야겠죠.” (행정제 8)

(2) 청소년 통계관련 컨트롤타워의 필요성과 역할

전문가들은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청소년통계 관리에 청소년 통계관련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통계관련 컨트롤타워 조직은 청소년정책의 평가를 지원하며 청소년정책과 관련한 연구의 전문성을 제고, 청소년통계 관련 기관별 업무조정 역할에 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충분한 예산지원과 통계관련 컨트롤타워 조직은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정책지향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 정책 평가를 지원하는 역할

“평가센터라는 거기에 한 팀으로라도. 왜냐면 이게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책 입안이나 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면 정책분석평가 센터의 메인 기능 중에 하나로 이걸 확보하고, 정책을 평가하고 이런 기능들을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고.” (학계 5)

○ 청소년 데이터 관련 전문성 제고(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 필요)

“한 연구자가 청소년에 대해 연구를 하는데, 청소년 연구라면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일반적 현상 외에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의 문제를 더 깊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연구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구체적인 사례가 제가 봤을 땐 소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의 일반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삶에 깊이 들어가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른 각도로, 다른 주제로, 예를 들면 가족과 관련된 청소년의 문제, 또는 여러 유사한 그런 부분에서의 주제들이 더 깊이 연구되고, 의견이 나누어지고. 그렇게 청소년 연구 분야의 종사자들이 범위를 다각적으로 높이고, 지속적으로 그 분야 종사자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행정계 2)

○ 컨트롤 타워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국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한다면 국가가 나름대로 서포트가 이뤄져야 할 거고. 정책연구원이 어디서 돈을 만들겠어요. 하더라도 여가부를 통해서 하거나 기재부에 직접 가서 돈을 따와서 하든가. 그런데 이게 연구를 위한 사업이라면 정책연구원이 직접 따와야겠지만, 국가 전체적인 청소년통계, 정책적인 활용도, 지자

체의 활용도, 현장의 활용도와 연결 된다면 통계를 바라보는 눈을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학계 5)

“정부부처가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부처는 기본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큰 방향을 설정하면” (행정계 4)

○ 청소년통계 관련 기관별 업무조정

“기관별로 업무조정을 부처가 해줘야 되거든요. 컨트롤타워에 데이터를 내줘라, 이 역할을 해 줘야 해요.” (학계 6)

○ 정책 방향과 목표 설정

“정책이 어떻게 가야될지에 대한 방향을 수립하고 목표를 가지고 그런 것이지만,” (행정계 6)

4) 청소년정책에서 통계활용의 효과성

행정계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청소년 통계 데이터 활용의 효과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기획의 설득력 향상이다. 즉, 통계 데이터와 같은 근거를 들어 정책을 제시했을 경우 일반화가 가능하고 설득력이 높아진다고 응답했다. 둘째, 높은 정책효과성이다. 셋째는 정책 기획,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사후 관리까지 정책의 일관성이 높아지며 보다 확고한 정책을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통계를 활용한 정책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흐름이 파악이 가능해 미래까지 예측하는 효과도 있다.

○ 설득력 높은 정책 주장 가능

“아무래도 말로 하는 것 보다는 증거가 있으면 확실히 우리 주장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타당성이 높고 설득력도 있죠.” (행정계 4)

“아무래도 우리가 정책을 할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반화를 시켜야 되는데, 현상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청소년들의 직접적 요구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책은 그 미치는 영향이 한 개인이 아니라, 단체, 청소년 전체이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계 6)

“요즘은 정책을 활용하고 강화하고 확대하는데, 실태가 어떤지를 많은 분들이 자꾸 물어보세요. 현재 국회나 기재부의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이들이 문제가 있고 아동이 문제 있다고 하는데, 실태를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죠. 옛날엔 ‘어렵습니다.’ 하고 그냥 말로만 풀었다면, 이제 우리의 말도 중요하지만, 왜냐면 우리가 말하는 게 약간 정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정량적인 부분은 데이터를 가지고 ‘자, 보라. 청소년이 몇 명이고, 학교 밖이 몇 명이고, 우리 아이들이 매체를 어떻게 쓰고 있고.’ 하는 것들을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행정계 8)

○ 정책집행과 평가단계에서 활용

“가족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아동과 부모 간에 올바른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서 학대예방을 하거나, 좋은 가족 관계를 형성해서 우리 사회에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참고했습니다.”

(행정계 2)

“학교폭력자치위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얼마나 빈번하게 열리고 있는지, 그걸로 학교폭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거죠.” (행정계 5)

“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요.” (행정계 9)

○ 정책 효과 제고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피해를 받더라. 그래서 부모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줌으로 부모와 아동이 개선될 수 있는,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고자 했습니다.” (행정계 2)

○ 정책 기획부터 사후 관리 시 근거 사용 가능

“어쨌든 정책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나중에 사후관리 할 때도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성과 비교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행정계 5)

“통계기반은 어떤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도 훨씬 더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계 6)

○ 정책 기획 시 현재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 예측 가능함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가 어떤 자료를 할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흐름이라든지 예측가능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위해서는 이런 자료가 필요하고, 이런 기본적 데이터가 없으면 정책수립은 불가능하죠.” (행정계 9)

5) 증거기반정책 수립 관련 사례

증거기반정책 우수사례로 청소년 인구 데이터의 활용이나 진로 교육의 필요성을 알려 진로 교사의 확충을 이끈 사례, 관련 부처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된 사례,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정책 발굴에 있어 임신한 청소년을 상담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청소년 임신가능성 인구를 예측해 출산 후 겪게 될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정책 개발한 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증거기반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문제를 예측하거나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 등 모집단이 불명확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책을 개발하기 힘들고, 효과성도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단순한 수치만으로 개발된 증거기반정책으로 10년 후의 정책을 계획할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우려의 사례도 지적하였다.

○ 청소년 인구 데이터로 여러 가지 증거기반정책 개발 가능

제일 대표적인 게 인구정책 인구데이터죠. 인구데이터를 보고 학교가 얼마나 필요한지, 대학이 지금 얼마나 포화상태에 있는지. 몇 년 뒤에 정원이 학생수보다 추월할 것을 알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대표적인 증거기반 정책 활용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행정제 8)

○ 증거기반을 통해 중학교부터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 필요함을 기재부에 알리고 진로교사를 확충해 만족도를 50%로 상승시킴

“2010년도에 처음으로 교육부에 진로교육과가 처음 생겼어요. 그때 진로교육

을 이수한 경우와 이수하지 않았을 때 고등학교 진학 후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 진로교육 받은 학생의 만족도가 2배가량 좋았어요. 그 조사의 목적은 증거기반으로 진로교육이 필요한 이유와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 학교에 교사 한명씩을 배치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기재부에서 예산 문제로 계속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대학교 졸업하고 자기 전공 따라서 취업하는 대학생들이 30%가 안 되고, 취업해도 오래있지 못하고 자기계발이 안되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원인을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제대로된 진로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중학교 때 진로교육을 강화시키면서 마이스티고, 일반고, 특목고 중 한 곳을 선택하게 하면 고등학교 가서도 자기 진로 잘 찾고 만족도가 커지는 결과를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족도가 50퍼센트 까지 올라갔어요.” (행정제 5)

○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가능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시스템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생산시스템을 신뢰합니다.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생산하는 통계나 여러 정책 자료 없이는 정책 개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복지부로 요청이 오면 우리가 제때 자료를 만들어서 줘야 차기 예산이 나와요. 보건복지부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 산하기관이 많잖아요. 산하기관에서도 통계생산하는 기관이 있으면 요청을 하고요. 보건의료는 지자체에 가서 시범사업을 많이 했는데, 당연히 효과성을 봐야하니까 통계가 들어오고. 처음부터 통계가 깔리고 그 다음에 연구부서가 오니까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든 게 또 행정데이터들이 있으니까.(중략..) 자료수집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질병정보나,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데이터가 있으니 그걸로

연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통합망, 지금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회서비스는 거기 다 기록 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분석할 수 있죠. 데이터가 가공이 되어 있을 때가 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분절되어 있으니까 연계, 통합, 공유 등의 개념을 통해 활용을 해보자는 거죠.(학계 6)

-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정책 발굴에 있어 임신한 청소년을 상담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청소년 임신가능성 인구를 예측해 출산 후 겪게 될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정책 개발

증거기반 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근거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데이터가 없었어요. 많은 고민을 하다 병원에 가서 임신 상담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임신가능성 인구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 분들을 어떻게 지원해주면 향후에 좋을지와 관련해서 임신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을 때 낳게 되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면 좋을지에 있어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정책을 발굴도 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 분들이 훨씬 더 위기를 극복하고, 역량도 강화하고, 생명권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았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행정계 3)

- 중도입국청소년의 모집단이 불분명해 정책을 개발하기 힘들고, 효과성도 낮음

중도입국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과 비슷하게 모집단이 불분명해요. 그러다보니 중도입국청소년의 개념이 각 담당 부처마다 달라요. 여성가족부는 좀 더 포괄적으로 되어있고, 다문화가족과는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 내에 있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에요. 중도입국청소년의 범위가 넓어서 다문화가족과에서 보는 결혼 이주

여성이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하기 전에 본국에서 전혼관계에서 낳은 아이와 한국에 와 있으면 중도입국청소년이에요. (중략..) 그러다보니 중도입국청소년 정책 관련해서 작년에 BH 보고한 게 있었는데, 모집단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작게 보면 8천으로 보고, 많은 데는 3만으로 보고, 민간도 헛갈린 거예요. 민간도 2만~3만이라고 보고. 그리고 대상이 정확하게 초점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정책도 뭘 해야 할지 애매하고. 법무부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외국인이라고 딱 규정하고, 왜 외국인에게 뭘 해줘야 되냐고 해버리니까요. 그런 거 할 때 보니까 중도입국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이 모집단이 없는 대상을 대상으로 정책을 개발할 때, 정확한 통계 데이터와 같은 증거가 없으니까 업무하거나 외부에 정책대상의 지원정책을 설득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행정제 4)

- 단순한 수치만으로 개발된 증거기반정책으로 10년 후의 정책을 계획할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미래의 직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A가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기계공학과 졸업생이 어디로, 몇 명이 필요한지. 1년 수급계획을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했던 업무 중에. 인력수급자체가 하나의 전망치는 될 수 있지만 100% 정확한 건 불가능하거든요. 10년 전에 했을 때도 A가 나오게 될거라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학생이 대학을 들어가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나이는 10년 뒤란 말이에요. 이걸 무시한 상태에서 데이터 기반의 통계수치를 믿고서 학과정원 조정이라든지 커리큘럼 조정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사회변화의 흐름에 못 따라가고 격리성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한 거죠. (행정제 4)

앞에서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증거기반

정책 수립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요약은 그림 <그림 VII-1>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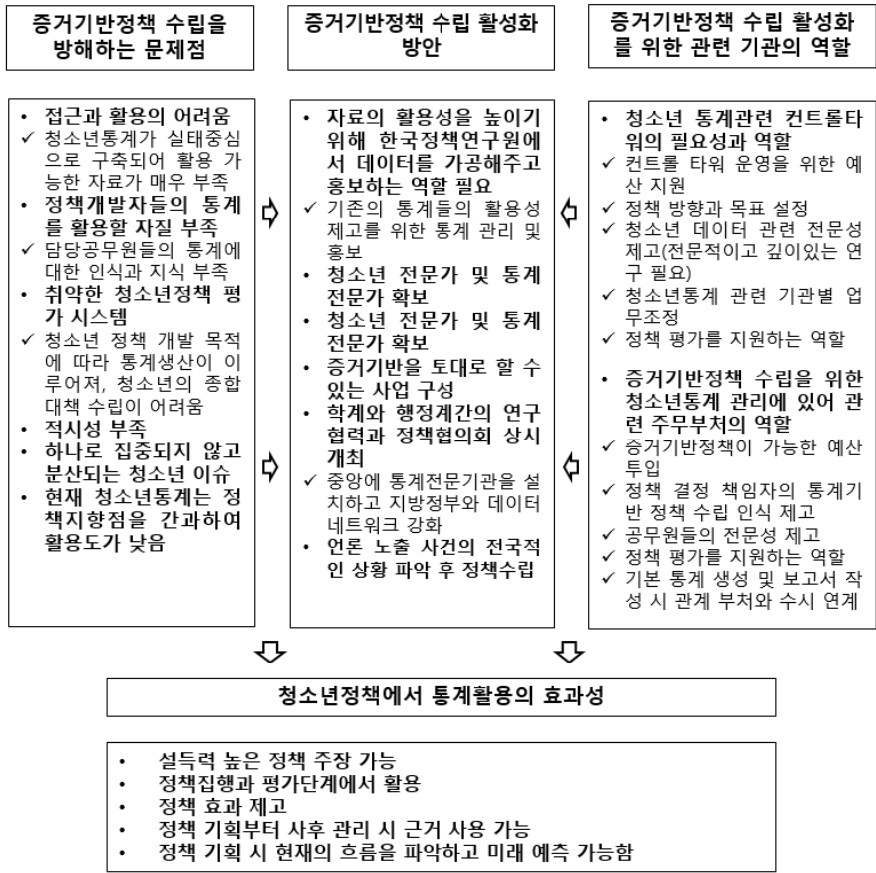


그림 VII-1.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저해하는 문제점에 따른 대응방안



제8장 정책제언

- 1. 청소년정책 담당자의 통계 자료 활용능력 제고
- 2.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상향식 의사결정 토대강화
- 3. 현안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통계의 적시성 확보
- 4. 행정구역 중심의 통계자료 구축 활성화
- 5. 전문적 통계활용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 내 전담조직 신설
- 6. ‘학교 밖 비위기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통계 개발

본 연구는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관리의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통계관리의 주요대상을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청소년통계에 한정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영향요인에 ‘자료의 과학적 객관성’, ‘자료의 활용성’, ‘청소년정책 대상자의 특성’, ‘정책추진 체계의 조직문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부 및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산하기관 및 국책기관, 그리고 일선 청소년지도사에 해당하는 694명의 설문조사와 계층적 분석기법(AHP)을 통하여 통계자료에 기초한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현황과 하위 영향요인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책추진 체계별 증거기반정책 수립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의 효과도 다중회귀분석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관련 전문가의 심층면접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단순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의 목록관리를 넘어 과학적이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청소년정책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관리방안을 다음의 6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제언하고자 한다.

표 Ⅷ-1. 본 연구의 정책제언에 대한 요약

정책방향	분석결과	세부 정책대안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광역	기초	국책	산하	시설
1. 청소년정책 담당자의 통계자료 활용력 제고	- 청소년통계가 정책수립보다 학술연구에 보다 적합 - 소속기관의 통계전문인력 확보 - 청소년 국책기관과 협력강화 필요 - 정책수립보다 행정처리와 국회의원 요구자료로서 통계활용도가 높음	1-1. 청소년정책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고유과제 성과 발표회(개방형) 1-2.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의 정책담당자 대상 정기통계교육	○	○	○	○	○	○
2. 증거기반정책 강화를 위한 상향식 의사결정 토대 강화	-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시설은 현재 정치적 의사결정과 전문가 자문에 의존하는 의견기반정책수립 빈도가 매우 높음. 게다가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과 다소 거리가 멀어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토대와 문화가 부족	2-1. 정책학습동아리 구성 2-2. 여성가족부내의 정책품질관리체계 운영	○					○
3. 현안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통계의 적시성 확보	- 청소년정책의 현안에 대한 정책수립을 할 수 있는 자료의 적시성이 매우 부족	3-1. (가칭) 청소년정책 전문패널				○	○	○
4. 행정구역 중심의 통계자료 구축 활성화	- 청소년정책의 신규개발과 개선 모두에서 행정통계의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 - 청소년관련 행정통계를	4-1. 행정구역 중심으로 청소년정책평가자료 구축 및 공표 4-2. 청소년정책	○	○	○	○		○

정책방향	분석결과	세부 정책대안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광역	기초	국책	산하	시설
	단기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점차 확대가 필요	성과관리 제도화						
5. 전문적 통계활용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 내 전담조직 신설	- 현재 청소년정책 담당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스스로 통계를 찾고 활용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통계분석활용의 지원이 요구 - 특히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AHP)하므로 여성가족부 내부에 전문통계활용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	5-1. (1안) 여성가족부내의 '(가칭)전문통계활용지원계' 설치 5-2. (2안) 여성가족부내의 '(가칭)전문통계활용지원담당관' 설치	○			○		
6. 학교 밖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통계 개발	- 청소년통계에서 조사대상의 특성을 제일 반영하지 못한 집단이 '학교 밖 비위기 청소년과 청년'인 것으로 파악	6-1. 광역시 단위(수도권)에서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자료 구축 6-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추가사업 신설		○		○		○

* 주) 중앙: 중앙부처(여성가족부), 광역: 광역자치단체, 기초: 기초자치단체, 국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산하: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산하기관, 시설: 일선 청소년시설

1. 청소년정책 담당자의 통계자료 활용능력 제고

표 Ⅷ-2. 청소년정책 담당자의 통계자료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정책방향	세부 정책대안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광역	기초	국책	산하	시설
1. 청소년정책 담당자의 통계자료 활용능력 제고	1-1. 청소년정책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고유과제 성과 발표회	○	○	○		○	
	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정책담당자 대상 정기통계교육						

1) 제언배경

앞선 분석결과를 보면 현재 구축된 청소년통계의 절대적 수준도 미비했던 것도 있지만, 관련 정책담당자의 낮은 통계자료 활용성이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일선 시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차원에서 통계자료를 활용한 청소년정책 분석결과와 객관적으로 도출된 청소년정책을 많이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통계활용이 필요한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연구기관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2) 정책대안

앞선 제언의 배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는 먼저, ‘1-1. 청소년정책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고유과제 성과 발표회(개방형)’를 제안하고자 한다. 실제 정책

담당자는 학술연구자가 아니므로 통계의 활용성은 직접적인 통계의 가공능력보다도 자료를 통한 논리적인 정책수립과 제안을 자주 접하는 것에서 그 능력이 신장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의 전반적인 청소년정책을 연구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정부출연과제의 경우 실제로 그 성과가 매년 중앙부처 공무원에게도 잘 전달되고는 있지만, 보다 접촉 밀도를 높이는 것이 일선 주무부처의 통계활용능력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 2018년 4월 3일에 개최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 간의 ‘상반기 정책연구협의회’에서도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고유과제 성과와 여성가족부 정책담당자 간의 긴밀한 성과공유가 진행되기를 희망하였다. 특히 통계자료 활용능력이 모든 정책추진체계별로 미진함을 고려할 때, ‘1-1. 청소년정책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고유과제 성과 발표회(개방형)’는 고유과제 수행 이듬해 초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과 시설 담당자를 초청하는 공개발표회의 형식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의 경우 대상이 성장하기 때문에 단순 평균의 기술 통계만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산하기관 그리고 일선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하여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연간 약 2회 통계교육을 하는 ‘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의 정책담당자 대상 정기 통계교육’도 제언하고자 한다.

3) 관련 추진체계

분석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청소년통계에 있어서 활용이라는 관리적 측면은 모든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에서 문제점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산하기관 그리고 일선 청소년시설에서 통계자료 활용능력 제고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

가족부와 일선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통계 관리 측면에서 활용성이 가장 취약하므로 앞서 제안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개방형 고유과제 성과발표회 혹은 정기 통계교육 참여를 우선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기대효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방형 고유과제 성과발표를 할 경우,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통계 파악과 논리적 정책수립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것이며, 이는 통계활용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단위 프로그램의 실행에만 관심을 가져왔던 일선 청소년시설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청소년통계가 학술적 성격이 강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했을 때, 정책 근거의 핵심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도 현장에서 필요하며 해당 정책에 중요한 통계가 무엇인지 더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정부출연과제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정책 담당 공무원과 일선 시설 종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통계교육을 하는 것은 일선 청소년정책 담당자의 통계활용 욕구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자체기관의 홍보와 위상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상향식 의사결정 토대강화

표 Ⅷ-3.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상향식 의사결정 토대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정책방향	세부 정책대안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광역	기초	국책	산하	시설
2. 증거기반정책 강화를 위한 상향식 의사결정 토대 강화	2-1. 정책학습동아리 구성						
	2-2. 여성가족부내의 정책품질 관리체계 운영	○					○

1) 제언 배경

전술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청소년통계의 관리측면에서 여성가족부와 일선 청소년시설은 타 조직보다 하향식 의사결정구조가 강한 것도 큰 장애요인이었다. 특히 이는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조직문화의 유연성보다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조직 특성상 인사적체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과단위로 세밀하게 분화되었고 이에 부처 간 장벽이 높아지면서 다소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의 특징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일선 청소년시설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위탁운영이 많다. 위탁운영의 경우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으나 계약관계상 지자체와 수직적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향적 의사결정구조가 강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가 상향적 의사결정의 특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이 각각 기초자료분석을 통한 정책 근거와 정책기획안을 상호교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내부 조직운영이 적합한 대안이다.

2) 정책대안

과거 경제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국무총리 소속의 경제기획원은 조직 내의 정책 학습조직을 운영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의 의사결정구조를 상향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부처 역사상 증거기반정책을 위한 의사결정 변화의 우수사례로 꼽힌다.¹⁰⁾ 따라서 여성가족부나 일선 청소년 시설 내부에 정책학습동아리(2-1. 정책학습동아리 구성)를 운영하면 상향식 의사결정과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학습조직을 부처별로 확대한 것이 정책품질관리 체계이다. 정책품질관리 체계는 의사결정을 포함한 일련의 정책과정을 제고하는 정도를 의미한다(행정안전부 행정관리담당관, 2008). 구체적으로 국무조정실(2005)는 정책품질관리 추진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운영위원회를 상위로, 아래로는 자문위원회와 대상정책별 학습동아리를 두고 있으며, 초기에는 기본적 지식이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단일의 학습조직을 운영하다가 점차 정책별로 분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품질관리체계(2-2. 여성가족부내의 정책품질관리체계 운영)를 여성가족부에 도입하면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청소년통계활용과 상향식 의사결정의 도입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즉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실국장이 위원이 되며, 교수나 전문가 집단이 자문위원이 된다. 그리고 각 정책별로 분과를 구성하여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이다.

10) 본 내용은 2018년 9월 28일 11시 30부터 14시 30까지 개최된 '고유과제 자문회의'에 참석한 이현국 교수(대전대학교)의 의견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림 Ⅷ-1 여성가족부 내의 정책품질관리체계 운영방안

*출처: 국무조정실, (2005). 정책품질관리 매뉴얼.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3) 관련추진체계

‘2-1. 정책학습동아리 구성’과 ‘2-2. 여성가족부내의 정책품질관리체계 운영’은 앞선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중에서도 하향식 의사결정구조가 강한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일선 청소년시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정책품질관리체계’ 운영이, 그리고 일선 청소년시설은 ‘학습동아리 구성’과 운영이 적합하다.

4) 기대효과

위에서 제안한대로 ‘2-1. 정책학습동아리 구성’과 ‘2-2. 여성가족부 내의 정책품질관리체계 운영’은 조직 내의 정책전문성, 통계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활용을 강조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통계활용을 통한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수준과 정책전문성이 제고되면 조직 내의

일방적 지시와 역할의 모호성과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전반적으로 객관성과 정책 효율성도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현안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통계의 적시성 확보

표 Ⅷ-4. 현안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통계의 적시성 확보 정책대안

정책방향	세부 정책대안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광역	기초	국책	산하	시설
3. 현안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통계의 적시성 확보	3-1. (가칭)청소년정책 전문패널				○	○	○

1) 제언배경

앞선 분석에서 제시된 표 V-14의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통계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자료의 적시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청소년통계의 낮은 ‘자료의 적시성’은 전반적인 통계의 활용과 통계를 활용한 정책수립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청소년 통계의 낮은 적시성은 정책 수립 통계의 기초인 행정통계를 통해서 보완이 가능한데, 표 V-25와 표 V-2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소년통계는 이마저도 취약하다. 물론 앞으로 행정통계 구축 강화를 통해 이를 극복하여야 하겠지만 행정통계의 확대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일시적으로는 대표성과 즉시성을 모두 확보한 전문가의견을 관리하여 이를 정책근거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2) 정책대안

본 연구는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청소년통계 관리방안을 위한 것이며,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가장 핵심적 근거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자료이다. 그렇다고 전문가의 의견이 반드시 비과학적인 것은 아니다. 단, 전문가의 의견은 대표성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근거로서 다소 미비할 뿐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이라도 그 대표성을 확보하여 의견의 일반화가 가능하다면 마땅히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주요통계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1991년부터 약 30년 동안 ‘경제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현안 발생 시 적시성 있는 정책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경제정책자문단은 교수, 전문가, 실무자 등의 그룹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응답을 뿐만 아니라 위촉된 전문가 집단의 임기를 1회 3년 기준으로 3기, 즉 총 9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무작위 선정을 통하여 이들의 대표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¹¹⁾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통계의 낮은 적시성을 보완하는 방법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내의 ‘(가칭)청소년정책 자문패널’ 운영하는 것이다. 특히 ‘(가칭)청소년정책 자문패널’은 학계전문가 및 17개 광역 시도별 활동 및 보호복지시설 현장전문가 각 100명 이상 총 1,70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정책자문위원회’와 같이 운영한다면 보다 적시성 높은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통계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11) 본 내용은 2018년 9월 12일 10시부터 14시까지 개최된 ‘고유과제 심층면접 조사’에 참석한 정영호 팀장(한국개발연구원)의 의견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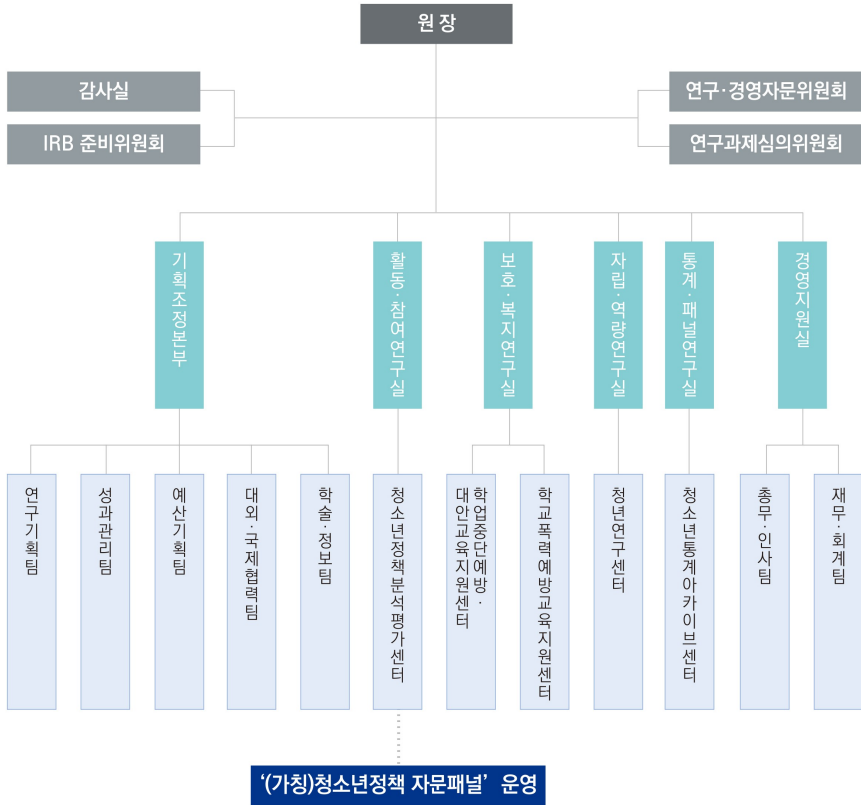


그림 VIII-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의 ‘(가칭)청소년정책 자문패널’ 운영

3) 관련추진체계

‘(가칭)청소년정책 자문패널’의 운영은 전문가 인력풀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조사를 위한 통계적 전문성 그리고 청소년 관련 현안이슈의 파악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소년정책의 기획과 평가에 관련하여서는 학술전문가의 의견이, 그리고 집행과정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청소년정책 관련 산하기관

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그리고 일선 청소년시설의 협조가 필요하다.

4) 기대효과

위에 제언한 바와 같이 ‘(가칭)청소년정책 자문패널’을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청소년정책 현안이슈에 대하여 빠른 정책근거자료 확보가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정책자문위원단’은 주무 부처에서 현안정책분석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대표성과 적시성이 있는 통계자료에 기초한 정책개발 자료를 1일 만에 제공할 수 있다. 단,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우 자체 센터의 여론조사 상주 인력이 있어 1일 만에 가능한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가칭)청소년정책 자문패널’을 설치하면 이 같은 통계자료 확보와 분석이 약 5~6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4. 행정구역 중심의 통계자료 구축 활성화

표 VIII-5. 행정구역 중심의 통계자료 구축 활성화 정책대안

정책방향	세부 정책대안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광역	기초	국책	산하	시설
4. 행정구역 중심의 통계자료 구축 활성화	4-1. 행정구역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평가자료 구축 및 공표	○	○	○	○		○
	4-2. 청소년정책 성과관리 제도와 ‘지역별 성과토론회 개최’						

1) 제언배경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에 있어 행정통계의 필요성에 비하여 그 구축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V-25와 표 V-26을 보면, 청소년관련 신규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행정자료이며, 기존정책개선에도 필요한 것은 행정자료이다. 그러나 현재 아동·청소년·청년 통계는 대부분 실태조사 중심이어서 정책개발과의 연계성도 약하며 행정통계자료 구축 또한 취약하다.

행정통계는 해마다 축적되어야 하며 최소 5년 이상 되어야 그 정책적 분석과 활용이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특성으로 말미암아 행정통계가 단기간에 구축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성과정보부터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정책대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행정통계는 실태조사 이외에는 기초토대가 전무하다. 따라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청소년정책의 기획, 집행, 환류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중심의 평가 자료부터 구축하고 공개(4-1. 행정구역 중심으로 청소년정책평가자료 구축 및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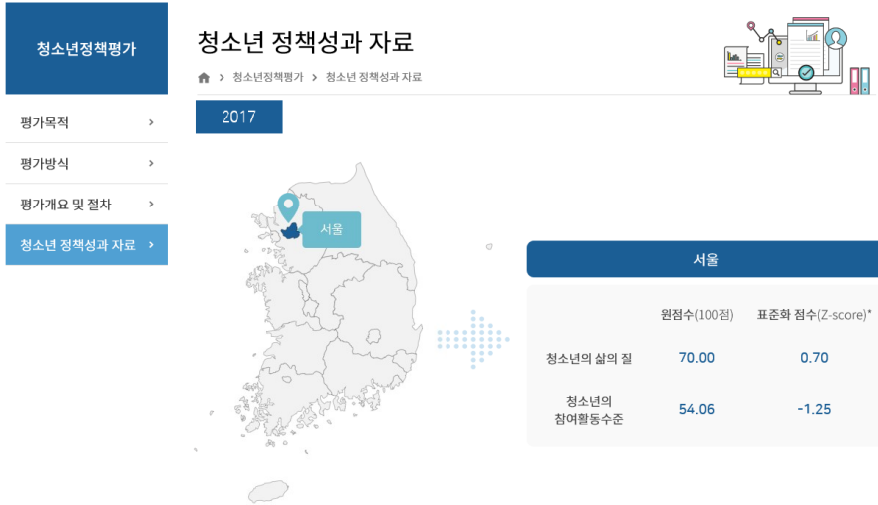


그림 Ⅷ-3. 지자체 단위로 평가자료를 구축한 행정구역 통계의 사례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분석평가센터는 그림 Ⅷ-3과 같이 지자체 평가결과를 행정구역 단위로 구축하여 연도별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앞으로 청소년시설평가, 청소년관련 재정, 인력, 청소년정책인프라 등 평가자료 및 각종 정책지표를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축하여 웹상으로 공표하고 정책개발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행정통계의 취약함은 곧 청소년정책을 통한 성과정보의 취약을 의미한다. 실제로 현재 행정구역 단위로 추진되는 청소년정책의 객관적 성과정보 부재는 단기성과를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보다는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 그리고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우수사례의 단순 모방을 초래하며, 청소년관련 담당 공무원과 현장 전문가에게 그릇된 성과개념 인식을 야기한다(매

일경제, 2018. 9월 15일자). 따라서 위와 같은 행정구역 중심의 통계자료 구축도 중요하지만, 중앙뿐만 아니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청소년정책에 대한 증거기반정책 수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평가결과에 대한 행정구역별 공유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4-2. 청소년정책 성과관리 제도화 ‘지역별 성과토론회 개최’). 실제로 ‘청소년기본법 14조’에 따라 추진되는 지자체 청소년정책의 평가결과를 행정구역별로 분류하고 유사한 특성을 가진 곳끼리 묶어 ‘지역별 성과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3) 관련추진체계

행정통계의 구축은 통계청과 협의도 필요한 영역이기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정책관련 성과정보 자료를 구축하고 공표할 수 있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역할도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구역의 단위인 만큼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단위의 청소년정책 인프라 통계자료는 일선 청소년시설 현황 그리고 청소년지도사의 의견을 지표화하여 행정구역 자료와 연계하는 내용도 필요하므로 일선 청소년시설도 관련 정책추진체계에 포함된다.

4) 기대효과

‘4-1. 행정구역 중심으로 청소년정책평가자료 구축 및 공표’ 및 ‘4-2. 청소년정책 성과관리 제도화, 지역별 성과토론회 개최’를 추진할 경우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행정통계 자료 구축의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정책의 수립과 정책대안 마련에 있어서 성과정보는 필수적이므로 활용도 높은 행정통계가 될 것이다. 나아가 행정통계자료 구축뿐 아니라 ‘4-2. 청소년정

책 성과관리 제도화, 지역별 성과토론회 개최’는 청소년 분야의 행정통계 활용에 대한 중요성과 청소년정책의 올바른 성과정보 인식을 확산하는 것에 공헌할 것이다.

5. 전문적 통계활용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 내 전담조직 신설

표 Ⅷ-6. 전문적 통계활용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 내 전담조직 설치

정책방향	세부 정책대안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광역	기초	국책	산하	시설
5. 전문적 통계활용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 내 전담조직 신설	5-1. (1인) 여성가족부 내의 ‘(가칭)전문통계활용지원계’ 설치	○			○		
	5-2. (2인) 여성가족부 내의 ‘(가칭)전문통계활용지원 담당관’ 설치						

1) 제언배경

앞선 분석을 종합하여 보면 여성가족부와 일선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통계의 활용성 정도가 가장 낮으며, 정책담당자들의 청소년통계 활용 지원의 욕구는 높다. 이와 더불어 계층적 분석기법(AHP)결과,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정책추진체계는 여성가족부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여성가족부 내에 전문적 통계활용지원을 위한 전문조직을 신설한다면 청소년정책에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수준이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대안

먼저 여성가족부 내에 전문적 통계활용지원을 위한 전문조직을 신설한다면 정책과의 하위 부서로서 계 단위의 조직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경우 개별대상별로 다양한 과가 존재하여 특정과에 계 단위의 전문적 통계활용지원을 위한 전문조직을 신설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책기획관의 하위로서 ‘(가칭) 전문통계활용지원계’를 신설할 것으로 제안하며 이는 1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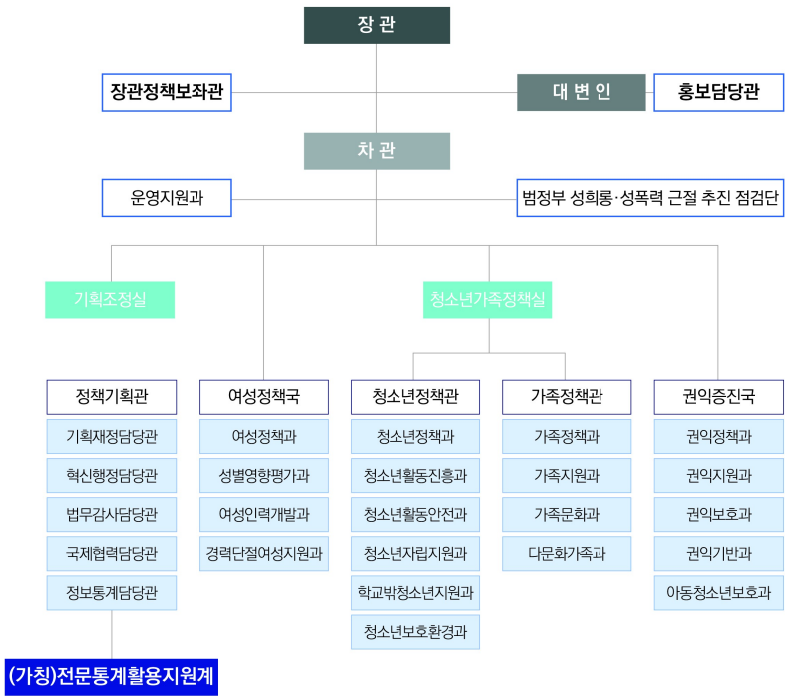


그림 Ⅷ-4. (1안) 여성가족부내의 ‘(가칭)전문통계활용지원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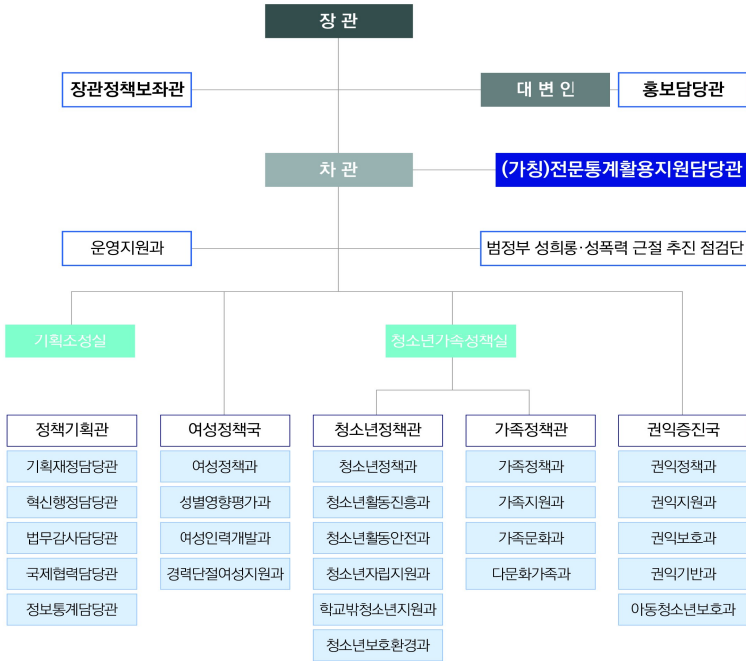


그림 Ⅷ-5. (2안) 여성가족부내의 ‘(가칭)전문통계활용지원담당관’ 설치

1안의 경우 정책과의 하위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가칭)전문통계활용지원계’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지만, 그 위상을 보다 격상시킨 2안도 가능하다. 즉 2안은 정책관 이상의 조직에서 전문통계활용지원을 컨트롤하는 전담조직으로 차관의 스텝조직으로 두는 것이다.

1안과 2안의 전문적 통계활용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 내 전담조직은 통계청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정기적 협의를 하여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청소년정책 담당 공무원의 전반적인 통계활용의 지원을 담당한다.

3) 관련추진체계

1안과 2안의 전문적 통계활용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 내 전담조직 신설에 있어서는 여성가족부가 가장 핵심적인 정책추진체계이다. 또한 추후 위의 조직이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지원과 협력도 필요하다.

4) 기대효과

정책의 전문가가 반드시 통계활용의 전문일 필요는 없지만, 증거기반정책을 위한 통계관리에 있어서 통계활용은 가장 핵심적 사안이다. 이에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방법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할 때 통계활용의 컨트롤타워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다. 즉 전문적 통계활용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 내 전담조직이 신설된다면 일선 정책담당자의 통계활용 부담은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6. ‘학교 밖 비위기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통계 개발

표 VIII-7. ‘학교 밖 비위기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통계 개발

정책방향	세부 정책대안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광역	기초	국책	산하	신설
6. 학교 밖 비위기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통계 개발	6-1. 광역시 단위(수도권)에서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자료 구축						
	6-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추가사업 신설		○		○		○

1) 제언배경

앞서 분석한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관련 통계 중에서 가장 취약한 정책대상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인 ‘학교 밖 비위기 청소년’과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청년(후기청소년)’이며, 이들에 대한 통계자료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학교 밖 비위기 청소년의 경우 통계적 추적과 대상 발굴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주 원인이다. 또한 청소년 통계를 구축하면서 청년기의 통계로 확장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이 성인으로 이행하면서 조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통계구축의 어려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청소년 통계의 사각지대의 존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청소년 정책수립을 어렵게 한다. 이에 ‘학교 밖 비위기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통계 개발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통계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정책대안

현실적으로 청소년관련 추적연구는 일선 광역단위 교육청이나 청소년관련 국책연구기관에서 실시한다. 그러나 이들이 청소년에서 청년이 될 때 추적조사가 단절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통계의 필요성은 높다.

“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과에서도 약간 주목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대상 선정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24세로 해서 연속성 있는 실태조사를 광역시차원에서 실시하게 하면, 그 자료는 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청년과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후기 청소년을 별도로 통계반영하기 보다

는 아동, 청소년, 청년까지 한 번에 특성을 추적해보자. 전후를 다 포함하는 거죠 (○○○시청 ○○○주무관).”¹²⁾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도 있지만, 광역시 차원에서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추적조사하는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청년자료 구축과 증거기반정책 수립에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광역시차원의 조사의 경우, 대학으로 진학했을 때 추적조사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므로 거주인구 비율과 대학이 많이 있는 서울과 경기도가 연합으로 조사를 하는 것도 적합한 모델로 제언(6-1. 광역시 단위(수도권)에서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자료 구축)할 수 있다.

한편 학교 밖 비위기 청소년의 자료가 취약한 만큼 이들 대상으로 현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정책대안도 제안할 수 있다(6-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추가사업 신설). 특히 해당 사업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통계·패널연구실 통계아카이브센터에 새로운 사업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청소년 1인당 조사비가 10만원임을 감안하면 ‘학교 밖 비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추적하는 것은 약 2배정도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르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통계·패널연구실 통계아카이브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패널조사’라는 부가사업을 신설하여 약 1000명 정도 조사패널을 유지할 경우 사업비는 연간 약 2억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밖 비위기 청소년의 자료가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통계·패널연구실 통계아카이브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패널조사’를 새롭게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12) 본 인터뷰 내용은 2018년 9월 17일 11시 30분~15시 30분에 이루어진 ‘고유과제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진행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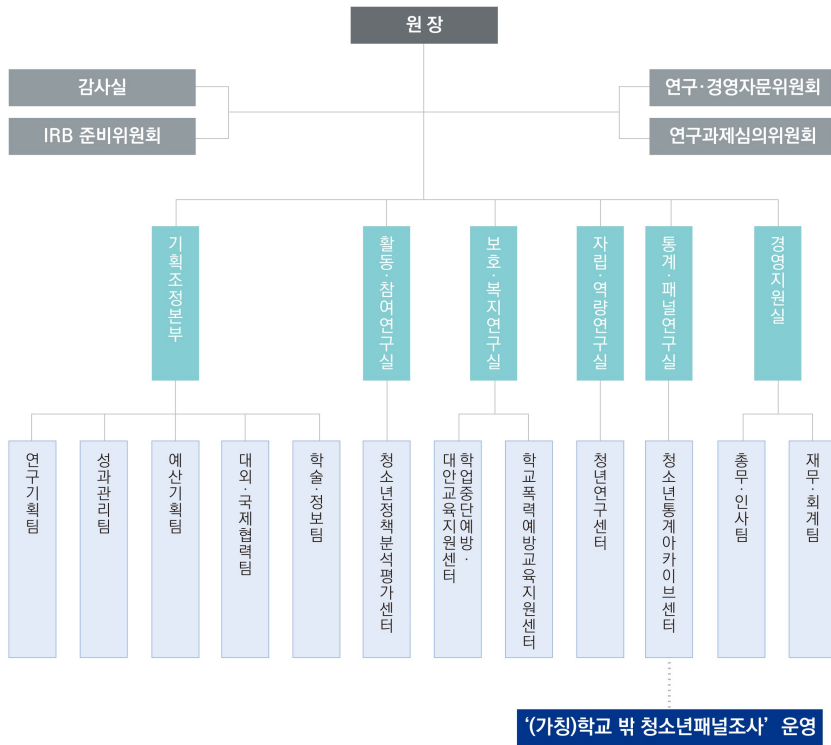


그림 Ⅷ-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아카이브센터 ‘학교 밖 청소년패널조사’

3) 관련추진체계

광역시 차원에서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추적조사를 하는 연구의 경우 광역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통계·패널연구실 통계아카이브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라는 부가사업을 신설하여 진행할 경우, 일선 청소년시설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므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일선 청소년시설도 주요 추진주체라고 할 수 있다.

4) 기대효과

이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과 ‘청년(후기청소년)’의 통계자료가 추가적으로 구축이 된다면 청소년통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광역시가 청소년기부터 연계한 ‘청년(후기청소년)’ 통계자료는 청소년정책이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할 수 있어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생애주기적 청소년정책개발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공계순, 서인해 (2006). 증거기반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이해와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1, 77-102.
- 국무조정실. (2005). **정책품질관리 매뉴얼**. 정부혁신시리즈 05-08-01,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김기현, 김창환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연구보고, 11-R06).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병배 (2017). 소년 보호관찰 분야에서의 증거기반정책 채택과 향후 과제. **보호관찰**, 17(1), 41-81.
- 김영미, 박미진 (2007). 증거기반실천모델의 채택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 연구. **사회과학연구**, 23(2), 281-303.
- 김이배 (2015).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42(3), 217-246.
- 김현철, 임희진, 정효진, 민경석, 안지선, 김신경 (201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연구보고 13-R0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최인재, 임지연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II** (연구보고 08-R03-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나민주, 이광현, 오범호, 최수영, 강현, 김민석, 박태양, 김윤영, 김수빈(2014). **지방교육 행정정보·통계 관리·활용 방안** (연구보고 2014-2). 청주: 한국지방교육연구소.
- 노법래 (2015). 증거기반 사회정책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big data) 와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정책 수요 분석에의 적용: 청소년 자살과 정신건강 서비스 사례

- 를 중심으로. **2015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발표논문집**, 1033-1051.
- 박상곤 (2016). 증거를 기반으로 한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 논의: 국내관광과 해외 관광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관광정책**, 65, 32-37.
- 박성호, 김진희, 김명진 (2016). 고등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 통계 개선 방안. **평생학습사회**, 12(1), 59-84.
- 박철현 (2014). 증거에 기반한 형사정책의 발전과 국내 적용방향. **형사정책연구**, 25(2): 123-157.
- 신선아, 조성식 (2016). 증거기반 과학기술정책 관리도구의 평가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와 FGI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년 추계학술대회**, 383-391.
- 오병돈, 김기현 (2013). 청소년복지정책 대상규모 추정: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4), 29-52.
- 오세영, 윤건, 오균 (2018). **증거기반정책을 위한 정부의 통계 구축 및 활용에 대한 현황 조사**.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오철호 (2015). 정책결정, 증거 그리고 활용-연구경향과 제언. **한국정책학회보**, 24(1): 53-75.
- 오철호 (2017). 문제제기: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의 연구와 적용.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7(2): 155-167.
- 유진은 (2015). 우리나라 교육 승인통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 유네스코 UIS 교육통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6(2), 175-199.
- 윤광석, 박경돈, 지규원 (2016). **정책수립 시 데이터 활용 강화방안 연구**. (연구보고 2016-04).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윤영근 (2012).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과 정책품질관리제도.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26.
- 윤주철 (2012). 증거기반정부 관점에서 본 조직개편: 조직진단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26.

- 이건 (2012). 증거기반정책 과정에서 서베이방법론의 역할 탐색.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21.
- 이석민 (2012). 정책평가제도의 변화가 증거기반의 정책관리에 미친 영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 35-68.
- 이윤빈, 신동평, 최배성 (2015). 증거기반 의사결정 적용을 통한 정부 R&D 예산 과정 개선 방안 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144-150.
- 정규진, 서인석, 김용희 (2012). 시스템다이내믹스와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고려한 증거기반 (Evidence-Based) 사회기반시설 정책수요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4): 95-126.
- 조정환 (2013). 증거기반(evidence-based) 체육정책,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15(3): 1-14.
- 통계청 (2018). **국내 승인통계 설명자료**.
- 행정안전부 행정관리담당관. (2008). **정책품질관리 매뉴얼**. 서울: 행정안전부.
- Davies, P.T. (1999). 'What is Evidence-Based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7(2), 108-121.
- Dunn, W. N. (2015). *Public policy analysis*. London: Routledge.
- Frey, K., Widmer, T. (2011). Revising Swiss policies: The influence of efficiency analyses. *American Journal of Evaluation*, 32(4), 494-517.
- Goerge, R., Voorhis, J. V. & Lee, B. j. (1994). Illinois's Longitudinal and Relational Child and Family Research Database.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12(3), 351-365
- La Caze, A. (2006). *Evidence-Based Policy: Promises and Challenges*. Sydney Centre for the Foundations of Science: University of Sydney.
- O'Dwyer, L. (2004). A Critical Review of Evidence Based Policy. *AHURI Final Report NO. 58*, May. Melbourne: AHURI Southern Research Center.

Rubin, A. (2013). *Statistics for evidence-based practice and evaluation*, 3rd. Edition. Belmont, CA: Cengage.

Saaty, T. L. (2008). Relative measurement and its generalization in decision making why pairwise comparisons are central in mathematics for the measurement of intangible factors the analytic hierarchy/network process. RACSAM-Revista de la Real Academia de Ciencias Exactas, Fisicas y Naturales. Serie A. *Matematicas*, 102(2), 251-318.

Sutcliffe, S. & Court, J. (2005). *Evidence-Based Policymaking: What is it? How does it work? What relev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London: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ODI).

[참고자료 및 사이트]

매일경제(2018.09.15.) 청소년사업 중복 막기 위해 지자체·교육청 협업을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582371>

연합뉴스(2018.01.10) 개헌 드라이브 건 문 대통령... '삶의 질' 높이기에 국정초점
(종합2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0/0200000000AKR20180110067852001.HTML?input=1195m>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easyViewStatis/customStatisIndex.do?vwcd=MT_TM1_TITLE&menuId=M_03_01 에서 2018년 4월 18일 인출.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Page.do?mmenu=1&smenu=3>) 에서 2018년 4월 20일 인출.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 <https://www.data.go.kr/>에서 2018년 5월 2일 인출.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홈페이지 <http://statistics.keis.or.kr/stats/index.do>에서 2018년 5월 18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s://www.ke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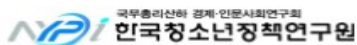
khome/main/intro/staffDetailForm.do에서 2018년 5월 11일 인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데이터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www.nypi.re.kr/archive/contents/siteMain.do>에서 2018년 4월 30일 인출.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org/education/evidence-based-policy-making-for-youth-well-being-9789264283923-en.htm>에서 2018년 5월 8일 인출.
EU Statistics 홈페이지 <http://ec.europa.eu/eurostat/web/youth/overview>에서 2018년 5월 9일 인출.
EU Statistics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childrens-well-being-2018>에서 2018년 5월 9일 인출.
미국 CWI 홈페이지 <http://www.soc.duke.edu/~cwi/>에서 2018년 6월 14일 인출.

○ — 부 록

부록

1.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설문조사 설문지

설문지연번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의 과학화를 위하여 통계, 연구결과, 실험결과, 전문가 의견 등과 같은 근거의 활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8년 7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 기관		담당자	
수행 기관		담당자	

- ☐ 「통계법」 : 본 설문에서 논의되는 ‘통계법’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함
 - (통계법 제3조)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 ☐ 「데이터」 : 관찰이나 실험, 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이나 각종 정보자료를 의미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1. 자료의 과학성 (신뢰도, 타당성)

문 1

귀하는 청소년과 관련 통계(승인통계와 비승인통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생산된 청소년 통계 및 데이터는 인지도가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생산된 청소년 통계 및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생산된 청소년 통계 및 데이터는 시의 적절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4) 현재 생산된 청소년 통계 및 데이터는 학술연구에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생산된 청소년 통계 및 데이터는 정책(사업 및 프로그램 포함) 추진에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6) 현재 생산된 청소년 통계 및 데이터는 행정자료와 잘 연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2

다음 청소년 통계생산 기관의 과학적 객관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음
1) 통계청(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①	②	③	④	⑤
2) 주무부처(여성가족부)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①	②	③	④	⑤
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①	②	③	④	⑤
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①	②	③	④	⑤
6) 광역시도의 직접조사	①	②	③	④	⑤
7)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직접조사	①	②	③	④	⑤
8) 일선 청소년시설의 직접조사	①	②	③	④	⑤

문 3

다음 청소년 통계자료 유형의 과학적 객관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음
1)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	①	②	③	④	⑤
2) 조사 통계(설문조사, 실태조사 등)	①	②	③	④	⑤
3) 가공 통계(기존 통계 정보를 활용)	①	②	③	④	⑤
4) 논문	①	②	③	④	⑤
5) 용역연구보고서	①	②	③	④	⑤
6) 전문가 의견	①	②	③	④	⑤
7) 인터넷, SNS 등의 비정형 데이터	①	②	③	④	⑤

문4

귀하께서는 재직하고 계신 기관이 생산하는 청소년통계의 과학적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항목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1) 소속 기관의 예산 확보	①	②	③	④	⑤
2) 소속기관의 전문인력 확보	①	②	③	④	⑤
3) 조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	①	②	③	④	⑤
4) 정책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①	②	③	④	⑤
5) 조사목적의 명확성	①	②	③	④	⑤

문5

다음은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영역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의 각 분야에서 구축된 청소년통계의 과학적 객관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음
1) 청소년 참여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 권리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 활동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 자립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 보호지원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 추진체계	①	②	③	④	⑤
7) 청소년(후기청소년)관련 정책	①	②	③	④	⑤

II. 자료의 활용성

문1

다음 청소년통계의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업무에 청소년 통계를 잘 활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속한 기관은 업무에 청소년 통계를 잘 활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2

다음 청소년통계의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청소년 관련 통계체계와 통계에 대한 일반적 현황을 잘 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청소년 관련 통계 및 데이터의 세부 내용에 대해 잘 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청소년통계 중에서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자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청소년통계 중에서 조사 통계(설문조사, 실태조사 등)를 자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청소년통계 중에서 가감 통계(기존 통계 정보를 활용)를 자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청소년통계 중에서 논문이나 연구용역보고서를 자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청소년통계 중에서 전문가 의견을 자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청소년통계 중에서 인터넷, SNS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자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3 다음 중 청소년 통계 자료의 활용차원에서 다음의 항목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비중요	비중요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자료의 편의성	①	②	③	④	⑤
2) 자료의 접근성	①	②	③	④	⑤
3) 자료의 충실성	①	②	③	④	⑤
4) 자료 목록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5) 자료 취합과 병합의 용이성	①	②	③	④	⑤
6) 자료제공의 적시성	①	②	③	④	⑤

문4 다음의 목적에 따른 청소년 통계활용의 활용도는 어떠하십니까?

구분	전혀 비이용	아주 낮은 이용	어느 정도 이용	자주 이용	매우 자주 이용
1) 내부 일반 행정처리	①	②	③	④	⑤
2) 정책수립의 근거자료	①	②	③	④	⑤
3) 국회의원의 요구자료 제출	①	②	③	④	⑤
4) 부처간의 협의	①	②	③	④	⑤
5) 언론과 이슈 대응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①	②	③	④	⑤

문5 다음의 청소년 통계생산 기관의 자료 활용도는 각각 어떠하십니까?

구분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음
1) 통계청(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①	②	③	④	⑤
2) 주무부처(여성가족부)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①	②	③	④	⑤
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①	②	③	④	⑤
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①	②	③	④	⑤
6) 직접 자료 수합	①	②	③	④	⑤
7) 기타	①	②	③	④	⑤

문6 현재 근무하시는 기관의 청소년 통계활용도는 어떠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기관은 담당자 스스로가 청소년 통계 및 데이터를 찾아서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기관의 통계전담 부서는 청소년 통계 및 데이터 탐색을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기관은 청소년관련 유관기관으로부터 청소년 통계 및 데이터 분석에 관한 지원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문 7

다음은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기관이 담당하는 정책(계획, 사업 및 프로그램 포함) 결정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기관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기관에서 담당하는 정책은 청소년 통계 및 데이터와 같은 계량적 근거에 의하여 결정되는 비율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기관에서 담당하는 정책 내용은 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비율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기관에서 담당하는 정책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비율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기관의 조직문화는 민주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기관의 조직 내 의사결정방식은 민주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8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기관이 청소년 통계 및 데이터를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1) 유관기관과 청소년 통계데이터 생성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 통계생산 시 준수규정	①	②	③	④	⑤
3) 생산통계에 대한 관리부서 제출과 관리	①	②	③	④	⑤
4) 유관기관과 '통계관리 및 활용' 하기 위한 컨트를 타워 조직	①	②	③	④	⑤

문 9

다음은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영역입니다. 귀하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각 정책목표별 청소년통계의 활용도를 체크해 주세요.

구 분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음
1) 청소년 참여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 권리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 활동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 자립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 보호지원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 추진체계	①	②	③	④	⑤
7) 청소년(후기청소년)관련 정책	①	②	③	④	⑤

III. 정책대상자의 특성

문 1

다음은 청소년 통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구축된 청소년통계는 다음 각 내용을 얼마나 잘 반영(반영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음
1) 청소년 육구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이 속한 지역적 정책환경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의 정책 참여활동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의 경제 참여활동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의 사회 참여활동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의 문화 참여활동	①	②	③	④	⑤
7) 청소년의 교육현장 참여활동	①	②	③	④	⑤
8) 재학생 중 비(非)위기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	①	②	③	④	⑤
9) 재학생 중 위기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	①	②	③	④	⑤
10) 학교 밖 청소년 중 비(非)위기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	①	②	③	④	⑤
11) 학교 밖 청소년 중 위기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	①	②	③	④	⑤
12) 청년(후기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	①	②	③	④	⑤

문 2

귀하는 현재 구축된 다음의 각 분야에 해당되는 청소년통계가 정책수혜자(청소년)의 특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음
1) 청소년 참여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 권리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 활동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 자립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 보호지원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 추진체계	①	②	③	④	⑤
7) 청소년(후기청소년)관련 정책	①	②	③	④	⑤

문 3

귀하는 청소년의 특성을 잘 파악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 데이터 융합' (기관 간 청소년 통계의 데이터 결합)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필요	불필요한 편	보통	필요한 편	매우 필요
①	②	③	④	⑤

문 4

청소년관련 신규 정책 개발에 있어 다음의 데이터 결합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비중요	비중요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행정자료 + 행정자료 결합	①	②	③	④	⑤
2) 행정자료 + 공공 조사 자료 결합	①	②	③	④	⑤
3) 행정자료 + 민간 조사 자료 결합	①	②	③	④	⑤
4) 공공 조사 자료 + 공공 조사 자료 결합	①	②	③	④	⑤
5) 공공 조사 자료 + 민간 조사 자료 결합	①	②	③	④	⑤
6) 민간 조사 자료 + 민간 조사 자료 결합	①	②	③	④	⑤

예 8

정책(계획, 사업 및 프로그램 포함) 과정에서 통계 및 데이터 활용 시 그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 정책(계획, 사업 및 프로그램 포함)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득	①	②	③	④	⑤
2) 정책(계획, 사업 및 프로그램 포함) 내용의 타당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3) 행정 전반의 효율성 향상	①	②	③	④	⑤

예 9

다음 각 정책(계획, 사업 및 프로그램 포함)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의 구축과 활용을 통한 증거기반 정책 수립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 정책 기획	①	②	③	④	⑤
2) 정책 집행	①	②	③	④	⑤
3) 정책 평가	①	②	③	④	⑤

IV. 정책수립의 특성 및 기관의 상대적 중요성 평가

☞ 각 항목의 질문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점수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예) 본 문항은 평가항목(A)가 평가항목(B)에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는 묻고 있습니다. 자료의 과학성(A)보다 활용성(B)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음과 같이 “①동등하다”를 기준으로 활용성(B) 쪽의 “⑤중요” ✓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 ① : 동등하게 중요 (두개의 요소가 동등하게 중요)
- ② : 약간 더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중요)
- ③ :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강하게 중요)
- ④ : 아주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매우 강하게 중요)
- ⑤ : 절대적으로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

☞ 번호가 클수록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 1

증거에 기반한 청소년정책을 수립 시 다음의 어느 항목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번	지	평가항목 (A)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제8차	제9차	평가항목 (B)				
			←							→						
1		자료의 과학성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자료의 활용성
2		자료의 과학성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책대상자의 특성
3		자료의 과학성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조직문화
4		자료의 활용성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조직문화
5		자료의 활용성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책대상자의 특성
6		정책대상자의 특성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조직문화

문2

증거에 기반한 청소년정책을 수립에 다음의 어느 기관이 역할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연번	평가항목 (A)	←										→										평가항목 (B)
		전무	매우미미	미미	보통	상당	매우상당	전무	매우미미	미미	보통	상당	매우상당									
1	중앙부처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2	중앙부처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3	중앙부처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광역시도			
4	중앙부처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기초자치단체			
5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6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광역시도			
7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기초자치단체			
8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기초자치단체			
9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광역시도			
10	광역시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기초자치단체			

IV.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배문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배문2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배문3 귀하의 최종학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교 졸업 ③ 석사 수료
④ 석사 졸업 ⑤ 박사 수료 ⑥ 박사 졸업

배문4 귀하의 소속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여성가족부 ② 광역시 청소년담당부서 ③ 기초자치단체 청소년담당부서
④ 청소년활동진흥원 ⑤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⑦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배문5 귀하의 청소년 관련 업무 관련 경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6개월 이내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1년 6개월 미만
④ 1년 6개월 이상 ~ 2년 미만 ⑤ 2년 이상 ~ 2년 6개월 미만 ⑥ 2년 6개월 이상 ~ 3년 미만
⑦ 3년 이상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심층면접조사 설문지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심층면접조사

○ 조사목적 및 안내

- 이 조사는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에 대하여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을 가진 청소년정책 및 현장 관련 학계, 행정계,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 형태로 진행되는 심층면접 조사입니다.
- 본 연구에 사용하는 ‘증거기반 정책’은 정책(예산)의 수립·집행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evidence)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라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 응답한 내용 및 응답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만 조사의 내용 분석을 위해 녹음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인터뷰 진행은 약 1시간 ~ 1시간 30분 내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무총리실과 정책 연구지원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운숙 연구위원

044) 415-2218

○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최종학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교 졸업 ③ 석사 수료
④ 석사 졸업 ⑤ 박사 수료 ⑥ 박사 졸업

3 귀하의 소속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계
② 행정계(여성가족부, 통계청 등, 광역시 청소년담당부서, 기초자치단체 청소년담당부서 공무원)
③ 현장(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시설 등)

4 귀하의 청소년 관련 업무 관련 경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6개월 이내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1년 6개월 미만
④ 1년 6개월 이상 ~ 2년 미만 ⑤ 2년 이상 ~ 2년 6개월 미만
⑥ 2년 6개월 이상 ~ 3년 미만 ⑦ 3년 이상

※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1

최근 1년 이내에 정책 기획¹⁾, 정책 집행²⁾, 정책 평가³⁾와 관련하여 정책단계별로 통계활용 경험에 대해 아래 예시의 아동·청소년 승인 통계 목록을 참고해보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1-1) 활용자료 :
- 1-2) 활용이유 :
- 1-3) 자료수집방법 :
- 1-4) 활용효과 :
- 1-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1-6) 활용한 자료가 없으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시) 아동·청소년 승인 통계 목록

아동승인통계		청소년승인통계
요보호아동 현황보고	평생교육통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조사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특수교육현황조사	청소년상담지원현황
아동종합실태조사	국가영재교육통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및 중사자 현황보고	교육기본통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진로교육현황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청년패널조사
한국교육종단조사(패널)	특수교육실태조사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1) 정책기획: 사회문제 인지, 정책목표 설정, 대안답색 및 비교평가

2) 정책집행: 집행지침 작성(집행경도 및 집행방법 비교), 자원확보와 배분(논리근거 확보), 집행 결과와 평가

3) 정책평가: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내용, 평가방식

문2

귀하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필요한 통계를 입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고르시고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 관련 국책연구원에 요청
- 2) 통계청 및 소속기관, 관련 연구원 등의 사이트를 통해 자료수집
- 3) 관련 통계보고서를 확보하여 활용

문3

연구 및 업무추진 시 청소년 통계 중 주로 사용하는 행정자료, 공공 조사 자료, 민간 조사 자료를 각각 3개 이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1) 행정자료 :

3-2) 공공 조사 자료 :

3-3) 민간 조사 자료 :

(작성을 위한 예시)

분류	통계 예시
행정자료	아동·청소년·청년 인구, 전·출입 인구
공공 조사 자료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여성가족부), 청소년 활동 실태조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위기청소년 실태조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민간 조사 자료	청소년 폭력 실태조사(청매단), 어린이·청소년 행복자수(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발전연구소), 한국 아동 삶의 질 자수 연구(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문4

4-1) 청소년 통계가 정책기획,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근거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활용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2)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5

청소년 통계 및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전문기관 간의 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6

증거기반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안으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1)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기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① 정부부처의 역할 :

② 정책연구원의 역할 :

6-2)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7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시설은 현재 정치적 의사결정과 전문가 자문에 의존하는 의견기반정책수립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8

청소년 증거기반 정책 활용의 구체적인 우수 사례와 실패 사례를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사례 :
- 국외 사례 :

문9

한국의 상황에서 증거기반 정책 수립의 한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10

청소년 증거기반 정책 수립의 발전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비질문)

문1

청소년 증거기반 정책 수립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2

청소년 증거기반 정책 수립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BSTRACT

The existing studies of the management of youth-related statistics were primarily centered on collecting and managing the lists of the statistics produced rather than focusing on policy aspects for decision-making and responding to social changes. Although these studie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youth-related statistics where there was absolute deficiency in the quantity of state-approved statistics, they were far from statistical management that would allow for evidence-based youth policy developmen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statistical management system that escapes the existing manner of simple statistical list collection in youth-related statistical management, which is to be used by policymakers for evidence-based policy development, decision-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by ensuring scientific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Given the difficulty in making practical recommendations because of the varying definitions of “youth” that range from children and juveniles to young adults, the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youth-related statistics produc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review of the preceding studies showed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velopment of statistics related to children, juveniles, and young adults for evidence-based policy development include ① evidence from scientific research, ② policymakers’

expertise, ③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of the policy, ④ and decisions made by organizations the policymakers work for. This was followed by a survey of 694 people including public officials at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s the ministry in charge of youth policy, officials in charge of youth policy in metropolitan cities and municipalities, public agencies related to youth policy unde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xperts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staff working at youth facilities.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subjected to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most urgent prerequisite for the development of evidence-based policy was to improve the utility of data from youth-related statistics for policymakers. The most eminent problem i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at plans state-level youth policy and youth facilities responsible for street-level policy implementation was the lack of bottom-up decision-making. Other problems observed included poor timeliness of youth-related statistics and the lack of support from professional organizations to use the statistics produced.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uthors made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① improve the ability of youth policy officials to use statistical data, ② strengthen foundations for bottom-up decision-making to develop better evidence-based policy, ③ ensure the timeliness of youth-related statistics to improve the ability to respond to current issues, ④ vitalize the production of administrative-district-based statistical data, ⑤ set a new exclusive organization withi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o

provide professional support for the use of statistical data, and ⑥ develop statistics on youth and young adults outside the school.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8-R01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 이경상·이창호·김민
- 18-R02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백혜정·김은정
- 18-R02-1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희진·백혜정
- 18-R03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 최정원·강경균·강소영·김혁
- 18-R04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 황여정·김승경
- 18-R05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지경·이윤주
- 18-R0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6-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6-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7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 임희진·문호영·정정호
- 18-R07-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문호영
- 18-R08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김지연·이유진·정소연·박선영
- 18-R08-1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지연·정소연
- 18-R09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Ⅰ / 정은주·김정숙
- 18-R10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 최용환·성윤숙·박상현
- 18-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Ⅵ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 / 오해섭·최인재·염유식
- 18-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 최창욱·황세영·유민상·이민희·김진호

- 18-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황세영·유민상
- 18-R13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IX : 사업보고서 / 하형석·이종원·정은진·김성은·한지형
- 18-R14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총괄보고서 / 양계민·황진구·연보라·정윤미
- 18-R14-1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신규패널설계보고서 / 양계민
- 18-R14-2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V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모상현·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8-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V : IEA ICCS 2016 -
ICCS 결과 보고서 / 장근영 (자체번호 18-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V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김태준·홍영란·김미란·김홍민 (자체번호 18-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모델 개발연구 I :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윤철경·사정아·유성렬·이동훈 (자체번호 18-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
조아미·임정아·이지연·김남은 (자체번호 18-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
김기현·배상률·성재민 (자체번호 18-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
해외사례 조사 / 채창균·양정승·김민경·송선혜 (자체번호 18-R17-1)

수 시 과 제

- 18-R18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 김정숙·연보라
- 18-R19 청소년우대정책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송태진
- 18-R20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방안 :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희진

- 18-R21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 이경상·김승혜
- 18-R22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 유민상
- 18-R2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 최창욱·김기현·김인규
- 18-R24 청소년 통일익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 이창호
- 18-R25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 이창호

수 탁 과 제

- 18-R2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성과분석 / 김이성·오해섭·윤철경·정윤미
- 18-R27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모상현·정은주·이유진
- 18-R2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서정아·박선영
- 18-R29 제3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연·백혜정
- 18-R30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 18-R31 성남시청소년재단 제3차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수립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 18-R31-1 2018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 18-R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 / 배상률·이경상·임지연
- 18-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8 / 김희진·황진구·임희진·정윤미·정선옥
- 18-R34 2018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개편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 / 최창욱·장근영
- 18-R35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 18-R35-1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통계결과표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 18-R36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직무분석 및 운용 개선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
- 18-R37 내일이룸학교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 김기현·김태성
- 18-R38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8-R38-1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가이드북 / 강경균
- 18-R39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 18-R39-1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요약본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 18-R40 20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 18-R41 지역사회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연구 / 이윤주·오해섭·백승주·성지은·강지원·탁현우
- 18-R4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2-1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교육과정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2-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가이드북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3 아동·청소년의 적정 등급 게임물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 / 배상률
- 18-R44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 김기현·이윤주·최정원·유설희
- 18-R45 입법 상 연령 기준과 정책 연계성을 확보를 위한 연구 / 김기현·하형석·유민상·조성호
- 18-R46 금천구 청년정책 연구 / 이윤주·문호영
- 18-R47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연구 / 김지연
- 18-R48 미래인개발과 교육혁신 / 장근영
- 18-R49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Ⅱ -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및 평가 / 김정숙·황여정
- 18-R50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 연구(중등용) / 황세영·한지형
- 18-R50-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 꿈지락(중등용) / 황세영·한지형
- 18-R5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인증기준 및 성과평가 방안 연구 / 김성기·정제영
- 18-R52 2018년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사업 모니터링Ⅰ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 및 기관 모니터링 결과 / 김소영·오해섭·윤철경·임하린·윤혜지
- 18-R53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실태조사 연구 / 박지영·서보람·윤철경·양수빈·이지혜
- 18-R54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이종태·박상진·하태욱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8-S01 청소년 범죄의 이해와 대응방안(4/4)
- 18-S02 2018 제1차 WARDY 세미나 - Korean American Identity & the LA Riots(1/22)
- 18-S03 2018 제2차 WARDY 세미나 - 재외동포청소년 한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어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1/23)

- 18-S04 제1차 NYPI Lunch Bag Seminar - National Youth policy as practiced in helping nigerian youth to move forward(1/29)
- 18-S05 제3차 WARDY 세미나 - 인터넷시대의 부모와 자녀관계 및 건강실태(3/5)
- 18-S06 제2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개념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2/28)
- 18-S07 제3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사회참여,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3/16)
- 18-S08 제4회 청소년정책포럼 : 저출산 시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과제(4/20)
- 18-S09 제2차 NYPI Lunch Bag Seminar - Digital disturbances in school : Experiences with restrictions on students use of mobile phones(5/4)
- 18-S10 대안학교(특성화 중·고 및 각종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원 연수(5/18)
- 18-S11 제5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토론회(5/25)
- 18-S12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안)(5/23)
- 18-S13 Inclusive Korea 2018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특별세션]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5/24)
- 18-S14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지원기관 모니터링 워크숍(6/5)
- 18-S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을 위한 1차 워크숍(6/1)
- 18-S16 201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정책 발전 방향(6/15)
- 18-S17 제6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사회공헌활동 '기업-청소년NPO-학교-정부의 다자간 협력방안 모색'(6/15)
- 18-S18 제4차 WARDY 세미나 - 몽골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투표의향(6/18)
- 18-S19 2018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업무 담당자 워크숍(7/5~6)
- 18-S20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필진 워크숍(6/29)
- 18-S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9주년 세미나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어떻게 할까요?(7/18)
- 18-S22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8/3)
- 18-S23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초등)(8/1)
- 18-S24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중등)(8/2)
- 18-S25 제7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통일인식 함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8/17)

- 18-S26 제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해외의 소년 범죄 대응 전략과 시사점(8/24)
- 18-S27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업무담당자 워크숍(9/7)
- 18-S28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초등)(9/28~29)
- 18-S29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중등)(10/5~6)
- 18-S30 2018년 교육과정기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활용방안 교사연수(10/1~2)
- 18-S31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워크숍(10/2)
- 18-S32 제9회 청소년정책포럼 :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활동정책의 길찾기(9/28)
- 18-S33 제10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개편 및 기능개선 방향(11/16)
- 18-S34 제11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8 포용사회 조성을 위한 진로교육활성화 포럼」(11/19)
- 18-S35 제12회 청소년정책포럼 :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모색(12/12)
- 18-S36 2018 학업중단예방 국제포럼 - 학업중단예방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 학교 안과 밖의 소통과 연계(11/26)
- 18-S37 지역사회 협력망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모델 개발(12/10)
- 18-S38 국회 정책 토론회 : 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 방안(12/1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8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제8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3호(통권 제9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4호(통권 제91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5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례조사 및 특성화 요인 분석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6호 :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7호 :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8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9호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0호 :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1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2호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3호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4호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5호 : 청소년의 통일외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6호 : 단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포용적 교육사회를 실현하려면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7호 : 청소년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 및 시사점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8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I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9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운영 모형 개발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0호 :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1호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추진 현황 및 정책 기여

NYPI Bluenote 통계 39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V

NYPI Bluenote 통계 40호 : 다문화청소년 발달 추이 분석-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통계 41호 :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42호 :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43호 :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조사

NYPI Bluenote 통계 44호 : 제2차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연구(ICCS 2016) 결과

NYPI Bluenote 통계 45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유지조사

연구보고 18-R10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인 쇄 2018년 12월 23일

발 행 2018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휘문인쇄 전화 1661-7576 대표 김점순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03-2 93330



연구보고 18-R10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